



2017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Annual Report



+
더 행복한 사회,
더 신뢰받는 연구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의
내일을 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71년 가족계획연구원으로 설립된 후 지난 50년 가까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보장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7년에는 사회보장정책의 국가 비전 선도와 국가 정책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미래 사회를 대비한 선제적 기초보장 설계,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최적의 서비스 수급 여건 마련,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상별 심층 연구 및 정책 방향 제시,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발전 사회 구현, 전략적인 사회보장재정 운영 방안과 평가체계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7년 한 해 동안 연구보고서 68편과 정책보고서 126편을 집필·발간하였습니다. 총 194편의 연구를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대안을 찾고, 보건의료와 사회보장 부문의 국정과제를

2018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홍 식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지원하였으며, 정책 집행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에도 중점을 두어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활동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여 앞으로의 연구활동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7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차보고서에는 2017년의 연구 목표와 운영 방향, 연구사업 등의 국정과제 관련 주요 성과들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국제회의, 정책토론회, 학술행사 등의 주요 행사와 정기간행물 발간 등 지난 1년간 연구원이 수행한 주요 연구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포용복지 국가 구축에 일조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사회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미래를 견인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 정책의 비전을 마련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부응하는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활동과 발전을 지원해 주신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드리며, 협동연구에 협조해 주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성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차 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본 연구원의 연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Contents



발간사	02
KIHASA 2017 VIEW	08

01 KIHASA 현황

01. 설립 목적 / 연력 / 주요 기능	24
02. 조직도 / 인원 현황	25
03. 비전 및 경영 목표 / 추진 계획	26
04. 조직별 주요 업무	28

02 2017년 연구 사업

01. 2017년도 사업 목표	40
02. 2017년도 연구 사업 운영 방향	40
03. 2017년도 중점 추진 과제	42

03 2017년 연구 성과

0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시스템 접근을 통한 보건의료재정 분석 및 전망	48
보건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근거 생산과 정책 개발	50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 - 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II)	54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통계로 본 건강 불평등	56
2015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60
2017년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 (세부1) 미래예측 방법의 적용과 활용 방안	64

02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II) - 시범적용 및 활용방안	70
지역사회 기반 노인 친화적 통합의료서비스 제공모형	73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	77
산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79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현황과 개선 과제	82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방안	84
2017년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세부2) 건강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모형 적용 연구	87
장애인의 건강한 삶 정착을 위한 건강권 증진 방안 연구	90

03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II)	98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시간 사용과 정책과제	101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104
가구의 소득·소비·조세구조와 정책 과제	108
2017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112
소득보장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116
기본소득기반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119
근로빈곤층의 부채에 대한 질적연구: 부채발생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122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coordination mechanism) 개선 방안 연구	125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복지환경의 변화와 대안적 복지제도 연구	128
사회보장제도 성과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132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공공부조 제도(소득 보장)를 중심으로	13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136
2017년 빈곤통계연보	140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143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145
포용적 복지 철학과 정책방향	148

04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협동조합을 통한 청년고용 창출모델 연구	152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 전달체계 연구(I):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154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정책 기능 및 재정제도 재정립 방안	157
발달장애인 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160

Contents



05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건강 현황과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모형	164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질 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 - 환자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167
정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70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I)	172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175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177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 방안	179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182
고령친화산업 수요 전망 및 인력 수요 추계 연구	185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 건강 수준과 건강 노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비교 연구	187

06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190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19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194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과제	198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202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205
배우자 간 사회·경제적 격차 변화와 저출산 대응 방안	209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12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	215
고등교육이 출산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와 메커니즘 연구: Regression Kink 연구 설계를 통한 통계적 검정	219
인구영향평가체계 도입 평가방법론에 대한 연구	221

07 한반도 사회보장의 구상과 사회통합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사회보장제도-통합기 단일체제	226
통일 대비 복지육구 조사	233
동독 사회보장제도: 역사와 변화	238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V):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242

08 선제적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정보통계 분야 근거 생산·관리

복지재정·성과관리 체계 연구	248
한국복지패널의 진단과 향후 개선 과제	251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사회보장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형 연구	254
2017년 보건복지통계정보통합 관리 및 운영	256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연구	259
2017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262

04 2017년 연구 활동

01. 2017년 주요행사	266
02. 정기간행물	274

05 2018년 연구 사업

01. 2018년도 사업 목표	288
02. 2018년도 연구사업 운영 방향	288
03. 2018년도 사업개요	290

06 부록

01. 2017년도 수행 연구사업 현황	300
02. 도서관	314
03. KIHASA 웹사이트	316
04. 간행물 회원제 안내	318

KIHASA 2017 VIEW



	국제회의	토론회/세미나/학술대회	MOU	포럼/원내행사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사회보장 세미나(01.18) • 고령사회포럼(01.19)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과 대응(0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사회보장 세미나(02.14) • 통일사회보장 세미나(02.21) • 인구포럼(02.24)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03.08) • 고령친화형 식품의 제도적 시스템 구축 및 경제·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국회토론회(03.16)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건강 현황과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제공 모형 포럼(03.23) • 한국노년학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주최 정책세미나(03.24) • 아동빈곤포럼(0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사회보장 세미나(03.14) • 세종통일연합포럼(03.28) • 고령사회포럼(03.29)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시스템 혁신 성과 평가 방안에 관한 공동세미나(04.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복지전달 체계 포럼(04.21)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건강 현황과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제공 모형 포럼(04.26) •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설명회(0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사회보장 세미나(04.04) • 기초보장 현장모니터링 포럼(04.18) • 사회적기업 포럼(04.18)
5월 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05.19) • 2017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0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사회포럼(05.10) • 사회통합포럼(05.19) • 사회적기업 포럼(05.23)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시프트(Senior Shift) 시대의 고령소비자 정책 한-일 국제 세미나 (06.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기관 공동 전시회(06.12) • 2017년 제16차 Korea and the World Economy 국제학술대회(06.29~30) • 2017년 한국재정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0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사회보장 세미나(06.15) • 사회적기업 포럼(06.27) • 사회보장 모니터링 포럼(0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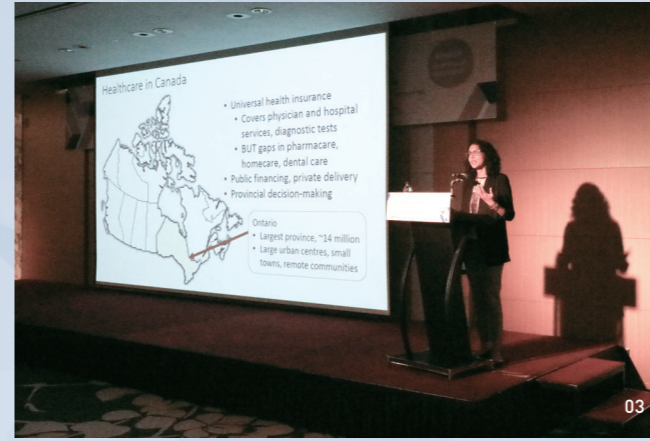
	국제회의	토론회/세미나/학술대회	MOU	포럼/원내행사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사회정책연구 컨퍼런스(07.10) • 새정부 보건복지정책 기초강연 세미나(07.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포럼(07.11) • 고령사회포럼(07.11) • 사회적기업 포럼(07.25)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한일 공동 워크숍 - 한일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보호제도 (08.21/08.23) • 노인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와 노쇠 관리에 관한 국제심포지엄(0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료패널 데이터 설명회(0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통일연합포럼(08.03)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 (09.08) • 제10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0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포럼(09.06) • 사회보장 모니터링 포럼(09.27)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복지패널(KOWEPS)과 일본가구 패널(JHPS/KHPS) 국제학술세미나 (10.19) • 2017 국제 인구 컨퍼런스: 고령화 시대 저출산 문제의 도전과 대응 (10.19~20) •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제와 성과 측정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10.26) • 유럽의 가족정책과 출산: 한국에의 시사점(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통일보건의료학회 추계학술대회(10.13) • 2017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10.13~14) •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10.13~14)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7 추계학술대회 (10.20~21) • 의·한의 이원화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포럼(10.26) • 2017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10.27~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연구재단 (1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보장 현장모니터링 포럼(10.27) • 인구포럼(10.27)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KIHASA-EWC 컨퍼런스 및 워크숍: 저출산, 노동시장 및 가족 간 상호작용과 정책적 함의 (11.19~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11.03) • 2017 한국노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11.03) • 2017 IAFICO Global Forum for Financial Consumers(11.03~11.04) •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연구 공청회(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요크대학교 (1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보장 현장모니터링 포럼(11.08)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한국복지경영학회 동계 학술대회(12.05) • 2017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치매노인을 위한 공적 책임의 강화(12.08) •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12.14)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 대토론회(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포럼(12.13) • 인구포럼(12.19) • 기초보장 현장모니터링 포럼(12.22)

국제회의



01

01 한국복지패널(KOWEPS)과 일본가구패널(JHPS/KHPS) 국제학술회의(10.19.)



03

03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제와 성과
측정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10.26.)



04

04 노인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와 노쇠 관리에 관한
국제심포지엄(8.30.)

02 유럽의 가족정책과 출산_한국에의 시사점(10.30.)



02

05 2017 국제인구컨퍼런스(10.19.-10.20.)



05

토론회·세미나·포럼·학술대회



01 기초보장 현장모니터링 포럼(11.8.)



02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건강 현황과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제공 모형 포럼(3.23.)



05 정책연구기관 공동 전시회: 대한민국 정책연구, 한눈에 보다(6.12.)



06 정책연구기관 공동 전시회: 대한민국 정책연구, 한눈에 보다(6.12.)



07 고령사회포럼(7.11.)



03 한국노년학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주최 정책세미나(3.24.)



04 제10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9.15.)



09 2017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치매노인을 위한 공적 책임의 강화(12.8.)



08 2017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9.8.)

토론회·세미나·포럼·학술대회



01

01 사회통합포럼(12.13.)



02

02 제9회 한국의료매널 학술대회-개회 및 시상식(12. 14.)



04

0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 대토론회(12. 28.)



03

03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연구 공청회(11.27)



05

05 제5차 세종통일합포럼(8.3.)



06

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 대토론회(12. 28.)

토론회·세미나·포럼·학술대회



0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 대토론회(12. 28.)



04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연구 공청회(11.27.)



05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개회 및 시상식(12. 14.)
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 대토론회(12. 28.)



02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개회 및 시상식(12. 14.)



03 제5차 세종통일연합포럼(8.3.)



07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개회 및 시상식(12. 14.)



08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개회 및 시상식(12. 14.)
09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개회 및 시상식(12. 14.)



토론회·세미나·포럼·학술대회



01

01 제10회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설명회(4. 28.)

02 통일사회보장 세미나(6.15.)



02

03 제14차 인구포럼(1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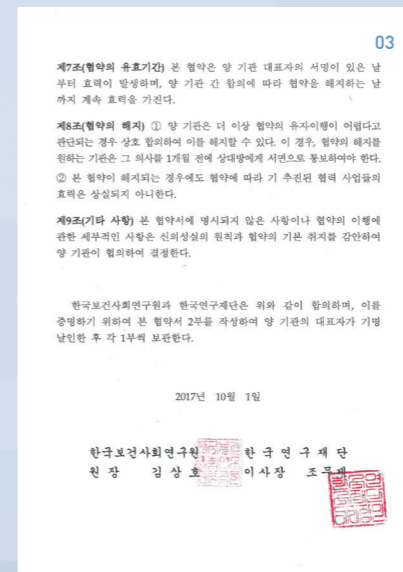
03

M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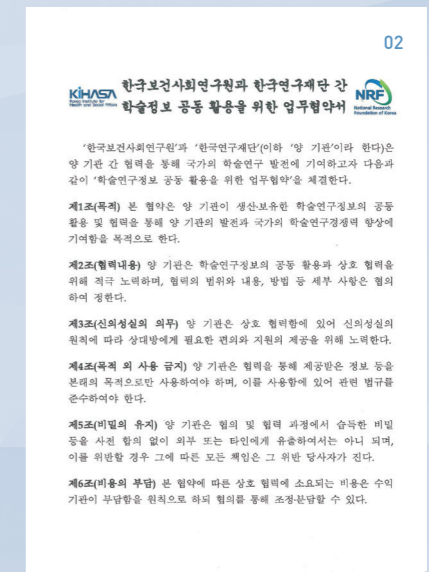


01

- 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요크대학교 업무협약(11.24.)
- 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연구재단 업무협약(10.1.)_페이지_1
- 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연구재단 업무협약(10.1.)_페이지_2



03



02

원내활동



01

01 1사1촌 농촌봉사활동(5.12.)



02

02 춘계 연찬회(4.6.)



03

03 세종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사회보장교육(10.12.)



04

0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7.16.)



05

05 문화체육관광상 수상(11.23.)



06

06 전 직원 한마음 불링대회(5.23.)

07 세종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사회보장교육(10.12.)



07

0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ANNUAL REPORT

KIHASA 현황

KiHASA

-
01. 설립 목적 / 연혁 / 주요 기능
 02. 조직도 / 인원 현황
 03. 비전 및 경영 목표 / 추진 계획
 04. 조직별 주요 업무
-

설립 목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 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과 이해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보건의료 사회복지지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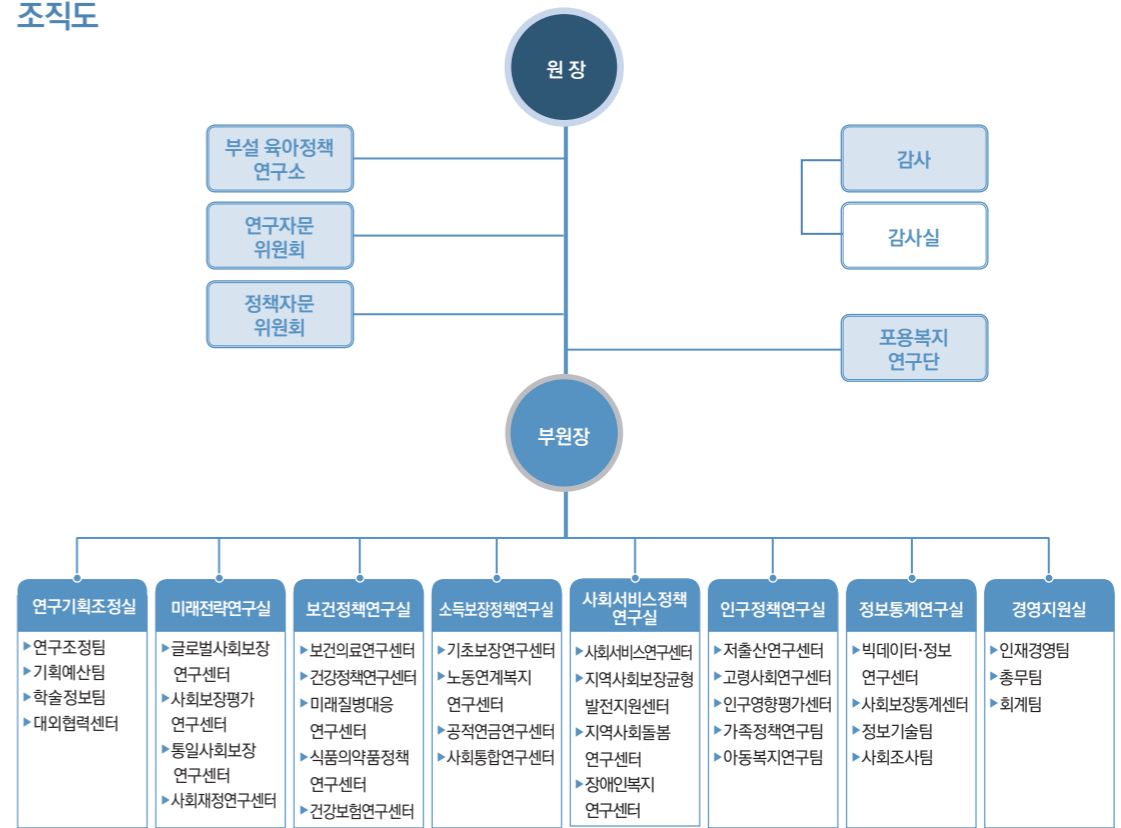
연혁

- 1971. 07. 01. 가족계획연구원 설립(대통령령 제5198호 및 법률 제2270호)
- 1976. 04. 19.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설립(법률 제2857호)
- 1981. 07. 01. 한국보건개발연구원과 가족계획연구원을 통합하여 한국인구보건연구원으로 발족(법률 제3417호)
- 1989. 12. 30.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 기능을 통합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개칭(법률 제4181호)
- 1999. 01. 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무조정실로 이관(법률 제5733호)

주요 기능

- ▶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와 정책 개발
- ▶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수립과 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 생산
- ▶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부의 주요 정책위원회 지원
- ▶ 보건의료·사회복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 ▶ 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기술·정보 교류, 공동 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 ▶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공익성 있는 연구용역 수탁
- ▶ 보건의료·사회복지에 관한 교육, 연수와 홍보
- ▶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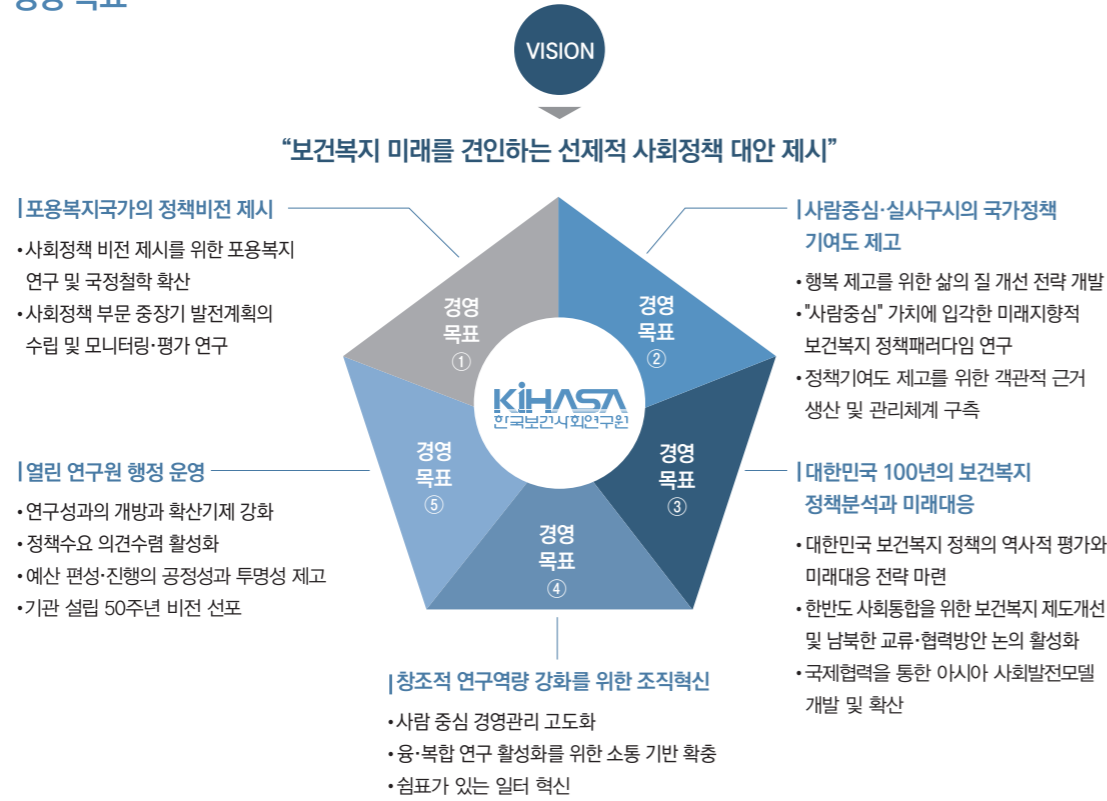


인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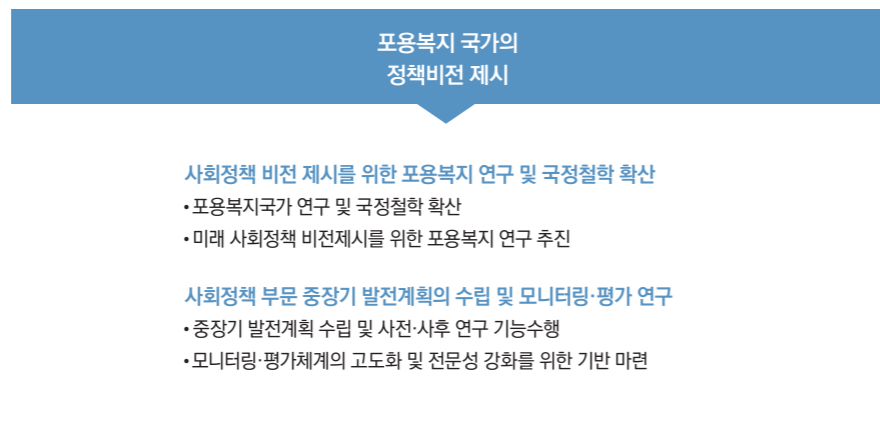
구분	현원	계
임원	1	1
연구직	원장	1
	선임연구위원	11
	연구위원	48
	부연구위원	24
전문직	전문연구원	25
	책임전문원	4
	선임전문원	4
행정직	전문원	2
	책임행정원	8
	선임행정원	5
	행정원	7
계	139	139

(2017년 7월 현재 정규직 기준.)

비전 및 경영 목표



추진 계획



사람중심·실사구시의 국가정책 기여도 제고

행복 제고를 위한 삶의 질 개선 전략 개발

- 행복·사회통합·삶의 질에 대한 종합 연구 실시로 행복 연구의 허브기관으로 위상 정립
- 사회통합·국민의 행복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실용적인 정책 대안 수립 지원

“사람중심”가치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보건복지 정책패러다임 연구

- 모두가 건강한 사회와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 (비용↓, 질↑)로의 전환 모색
- 저출산·고령화·돌봄 등에 대한 사람 중심의 체감도 높은 대응 정책과 수평적·수직적 사회보장제도 설계 지원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한 객관적 근거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

- 건강한 공론장(public sphere)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체계적 근거자료 생산
- 보건·사회정책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자료 정보 구축 및 대외 공개

대한민국 100년의 보건복지 정책분석과 미래대응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의 역사적 평가와 미래대응 전략 마련

- 대한민국 100년 보건복지정책의 역사적 평가와 전망
- 초고령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한반도 사회통합을 위한 보건복지 제도개선 및 남북한 교류·협력방안 논의 활성화

- 남북 보건복지 격차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사회통합 방안 마련
- 사회발전 모형을 활용하여 분야별 교류·협력의 효율성 제고

국제협력을 통한 아시아 사회발전 모델 개발 및 확산

- 사회보장 국제협동연구로 아시아 동반자국 사회발전 모델 도출
- 국제사회보장 정책네트워크 구축과 연구성과 확산

창조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혁신

사람 중심 경영관리 고도화

- 통합적 경력개발제도 구축 및 구성원 권익 신장
- 성과관리제도 합리적 재설계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소통 기반 확충

- 참여형 융합연구 운영체계 확립
- 국내외 전문가 연결 플랫폼 구축·운영
- 조직내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실험가 있는 일터 혁신

- 가족친화적 일·가정 양립제도의 이용확산
- 재창조를 위한 연구휴직·연수훈련 제도 활성화

열린 연구원 행정 운영

연구성과의 개방과 확산기제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연구성과 개방을 통한 성과 확산 강화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제공 기반 고도화

정책수요 의견수렴 활성화

-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연구 과제 개발
-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

예산 편성·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구성원 참여 예산제 도입
-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열린 행정 운영

기관 설립 50주년 비전 선포

- 2021 비전 선언서 발표 및 ‘KIHASA e-역사관’ 개관

조직별 주요 업무

미래전략
연구실

미래전략연구실은 글로벌사회보장연구센터, 사회보장평가연구센터, 통일사회보장연구센터, 사회재정연구센터를 두고 있으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글로벌사회보장연구센터

- 사회보장 미래 전략 연구
- 사회보장 관련 글로벌 지역 연구
-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 연구
- 국제사회보장리뷰 발간
- 각국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 구축
- 국제협력사업 연구 및 지원
- ODA 사업 설계 및 평가

■ 사회보장평가연구센터

- 사회보장제도 평가 설계
- 사회보장제도 평가 DB 구축
- 사회보장 기본계획 평가 및 제도 평가
- 평가 기반 사회보장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사회보장 성과관리 방안 연구
- 사회보장재정 지출 및 비용 분석
- 사회보장 규제 연구

■ 통일사회보장연구센터

- 남북 보건복지 교류 협력 방안 연구
- 남북 사회보장제도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
- 북한이탈주민 실태 및 정착 지원 방안 연구
- 통일 시나리오별 사회보장 대안 평가와 예산 추계
- 북한 사회보장 통계 DB 구축
- 통일 사회보장 관련 외국 사례 DB 구축

■ 사회재정연구센터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개발 연구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재정추계센터 기능 수행
- 사회보장재정 추계 및 평가 연구
- 사회보장 지출 영향평가 및 자원 조달 방안 연구
- 국가-지자체 간 사회보장재정 분담 방안 연구
- 주요국의 사회재정 동향 분석

보건정책
연구실

보건정책연구실은 보건의료연구센터, 건강정책연구센터,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 건강보험연구센터를 두고 있으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보건의료연구센터

- 보건의료 공급체계 및 일차의료 관련 연구
- 보건의료 자원에 관한 연구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
- 의료산업 투자 활성화 연구
- 환자안전 등 국민건강안전 관련 연구
-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 건강정책연구센터

- 건강증진정책 및 사업에 관한 연구
- 건강증진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평가
-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지역사회 보건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사회정신건강 실태와 발생 원인 조사·분석 및 대책 연구
-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 기타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

■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

- 감염병 감시와 관리체계, 신종재출현감염병 대비, 공중보건위기 대응 등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미래질병 위험 요인에 관한 연구

- 예방접종, 백신 수급 등에 관한 연구
- 사람·동물·환경 등을 연계하여 최적의 건강을 추구하는 원헬스(one health) 관련 다학제적 연구
- 미래질병대응 관련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기타 미래질병대응 관련 연구

■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

- 식품, 건강기능식품의 위생과 안전정책에 관한 연구
- 식품산업에 관한 정책 연구
- 의약품의 수요, 공급, 가격, 시장에 관한 정책 연구
- 의약품의 안전관리 및 규제에 관한 정책 연구
- 의료기술·의료기기·화장품 등에 관한 정책 연구
- 기타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정책에 관한 연구

■ 건강보험연구센터

- 건강보험제도 평가 및 개선 연구
- 의료급여제도 평가 및 개선 연구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연구
- 건강보험 자원 확보 및 재정 효율화 연구
- 의료기관 적정 보상체계에 관한 연구
- 기타 건강보장제도 관련 연구

소득보장정책 연구실

소득보장정책연구실은 기초보장연구센터, 노동연계복지연구센터, 공적연금연구 센터, 사회통합연구센터를 두고 있으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기초보장연구센터

- 공공부조제도 등 국민의 기본적 소득보장 관련 연구
- 기타 취약집단 대상 소득보장제도 연구
- 빈곤 및 소득불평등 관련 연구
- 현금 및 현물의 효과적 지원 방안 연구
- 한국복지패널 조사 및 관련 연구

■ 노동연계복지연구센터

- 경제활동 연령대의 저소득층 생활 및 취업 실태 연구
- 자활지원제도 발전 방향 연구
- 경제활동 가능 저소득층 대상 소득보장 및 취업 지원 정책 연구
-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 기타 복지-고용 연계 방안 연구

■ 공적연금연구센터

- 공적연금 발전 방안 연구
- 취약계층을 위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중장기 환경 변화에 대비한 연금재정 및 기금 운용 정책 연구
- 기타 비경제활동 집단에 대한 소득보장정책 연구

■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통합·갈등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 사회통합·갈등 지표 개발 연구
- 사회통합 제고와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 연구
- 사회통합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회서비스정책 연구실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은 사회서비스연구센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지역사회돌봄연구센터, 장애인복지연구센터를 두고 있으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사회서비스연구센터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조사 및 제도 운영 연구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연구
-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지원 정책 연구
- 사회서비스 부문 제3섹터, 사회적 경제 및 산업 육성 연구
- 사회서비스 품질 및 평가 연구
- 기타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 지자체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행 지원 및 분석·평가
-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측정 및 통계 수집·분석
- 공공·민간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연구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
- 지역사회보장의 거버넌스 연구
- 기타 지역사회보장 발전 관련 연구

■ 지역사회돌봄연구센터

-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 연구
- 지역사회 돌봄 수요·공급 분석 연구
- 지역사회 돌봄 자원 및 기반 조성 연구
- 지역사회 돌봄 관련 서비스 거버넌스 연구
- 기타 지역사회돌봄 서비스 관련 연구

■ 장애인복지연구센터

- 장애인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평가
- 장애인 관련 정책 평가 및 제도 연구
- 생애주기별 장애인 정책 연구
- 여성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정책 연구
- 장애인 정책 국제 비교 연구
- 기타 장애인 자립 및 권익 보호 관련 연구

인구정책
연구실

인구정책연구실은 저출산연구센터, 고령사회연구센터, 인구영향평가센터, 가족정책연구센터, 아동복지연구센터를 두고 있으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저출산연구센터

- 저출산 관련 국가 정책·제도·전략 연구
- 저출산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와 소관 정부 부처 업무 협력
- 출산력 및 혼인력 관련 실태조사와 분석
- 생애주기별 맞춤형 저출산 대책 연구
- 인구 및 저출산정책 관련 국제 비교 연구
- 인구 및 저출산 관련 다학제적 연구 지원
- 인구변동과 관련된 가족정책 및 제도 연구

■ 고령사회연구센터

- 고령사회 관련 국가 정책·제도·전략 연구(장기 요양제도 개발 및 개선 연구 포함)
- 고령사회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와 소관 정부 부처 업무 협력
- 고령사회 및 장기요양 관련 기초·실태조사와 통계 분석
- 고령사회 관련 지표 개발
- 고령사회와 장기요양 관련 국제 비교 연구
- 인구·고령사회 관련 다학제적 연구 지원
- 고령사회정책과 장기요양제도 평가 연구

■ 인구영향평가센터

- 인구·가구 추계 및 인구 관련 기초·가공 통계 생산
- 인구구조와 분포의 변동 및 추이 분석
- 인구변동(출산·이동·혼인·사망)의 내·외생적 요인과 상호 관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이론 및 실증 연구
- 인구정책과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장단기 인구 변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인구 교육·홍보 효과 평가 연구
-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 평가(법정) 및 기타 인구 관련(심층)평가 지원

■ 가족정책연구센터

- 가족 형성 및 가족 주기 관련 실태·인식조사와 분석
- 가족 다양성 관련 연구와 다양한 가족 맞춤형 전략 수립(취약·위기가족정책 연구 포함)
- 가족 친화적 문화 및 제도 연구(양성평등 가족 문화와 사회 인식 조성 연구 포함)
- 가족정책 국제 비교 연구
- 가족정책 평가 연구

■ 아동복지연구센터

- 아동정책의 수립, 계획 및 평가 연구
- 아동정책 집행체계와 인프라에 관한 연구
- 위기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연구
- 아동안전 관련 연구
- 아동 실태 및 관련 인식조사와 정책 분석

정보통계
연구실

정보통계연구실은 빅데이터·정보연구센터, 사회보장통계센터, 정보기술팀, 사회조사팀을 두고 있으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빅데이터·정보연구센터

- 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 연구
- 조사 통계의 표본 설계·품질 관리·표준화 연구
- 최신 통계분석방법론 활용을 위한 정책 연구
- 보건복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 연구
- 보건복지 정보화 전략 연구
- 보건복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구
- 보건복지와 정보기술의 융합 연구

■ 정보기술팀

- 정보화사업 기획·전략 수립·운영
- 정보보안 업무 수행
- IT 인프라 운영 및 관리
- 웹사이트 기획·운영
- 연구과제 정보화사업 지원
- 정보기술 융합 서비스 개발

■ 사회조사팀

- 조사 예산, 조사 일정 등 조사사업 계획 수립 지원
- 위탁조사원 선발 및 관리
- 면접조사 및 기타조사 실시
- 조사 사후 검증 실시
- 조사 품질 진단 및 관리
- 조사자료 에디팅 및 조사 데이터 클리닝
- 조사자료 이관 및 관리

■ 사회보장통계센터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의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회보장 관련 지표 선정 및 관리
- 신규 사회보장통계 발굴 기반 구축 및 필요 통계의 승인화
- 사회보장통계 생산 관리 방안 연구
- 사회보장통계 전문위원회 지원
- 사회보장통계 정비 등을 통한 사회정책 분석
- 국제통계(WHO, OECD, UN 등) 생산 및 국제 비교 연구

연구기획
조정실

연구기획조정실은 연구조정팀, 기획예산팀, 학술정보팀, 대외협력센터를 두고 있으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연구조정팀

- 경영목표와 경영목표 실천계획 기획·관리
- 중장기 및 단기 연구 기획
- 연구사업 조정·관리 및 평가
- 연구보고서의 발간
- 기관평가 관련 업무 총괄
- 직원 근무평정 총괄
- 영문화 작업 총괄

■ 학술정보팀

- 학술정보 구축 및 지원
- 기관 지식자산의 축적 및 저작권 관리
- 연구 성과물의 홈페이지 및 NKIS 등록
- 정기간행물의 발간
- 연구원 간행물 교열 및 연구윤리 검증
-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 기획예산팀

- 예산편성·관리 및 지출 원인 행위
- 연구용역 계약 체결 및 정산(수탁, 위탁용역)
- 각종 수입금 관리·운용(퇴직급여충당금 포함)
- 정부 부처 및 국회 등 요구 자료 대응

■ 대외협력센터

- 연구 성과의 홍보·확산
- 기관 홍보 기획 및 추진
- 언론 대응 및 대외 협력
- MOU 등 국내외 정책연구협력망 관리

경영지원실

경영지원실은 인재경영팀, 총무팀, 회계팀을 두고 있으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인재경영팀

- 인사 및 복무 관리
- 노무 관리
-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 규정 관리
- 급여 및 보수 관리

■ 회계팀

- 지출 및 회계결산 업무
- 세무 관련 업무
- 국내·외 출장 관련 업무
- 회의비 및 법인카드 관리 업무

■ 총무팀

- 구매·계약 관련 업무(연구용역계약 제외)
- 직원 복리후생 업무
- 시설 및 자산 관리
- 내부 행사 기획 및 지원
- 일반 보안업무 및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업무
- 청사 보안 및 비상계획
- 사회공헌 관련 업무
- 우편물 수발 업무

감사실

감사실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정기·복무·재무·특정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
- 일상감사 실시 및 외부감사 수감
- 청렴·반부패 및 공직 기강 확립
- 민원 및 정보공개 청구 처리
- 물품 구매·외부 위탁·공사 등 평가위원회 구성
- 공공감사 데이터 관리
- 감사 관련 제도 개선

포용복지
연구단

포용복지연구단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보건복지 관련 미래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한
 융복합 연구
- 복지국가 관련 정책 평가 및 관련 연구
- 미래 사회 대비 보건복지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 보건복지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0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ANNUAL REPORT

KiHASA

2017년 연구 사업

2017년도 사업 목표

2017년도 연구사업 운영 방향

2017년도 중점 추진 과제

2017년도
사업 목표

총괄 목표	사회보장정책의 국가 비전 선도와 국가 정책에 대한 기여도 제고
세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 - 미래 사회 대비, 선제적 기초보장 설계 -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최적의 서비스 수급 여건 마련 - 저출산·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상별 심층 연구 및 정책 방향 제시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발전 사회 구현 - 전략적 사회보장재정 운영 및 평가체계 마련

2017년도
연구 사업
운영 방향

- 보건의료체계 질 제고 및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건정책 개발**
 -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수행.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전략 개발 연구 추진.
 - 근거 중심 보건의료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 평가 및 지식확산체계 구축 연구 수행.
- 미래 사회 대비, 선제적 기초보장 설계**
 - 소득보장제도 체계화 연구 추진.
 -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시간 사용, 부채 발생 및 파급효과 분석 연구 수행.
 -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미래 변화 양상에 부합하는 복지모형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수행.
- 저출산·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심층 연구 및 정책 방향 제시**
 - **가족정책** :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따른 혼인력 변화, 청년층의 독립 및 가족 형성 패턴 변화 등 가족 구조 변화와 그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 마련.
 - **고령사회 대응 정책** :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근거 기반 정책 개발과 함께 노인 인권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장기요양** :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서비스 질 향상 및 재가 급여 확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공급체계 개편 방안 검토.
- **아동복지** :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사회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아동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증진하는 방안 검토.
- **인구정책** : 선진국 인구정책 분야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이슈를 분석함으로써 중장기 인구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방향 검토.

■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

- 성공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향후 5년(인구 보너스, demographic dividend)의 대응 전략 마련.
-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부양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현황 파악 및 정책 파급효과 등의 연구 수행.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책 당사자인 일반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논의의 장 마련.

■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최적의 서비스 수급 여건 구축

- 사회보장정책 총괄 조정 모색 및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수행.
- 장애등급제 개편과 발달장애인법 시행 등의 정책적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개편 방안 연구.
- 급속도로 진행되는 '정보화'가 야기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보건복지서비스 모색.
- 보건의료 분야, 사회복지 분야의 다년도 패널조사 및 다양한 사회조사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 기반 정책 수립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

■ 증거 기반 사회보장 평가와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 조정 지원

- 사회보장 평가 및 조정 방안 연구를 통한 성과 지향적 사회보장제도 운영 지원.
- 지식경제사회 진입 이후 산업구조 조정, 장기 고용 감소 및 자영자 증가 등 각종 사회적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보장 미래 위험 관리 틀 개발.

- 국내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 관리 기반 구축에 기여.

■ 통일 대비 보건복지제도 연구

-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안정적인고 합리적인 통합 모형과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2017년도
중점 추진 과제

경영목표	추진 과제	세부 추진 과제
미래 보건복지 정책 선도	미래지향적 핵심 역량 개발 및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별 전문 연구 역량 제고. - 통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 부문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사회보장 부문 재정지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분석 모형 개발 및 활용도 확산. -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담보하는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의 실효성 강화.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보건복지정책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복지 모델 연구. - 복지와 경제 선순환 패러다임 구축 연구. - 보건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연구.
	중장기 보건복지 계획 수립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정책 환경 예측과 어젠다 개발. - 보건복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중장기 보건복지 계획의 정책 이행력 증진.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회보장 정책 평가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책 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 - 사회보장정책 평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원내 조직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 사회보장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근거 기반 개선 방안 제시.
	국민의 합리적 복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복지 교육·홍보 인프라 구축. -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운영. - 프로그램 체계화 및 질적 수준 제고.

경영목표	추진 과제	세부 추진 과제
미래 보건복지 정책 선도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정책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와의 협력 체계 강화. - 보건복지정책위원회에 대한 지원 강화. - 정책 협력 네트워크 외연 확대.
	수요자 중심의 연구 성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통계정보 제공 인프라의 수요자 중심 고도화. - 정책당국, 민간 연구자, 현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개방과 확산으로 정책 체감도 제고. - 연구 역량의 국제화 및 연구 성과의 해외 확산 증대. - 정부 3.0의 효율적 추진.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 혁신	경영 혁신을 통한 경영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시스템 개선. -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환경 구축. - 조직 운영의 선진화를 위한 상시적인 경영 혁신.
	원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에너지가 충만한 역동적 KIHASA. - 건전한 복무 기강 확립. - 윤리경영 강화.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원 역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 강화. - 환경 친화적 경영. - 지역사회 공헌 활동 전개.

03

2017년 연구 성과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ANNUAL REPORT

KiHASA

- 0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 02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 03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04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05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 06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07 한반도 사회보장의 구상과 사회통합
- 08 선제적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정보통계 분야 근거 생산·관리

0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ANNUAL REPORT

2017년 연구 성과

0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 시스템 접근을 통한 보건의료재정 분석 및 전망
- 보건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근거 생산과 정책 개발
-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 - 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II)
-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통계로 본 건강 불평등
- 2015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 2017년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 (세부)미래예측 방법의 적용과 활용 방안

KiHASA

연구보고서
2017- 04

시스템 접근을 통한 보건의료재정 분석 및 전망

Modelling for Health Care Finance Forecasting Based on System Dynamics

연구 책임자 정영호
공동 연구자 고숙자, 송은솔

연구 목적

- 보건의료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적합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미래 보건의료 시나리오에 대한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시스템 및 재정의 동태적 모형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재정을 전망하고 보건의료재정을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변수 중 하나인 치매의 예방관리정책을 통한 재정 전망 및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연구 내용

-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를 활용하여 시스템 접근을 통한 보건의료재정을 분석하고 전망함.
 - 의료이용이 현재 수준과 동일할 경우를 가정하고 매년 단위당 비용이 2%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입원 비용의 경우 보험자부담은 2020년에 23조 300억 원으로 증가하고 법정본인부담도 5조 33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외래 비용의 경우 2020년에 보험자부담은 약 20조 3100억 원, 법정본인부담은 8조 59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장기요양의 보험자부담은 2020년에 5조 32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법정본인부담은 1조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정책 제언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치매 환자 유병인구를 전망한 결과, 현재(2015년 기준) 치매 환자 유병인구는 약 8.05%였으나, 2030년에 13.11%, 2040년에 14.77%, 2050년에는 15.8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치매로 인한 입원 비용(보험자부담+법정본인부담, 0% 증가율)은 2015년 1조 8710억 원에서 2030년에는 6조 7240억 원으로 증가하고, 장기요양 비용도 2015년 2조 6870억 원에서 2030년에 9조 4600억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치매 환자의 예방관리정책에 따른 기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 정부의 치매예방관리정책을 통해 치매 발생률을 매년 발생률의 1%만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치매 환자의 유병인구는 2020년에 95만 1000명에서 93만 4000명으로, 2030년에는 181만 7000명에서 163만 8000명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분석됨.
- 본 연구에서는 의료재정을 전망하였고, 치매를 중심으로 정책의 변화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하였으나, 다양한 정책 및 전략을 비교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의 확장이 요구됨.
- 보건의료시스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있고 복합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동태적 모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 결정 체계가 수반되어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공급·수요 계획 및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임.
-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이 필수적이며, 모형을 통해 정책 분석 및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모형 내 정책변수의 파라미터를 변화시켜 정책 대안에 대한 예상되는 효과와 영향을 평가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함.
- 더욱 현실적인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료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시급함.

연구보고서
2017- 05**보건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근거
생산과 정책 개발**Development of evidence-based health policy response to
climate change연구 책임자 채수미
공동 연구자 김대은, 오수진, 김동진, 우경숙**연구 목적****■ 이 연구는 근거와 수요에 기반한 보건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음.**

-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정의 단계별 국내 근거 분석.
- 둘째, 정책 수요자 측면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수요 평가.
- 셋째, 정책 제공자 측면에서 기후변화 정책과 사업의 제공 실태 파악.

연구 내용**■ 보건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정 단계별 근거 분석**

- 정책 과정을 정책의제 형성, 정책 형성, 정책 집행, 정책 평가의 4단계로 구분하고, 그동안 국내 보건 분야에서 축적되어 온 관련 연구들을 정책 과정의 단계별로 종합하였음.
- 분석 결과, 기온이 사망과 심뇌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여 위험의 크기를 통합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국내에서 여름철 기온의 증가는 사망과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기온이 사망과 심뇌혈관질환 이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1995년부터 총 75건이 수행됐음.
 - 수행된 연구들이 대상으로 하는 질병은 다양했는데, 40%(30건)가 감염병에 대한 연구였으며, 그중에서도 말라리아에 집중되었음.

- 그 밖에 자연재해(홍수, 태풍, 가뭄 등), 자외선, 대기오염, 매개체 생태변화, 미생물 생태변화, 정신건강 관련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1998년부터 44건이 수행됐으나 기온의 건강영향만큼 연구가 활발하지는 않았음.

■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본 연구에서 전국 20~79세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후변화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경우부터 어느 정도 아는 경우, 들어 본 적이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면 96.6%가 기후변화를 알고 있다고 했음.
- 국민들이 기후변화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목한 분야는 물 부족 문제를 제외하면 '건강'이 농축산, 국토 및 연안, 생태계, 산업보다 더 앞섰음.
 - 그런데 기후변화와 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과 같이 직접적으로 단기간에 발현되는 건강 이상에 대해 더 높은 편이었음(약 90%).
 - 기후변화가 심혈관질환이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약 60%)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았음.

■ 보건 분야 기후변화 대응 정책 현황 분석

- 2017년 보건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2가 신설됨에 따라 이른바 '기후보건영향평가'라는 이름으로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하고 평가하도록 했음.
 - 뒤이어 5월에는 보건 분야의 중앙정부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팀이 정규 부서로 전환되기도 했음.
 - 또한 최근에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음.
- 하지만 2017년 예산은 2016년 대비 64.7% 증가했음에도 7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질병관리본부 전체 예산 중에서도 0.5%로 미미한 수준이고, 보건 분야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국가 적응 대책에는 보건 분야의 우선순위 건강 리스크(문제)와 세부 추진계획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앙의 계획이 지역사회 사업수행기관에 이르는

사업 전달체계가 명확하지 않음.

- 사업 내용이 보건사업의 영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관련법과 소관부처가 보건 당국이 아닌 타 부처에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운영이 어렵기 때문임.

정책 제언

■ 보건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근거 개발 전략

- 보건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는 정책 과정 중 정책의제 형성 단계에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과학적 근거 개발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 도출되었음.
- 따라서 새롭게 정책의제화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 연구자와 보건 당국 간에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 교류는 기존의 보건 분야 주요 정책 어젠다에 대한 논의와 구분 지어 별도로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함.

■ 국민의 인식과 국가의 역할

- 아직까지는 국민의 인식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는 어렵고, 국가가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데 주도적이어야 함.
- 국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주도의 국민 인식도 조사가 실시되어야 함.
- 현시점에서 국민 인식의 개선은 특정한, 취약한 집단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함.
-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국민의 인식이 경험과 주관이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으로 정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건 분야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

- 조직의 변화가 필요함. 보건 분야의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업무에 중점을 둘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완화 정책이나 타 분야와의 공동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앙부처 간 공식적인 소통 체계가 필요함.

- 보건 분야에서 대응해야 하는 근거와 수요에 기반한 중점 영역을 발굴해야 함. 이를 위해 국가는 학계 및 전문가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되 정책적 시급성, 중요성, 시행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누락되지 않고 충분히 축적될 수 있도록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지원해야 함.
- 적응 대책 수립 절차를 체계화해야 함. 기후는 변화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건강영향 역시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도 변해야 함.
- 지역사회 적응 정책을 지원해야 함. 지역의 요구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가 보건 분야의 중점 과제와 효과적인 중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함.
- 국민과 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함. 국가는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더불어 정책 및 사업 제공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연구보고서
2017-30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 - 한국 의료 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II)

Assessment of the Innovation Outcome in the Korea Health Care System : 2017 Korea Healthcare Quality Report

연구 책임자 강희정
공동 연구자 오윤섭, 백혜연, 하승원, 김소윤, 서은원, 홍재석, 박종현, 조해근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의료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과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연구 내용

- 의료효과성 영역에서 많은 지표들이 향상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접근성, 환자안전, 효과성(질환별, 생애주기) 영역의 지표들에서 향상 속도가 빠르고, 시스템 인프라와 의료연계 영역은 악화 방향에서 정체되고 있음.
- 의료시스템의 질을 구성하는 모든 범주에서 소득계층 간, 지역 간 격차가 확인되었으며 오랜 기간 그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음.
- 의료 질 수준에서 지역 간 격차가 확인되며, 다른 지역이 2005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크게 향상된 것과 달리 전북은 질 수준이 크게 하락했음.
- 75세 이상 연령군에서 1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2005~2010년에 비해 2010~2015에 3배 수준으로 증가해 85세 이상에서는 기울기가 더욱 급격해짐. 노인 의료비 지출의 비용대비가치가 다른 군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정책 제언

- 우리나라는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다가올 비용 압박에 대해 보다 가치 있는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혁신과 성과 관리가 요구됨.
 - 향후 지출을 증가시키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시행은 가치기반 급여설계, 의료 질 평가 틀의 설계를 전제로 추진해야 할 것임.
 - 가치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 틀을 수립하여 의료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의료의 질과 가치로써 그 성과를 평가하고 방향을 점검해야 할 것임.
 - 의료 질 향상의 필수 인프라로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

연구보고서
2017-31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통계로 본 건강 불평등

Developing Health Inequalities Report and Monitoring the Status
of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Health Inequality Statistics

연구 책임자 김동진
공동 연구자 채수미, 최지희, 이정아, 김창엽, 박유경, 최영은, 김명희, 김유미, 류한소

연구 목적

■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건강불평등 현황을 측정하고 파악하는 것
에서부터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이르기까지를 다루는 중장기 연구로서, 2차 연도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건강불평등 통계와 지표 생산을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현황 및 추이를
모니터함.
 - 기존 건강불평등 지표를 재검토하여 보완하고,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영역을 확
장하기 위한 신규 지표를 개발함.
- 둘째, 건강형평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건강정책을 모니터링함.
 - 기존의 정책을 건강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1986년 발표된
오타와 헌장(Ottawa Charter)의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정신과도 일치함.

연구 내용

■ 건강불평등 현황 모니터링

- 건강지표를 인구집단별(소득, 직업, 교육), 지역별로 나누어 모니터링한 결과 다수의
지표에서 인구집단 간 건강불평등이 관측됨.
 - 이를 보면 나쁜 생활습관 보유 비율에서도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등에 따라 격차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0~64세 초졸 이하 인구집단 중 나쁜 생활습관을
3개 이상 가진 사람의 비율은 32.9%인 반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

에서는 19.6%에 불과하였음.

- 지역별로는 지역박탈 수준과 지역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지역의 박탈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박탈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 비해 회피
가능사망률이 1.4배 더 높았음.
- 청소년의 건강행태 또한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격차가 발생함.
 - 청소년 흡연율은 소득 수준이 하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17.2%), 중하
(8.9%), 상(7.3%), 중(5.4%), 중상(5.1%) 순으로 청소년 흡연율이 높았음.

■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측정 도구 개발

-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설문 개발을 위해 일반 국민의 건강불평등에 대한 인지,
건강불평등의 심각성 및 원인 개선 필요 인식도를 조사하였음.
 -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 중 67.7%가 사회계층 간,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인
식하고 있었음. 이 중 47.9%가 국내 건강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
고, 69.2%는 건강불평등이 사회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식하였음.

■ 미충족 의료불평등 측정 도구 개발

- 미충족 의료불평등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해 의료이용 단계별 미충족 의료 발생 경
험, 당시의 의료 필요, 미충족 의료가 발생한 이유, 미충족 의료 발생 유형과 정도
등을 조사하였음.
 - 조사 결과, 의료 추구 및 도달 단계에서 28.6%, 의료이용 단계에서 18.5%, 의
료이용 결과 단계에서 15.3%의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였음.

■ 건강불평등 정책 모니터링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DoH) 개념이 보건 정책 분야의 의제로 부상한 역사적
과정을 국제사회 맥락에서 검토하고, 세계보건기구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
회(WHO CSDH)의 뉴질랜드 사례 보고서를 통해 '사회지표 체계'의 잠재력을 살
펴봄.
 - 다른 건강증진 영역에 비해 불평등과 관련한 역학적 연구 및 중재에 대한 근거가 비

교적 방대하고 잘 확립되어 있는 담배규제정책을 사례로 정책 모니터링의 가능성을 검토함.

정책 제언

■ 건강불평등 현황 모니터링

- 국민의 건강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건강불평등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함.
 - 건강불평등은 그 자체로서 불공평하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노력에 따라 피하거나 줄일 수 있음.
 -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불평등 해소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건강불평등 현황과 추이를 모니터링해야 함.
-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더 좋은 생활습관을 갖도록 건강증진서비스가 보다 강화되어야 함.
 -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인구집단이 더 많은 건강증진서비스에 노출될 수 있도록 '비례적 보편주의'에 입각해 사업이 수행되어야 함.
- 지역의 결핍 수준과 사망률 간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중재 정책이 동반되어야 함.

■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및 미충족 의료불평등 측정 도구 개발

- 이번 연구를 통해 파악된 불평등 인식 취약 집단, 건강불평등 유형별(또는 원인별) 심각성과 개선 필요성은 향후 건강불평등 정책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 가능함.
- 기존 미충족 의료 측정 도구가 시간 부족 및 경제적 이유 등 개인의 여건에 초점이 맞춰진 데 반해 이번 측정 도구는 제도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구체적인 정책 개입 지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건강불평등 정책 모니터링

- 건강불평등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건강불평등 완화 정책을 촉진하는

정책 도구로서 SDoH Action 모니터링에 대한 긍정적인 고려가 요구됨.

- 또한 현행과 같은 프로그램 평가 또는 건강 결과 중심 모니터링을 넘어 유럽연합(EU)과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가 활용하고 있는 건강불평등 감사(HEA)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음.
- 조직화된 건강불평등 정책 모니터링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정부 내 여러 부처, 시민사회와 정부 간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보고서
2017-35**2015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A Report on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of 2015: Chronic
Disease, Morbidity, Health Behaviour and Health Status

연구 책임자 김남순

공동 연구자 전진아, 서제희, 정연, 정수경, 이정아, 이나경, 김은주, 염아림, 윤열매, 서남규,
문성웅, 강태욱, 오하린, 김규성, 박현아, 이영민, 김수홍, 이후정, 정훈**연구 목적**

- 국가보건의료체계의 대응성·접근성 향상과 효율화를 위한 정책 수행의 기초정보로서 질환, 의료이용, 의약품 복용, 의료비 지출 및 지출원, 보건 의식 행태 등에 관한 개인 및 가구 단위의 통계를 생산하고 관련 요인을 규명함.
 - 개인 및 가구 단위 보건의료비 지출의 실태와 동태적 변화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공함.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 및 재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

연구 내용

- 2015년 한국의료패널 연간 데이터 구성
 - 10차(2015년) 및 11차(2016년) 조사 자료로부터 2015년 연간 의료이용 자료가 모두 수집된 가구원과 이들 가구원이 귀속되어 있는 가구로 6607가구, 1만 8130명이 포함됨.
- 2015년 한국의료패널 연간 데이터에 대한 기초분석 실시
 - 이탈 가구 분석: 2008년 연간 데이터 원가구 중 2015년 연간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를 이탈 가구로 정의하여 이탈 가구와 유지 가구의 2008년 특성 차이를 파악하고, 2014년 연간 데이터에 포함되었으나 2015년 연간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를 이탈 가구로 정의하여 이탈 가구와 유지 가구의 2014년 특성 차이를

파악하였음.

- 질병 이환 현황 및 유병 상태 분석
 -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KCD-6)를 기준으로 질병 이환 현황과 다빈도 질환을 파악하였으며, 8대 주요 만성질환(군)(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병증, 심장 질환, 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결핵)을 선정하여 유병 상태를 파악하였음.
-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분석: 의료이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원과 가구의 특성에 따른 연간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을 살펴보았음.
- 개인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분석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조사 대상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에 따른 주요 건강 행태 차이를 분석하였음.

■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개최(2017. 12. 14. 대한상공회의소)

- 연구계획서 제출자에게 2008~2015년 연간 데이터, 유저 가이드, 코드북을 제공함.
- 의료이용, 의료형평성, 암 검진의 적정성, 의료비 지출, 건강행동과 건강 수준을 주제로 한 16편의 논문과 4편의 대학원생 우수 논문을 발표함.

정책 제언**■ 가구 및 가구원 특성**

- 가구의 일반적 특성: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1인 가구는 2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세대 구성을 살펴보면 2세대로 구성된 가구가 49.5%로 가장 많았음.
-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 연도별 성비 변화는 거의 없으며, 2015년은 남자 49.8%, 여자 50.3%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많음. 조사가 장기화되면서 50세 이상의 연령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8년에 비해 기혼(유배우)은 감소하고 이혼, 별거, 사별한 가구원의 비율이 증가하였음.

■ 이탈 가구 분석

- 이탈 가구와 유지 가구의 특성 차이: 2008년 대비 4인 가구일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 거주할수록 이탈률이 높게 나타남. 2014

년 대비 3세대 가구일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이탈률이 높게 나타나나 가구 특성별로 이탈 가구와 유지 가구의 차이가 크지 않음.

- 이탈 가구와 유지 가구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차이: 이탈 가구의 응급, 입원, 외래 의료이용률은 유지 가구보다 낮게 나타남.

■ 질병 이환 현황 및 유병 상태

- 주요 만성질환 유병 상태: 18세 이상 가구원 중 8대 질환 가운데 1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원은 총 1만 4784명 중 6013명(40.7%)이며, 질환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총 6607가구 중 4303가구(65.1%)임.
 - 최다빈도 질환은 고혈압으로 질환자 수는 전체 가구원 수의 24.2%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관절병증(20.4%), 고지혈증(12.3%), 당뇨병(9.5%) 순으로 빈도가 높음.

■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 가구의 연간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2015년의 의료이용률은 응급 20.1%, 입원 27.2%, 외래 97.4%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거나 감소함.
-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 만성질환자의 질환별 연간 본인부담의료비는 시간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2008년 대비 2015년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병증, 심장질환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의료비는 증가한 반면 허혈성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의료비는 감소하였음.
 - 외래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관절병증 중 연평균 본인부담의료비가 가장 큰 질환은 당뇨병이었음.
 - 입원과 외래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심장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분석 결과, 입원과 외래 환자 모두 1인당 연간 평균 본인부담의료비가 높은 질환은 악성신생물이었음.
 -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복용 현황: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복용 현황을 살펴보면 관절병증을 제외하고 의약품 복용률과 복약 순응률이 높게 나타남.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병증 환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복약 순응률은 증가하였음.

■ 건강행태와 건강 수준

- 2015년 가구원의 주요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 2015년 연간 데이터에 나타난 주요 건강 행태를 보면, 현재 흡연율은 20.3%, 고위험 음주율은 17.7%,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은 12.7%,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13.8%로 나타남.
 - ADL 장애율과 IADL 장애율, ADL/IADL 전체 장애율 분석 결과 55세 이상 가구원의 ADL 장애율은 3.2%, IADL 장애율은 11.1%, ADL/IADL 전체 장애율은 11.2%로 나타남.
- 복합적 건강 위험 행동: 주요 건강 행태인 흡연, 고위험 음주, 신체활동의 복합적인 건강 위험 행동 양상을 파악한 결과, 2015년 흡연과 고위험 음주를 하고 운동이 부족한 집단은 5.1%이며, 세 가지 건강 위험 행동을 모두 하지 않은 건강한 집단은 29.0%로 나타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운동이 부족한 집단으로 36.4%를 차지함.

연구보고서
2017-36

2017년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 (세부1) 미래예측 방법의 적용과 활용 방안

2017 Health Impact Assessment Projects Management:
Application of Foresight Methods for Assessing Obesity Risk
Factors

연구 책임자 최은진
공동 연구자 김혜련, 이수형, 이난희, 김진호

연구 목적

■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도시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 개발을 위하여 미래예측 도구를 제시한 바 있음. 미래예측 도구는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 환경적 요인 및 물리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를 전망하고 정책 개발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미래지향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건강영향평가에 적용 및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미래예측 기법을 활용하여 비만의 건강 결과를 예측하고 비만의 미래 영향 요인을 전망했으며 정책적 대응 방안을 개발하였음.

• 본 연구의 범위는 비만의 건강 영향 요인과 관련하여 사회생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미래예측연구 방법의 적용과 활용 중심임.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비만 영향 요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음.

연구 내용 및 방법

■ 미래예측연구와 관련한 문헌 자료 수집

- 미래연구(Foresight) 관련 자료 수집.

• 영국, 호주,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활용하는 미래예측 기법의 적용과 활용에 관한 문헌 자료를 수집함.

•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에서 개발된 미래연구모형을 반영함(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 비만 위험 요인에 대한 다양한 건강 결정 요인을 고려하는 모형을 문헌 고찰을 통해 검토함.

• 건강증진 분야에서 사회적 건강행태모형으로 설명되는 다양한 요인이 비만의 결정 요인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음(김명 등, 2017).

• 비만의 결정 요인이 사회생태적 요인과 Causal Web 모델로 설명될 수 있어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추진(약 1000명): 비만 및 도시의 건강한 미래에 관한 주민의 인식과 장애 요인에 관한 설문조사.

- 설문 내용

- 비만 증가에 대한 인식(성인, 청소년별 현재 상태와 추세, 전망)
-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그 주요 원인(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
- 체형(body image) 인식
- 비만 예방과 관리서비스의 필요성과 요구도 수준(개인적, 사회적 요구도)
- 비만의 결과에 대한 인식
- 도시의 건강한 미래와 관련된 요인(건강한 생활습관, 급속한 노화, 사회 환경 요인 등)

■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지역사회 비만의 결정 요인, 건강도시의 요인 등에 관한 질적 조사(2회)

- 설문 내용: 비만 문제의 추세, 정치경제 및 사회환경적 영향 요인, 도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 평가

■ 해외 출장

- 출장의 필요성 및 목적: 비만 및 미래예측 기법에 대한 자료 수집, 건강영향평가, 건

강형평성 중심 도구에 관한 자료 수집

- 방문 기관: 호주 멜버른 라트로브대학 Dr. Sally Fawkes 면담, 호주 리버풀 지역 건강불평등 연구센터(CHETRE: Center for Health Equity Training Research and Evaluation)
- 호주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일스대학의 일차보건의료 및 형평성 연구센터(UNSW Sydney Research Center for Primary Health Care and Equity)
 - 방문 기간: 5월 14~19일(4박 6일)

정책 제언

■ 국외의 비만 지표 동향과 공통점

- WHO, 유럽연합(EU), 국제비만기구 및 건강도시 관련 국제기구나 미국 등의 사례와 기존에 제안된 비만 예방·관리와 관련된 국내 정책 연구, 최근의 건강도시 권장 지표에서 제안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핵심적인 동향과 공통점을 찾아보면, 비만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비만의 요인은 생물학적 요인 외에 사회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고 향후 이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되었음.

- 문헌 고찰 및 해외 출장, 국내 자료 수집을 통해 미래예측연구 방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주요 모델을 고찰하였음.
 - 비만의 결정 요인은 식생활과 식품 섭취 환경, 신체활동 및 신체활동 환경, 사회 경제적 요인 등으로 파악되었음.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현재 우리나라 비만 수준보다 10년 이후의 비만 영향력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일반인 대상 전화 설문조사 결과 주관적으로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비만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음.
 - 비만의 주된 원인에 대해서는 잘못된 식습관, 신체활동 부족, 심리적 스트레스, 유전 및 가족력, 사회적 요인 등이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소아비만의 문제는 가장 적게 인지하고 있었음.

- 비만 유발 요인의 영향력은 가당음료 및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음주 증가)신체 활동 감소 환경)대중매체 영향)혼자 밥 먹는 생활양식 증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음.
- 응답자 1000명 중 체중 조절 경험이 있는 사람은 64.4%였음. 이들의 월평균 체중 조절 비용은 7만 5000원이었음. 체중 조절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예상하는 월평균 체중 조절 비용은 6만 6000원이었음.

■ 비만 유병률 감소에 따라 정상, 과체중, 비만군에서의 비만 관련 질환인 당뇨,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의 유병률을 분석함.

- 당뇨의 경우, 현재의 비만 유병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기준 시나리오) 정상군에서의 당뇨 유병률은 2015년 약 5%에서 2040년 20%로 증가하였음. 비만군에서의 당뇨 유병률은 2015년 15%에서 2040년에는 55%로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 폭은 정상군보다 컸음. 비만을 5% 감소 시나리오 또한 기준 시나리오와 큰 차이는 없었음.
-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현재의 비만 유병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정상군에서의 허혈성심장질환 유병률보다는 비만군에서의 허혈성심장질환 유병률이 높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병 유병률 차이는 커졌음. 비만을 5% 감소 시나리오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고 정상군, 비만군에서의 질병 유병률 차이는 기준 시나리오와 큰 차이는 없었음.
- 뇌졸중의 경우, 현재의 비만 유병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히려 정상군이 비만군보다 뇌졸중 유병률이 높았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비만군에서의 뇌졸중 유병률이 높아져 2040년에는 비만군에서의 뇌졸중 유병률이 정상군에서의 뇌졸중 유병률보다 1.5% 더 높았음. 비만을 5% 감소 시나리오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음.

■ 비만의 영향은 뇌졸중보다는 허혈성심장질환, 허혈성심장질환보다는 당뇨에서 큼을 알 수 있었음. 따라서 질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비만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세계비만연맹의 DYNAMO-HIA Project 연구 결과값을 이용하였고, 분석 시 전이확률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전이확률 또한 시간에 따라 또는 정상, 과체중, 비만 집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 향후 현실성 있는 전이확률과 우리나라의 역학 자료를 활용하여 좀 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0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ANNUAL REPORT

KiHASA

2017년 연구 성과

02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 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II) - 시범적용 및 활용방안
- 지역사회 기반 노인 친화적 통합의료 서비스 제공모형
- 제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
- 산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현황과 개선 과제
-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방안
- 2017년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세부2)
건강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모형 적용 연구
- 장애인의 건강한 삶 정착을 위한 건강권 증진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7- 01**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II) -
시범적용 및 활용방안**Development of evaluation model for health policy(II):
Pilot evaluation and application연구 책임자 김남순
공동 연구자 박은자, 정연, 손호성, 김대은, 배정은**연구 목적**

- 보건의료정책 시범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평가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와 고려 사항들을 분석하고 국내 정책 평가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 내용**■ 보건의료정책 평가 현황 고찰**

-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 기술, 평가 디자인 선정, 근거 수집, 결론 도출, 평가 결과 활용으로 나누어 평가 단계별로 보건의료사업 평가의 틀을 제시함.
- 캐나다에서도 유사한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평가의 틀을 제안하였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정사업 심층평가에서는 평가 방법에 따라 적절성 평가, 효과성 평가, 집행 성과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음.
- 양적 평가 방법과 질적 평가 방법을 사용한 평가 사례를 살펴본 결과, 국내에서도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정책 평가를 수행해 왔음.
 - 사업 전후 또는 정책 시행 전후 비교 평가에서 과학적으로 대조군-중재군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고, 평가에 사용하는 자료원도 점차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질적 연구를 활용한 평가는 양적 평가에 비해 활발하지는 못함.

■ 시범평가(1):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시범평가

- 평가를 위한 연구 질문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였는가?'로 선정하였음.
-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정책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RDD 방법으로 분석.
- RDD 분석 결과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적용된 경우 30% 정률제가 적용되었을 때와 비교하여 노인층에서 의원급 외래 방문 횟수가 약 17%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반면, 의료이용 건당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총진료비, 처방약값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시범평가(2):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시범평가

- 평가를 위한 연구 질문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은 무엇이고,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와 사업 수행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로 선정하였음.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공 부문의 지속적인 설득과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기관의 사업 참여가 확대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서비스 제공자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하는 교육서비스가 만성질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이용자 또한 교육이 고혈압·당뇨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음.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그간 주로 효과성 평가 위주로 사업 평가가 진행됐는데,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수행 과정을 정리하고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다각적으로 조사하는 데 질적 연구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 제도와 환경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 국내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보건의료정책 평가 시 효과성, 적합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대해 형식적인 평가가 많은 점, 사업의 질보다 양 위주의 평가가 이뤄진 점, 주기적·장기적 평가 부족, 차

후 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환류 부족,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 입안자의 인식 부족 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책 제언

- 인구고령화, 신(新)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보건의료비가 증가할 가능성과 국가 예산상의 제약을 고려할 때 정책 평가를 통해 좋은 보건의료정책을 확대하고 좋지 않은 보건의료정책은 축소 조정하는 것이 요구됨.
- 보건의료정책 평가가 활성화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정책 평가 결과물이 축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의료정책 분야별로 다수의 평가 전문가를 양성하며, 정책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임.
- 향후에는 보건의료정책 평가 발전을 위해 각 분야의 평가지침 및 성과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신규 정책 입안 또는 신규 사업 계획서 작성 시 별도의 평가 계획 제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중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보고서
2017- 03

지역사회 기반 노인 친화적 통합의료 서비스 제공모형

A Study for Community-Based Age-Friendly Integrated Healthcare Model

연구 책임자 서제희
공동 연구자 최지희, 이나경, 오세욱, 유윤형, 구정하

연구 목적

-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모형을 이용자 중심 관점에서 탐색하여, 노인 대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현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 통합서비스 개념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국내 상황을 고려한 '통합의료서비스' 개념과 통합의 범위·수준을 정의함.
 - 국외 및 국내 사례 고찰을 통해 주요한 시사점을 도출함.
 -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활용하여 통합의료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인식 차이를 파악함.
 -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활용하여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지역사회 기반 노인 대상 통합의료서비스 제공 모형을 탐색하고 제안함.
 - 모형의 실제 적용을 위해 정책적으로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핵심 쟁점으로 도출하고 정책 방안 및 시범사업 등을 제안함.

연구 내용

■ 주요 개념에 대한 고찰

- '통합'이라는 용어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주체와 해당하는 서비스 영역에 따라 의미하고 추구하는 바가 다름.
-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의 통합 의료는 예약 단계와 방문해야 할 의료기관의 최소화, 의료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같이 코디네이트된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는 노

인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노인 친화적 서비스 개념과도 연결됨.

- 즉,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이 쇠퇴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 단계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 범위를 최소화하며, 노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보건의료인력과 돌봄인력)이 투입되도록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함.

■ 국내외 노인 관련 통합서비스 제공 사례 및 시사점

- 국내 노인 대상 서비스는 보건의료서비스, 요양서비스, 돌봄서비스 등의 영역별로 다양하지만 서비스 제공 주체가 다양하고 관리 주체 또한 다양하였음.
- 서비스 영역 간 연계·조정 및 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과 수행 인력 및 재정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보건의료서비스와 요양·돌봄서비스의 연계가 특히 미흡하였음.
- 국내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통합서비스 모형을 고찰한 결과, 케어의 방향을 제공하는 리더십, 여러 전문가 간의 다학제케어와 케어 코디네이션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었지만, 환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음.
- 호주의 지역사회 기반 급성기-급성기 직후 케어 서비스(CAPAC)는 다학제 간 접근과 환자 중심적 접근을 원칙으로, 환자 여정 단계에 따라 통합적 노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
- 일본에서는 지역포괄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거·의료·개호·예방·생활 서비스 등 고령자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짐.

■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활용한 통합의료서비스 제공 모형 탐색

-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 도출된 노인 친화적 통합의료서비스 제공 모형에는 지역사회 내의 의료·요양·복지 관련 서비스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단일 소통 창구가 있음.
- 의료, 복지,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케어디자인팀'을 중심으로 케어디자이너가 환자 및 보호자와 함께 케어 계획을 짜고 환자의 개별 필요에 맞춰 서비스를 연계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이용자 관점에서 의료·요양·복지에 대한 정보나 관련 서비스가 영역의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며 예방,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등 케어의 단계에 따라 서

비스가 유기적으로 제공됨.

■ 지역사회 기반 노인 친화적 통합의료서비스 제공 모형(안)

- 지역사회 기반 노인 친화적 통합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구성 요소는 첫째, 서비스의 연계·조정·통합을 위한 다학제 케어 디자이너팀 구축, 둘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일 플랫폼 구축, 셋째, 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 넷째,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 방안이 있음.

정책 제언

■ 한국형 지역사회 기반 노인 친화적 통합의료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및 적용을 위해 도출된 아홉 가지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함.

- 노인 대상 정책과 사업의 통합을 위한 리더십과 시행 주체 간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노인 대상 서비스들을 통합, 조정하고 이에 맞게 예산 및 관련 인프라를 조정할 중앙 정부 내 주체가 필요함.
 - 노인 대상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의 거버넌스 구축을 고려할 때, 중앙-광역(또는 권역)-기초 형태의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정책의 범위 확장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 통합의 수준과 범위, 서비스의 내용, 제공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제공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제공자 측면과 이용자 측면의 통합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리적인 측면과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통합까지 고려하되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수준에서 통합의 범위를 설정해야 함.
- 통합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 수립과 조정 역할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 통합의료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과 조정 역할은 통합의료서비스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과 통합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용자에 대한 정보(일반적 사항, 평가 및 진료 내용, 환경적 요소 등)와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제공할 것인가.
 -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시 정보 공유 및 제

공을 위한 단일 플랫폼을 고려해야 함.

- 노인 친화적 통합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시설 및 인력)를 어떻게 구성하고 마련할 것인가.
 - 단순한 협진·의뢰 또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접근 방식이 아닌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다학제팀 접근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각 지역사회에서 시설과 인력의 규모를 계획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지역사회 기반 노인 친화적 통합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재정 마련과 제공자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 관리의 주체가 각기 다른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불 보상 방식을 고안해야 함.
- 지역사회 기반 노인 친화적 통합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및 보호자(가족)의 사회경제적·사회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 주간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실제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재정비하여 서비스 내용을 개선하여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간병 부담을 완화해야 함.
-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이용자)의 참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 서비스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 제공, 정책 평가 또는 정책 수요도 조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survey)에 적극 참여, 중앙 또는 지방정부 의사결정 기구의 환자 대표로 참여 등.
- 지역사회 기반 노인 친화적 통합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와 서비스 내용의 질 평가를 어떻게 시행하고 지역 간 표준화를 이루어 낼 것인가.
 - 리더십, 거버넌스, 인프라(시설 및 인력) 지원, 재정적 보상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 서비스 내용의 표준화 방안, 질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함.

연구보고서
2017-06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

A Plan to Reorganize the health care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연구 책임자 신영석
공동 연구자 이진형, 김범준, 이재훈, 이영희, 황도경, 김소은, 박금영

연구 목적

■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급격하게 부상하면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블루오션으로 주목받음.

-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에 시대의 보건의료체계를 재정비하고 미래의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개편 방향을 탐색하고자 함. 환경 변화, 외국의 상황, 우리의 디지털 헬스 케어 관련 현황, 현행 건강보험의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21세기형 새로운 미래 보건의료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연구 내용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나노기술과 같은 핵심 기술의 발전이 여러 분야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일련의 현상을 지칭하는데, 그중 보건의료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큼.

-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일찍이 정부 주도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대응하여 범정부부처 전략을 시행하는 한편 민간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투자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보건의료 분야 가치 창출은 그 중요성은 강조되나,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한 표준화,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국가 수준의 정책 대응과 전

략 수립, 개인정보 보호 기전 마련 등의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음.

정책 제언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국민의 편익 증진, 안전 및 의료의 질 제고,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의 목적 간 균형 확보, 의료 불평등 방지라는 원칙을 제시함.
 - 모바일 정보, 유전체 정보, 진료 정보 등 여러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발전 동인을 제공하기 위해 수가를 신설하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음.
 - 국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설계하여 예방 차원에서의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유도하는 한편, 의료서비스 외에 돌봄,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활성화해야 함.

연구보고서
2017-18

산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ng Postpartum Mental Health

연구 책임자 이소영
공동 연구자 임지영, 홍진표

연구 목적

- 한국이 '초저출산의 위기' 상태에 머물면서 저출산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으로써 출산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책임이라고 인식됨.
 - 산모의 산후 정신건강 상태는 당사자인 산모의 건강뿐만 아니라 양육의 질에 영향을 줌으로써 다음 출산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아 상호작용을 통한 영아의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
 - 그러나 산후우울증 및 관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산후우울증에 대한 정확한 유병률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은 미미함.
- 본 연구는 산후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산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위험 요인의 완화 및 제거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분석 결과 2012~2016년 산후우울증 유병률은 1.43% (1.36~1.50%)로 나타남.
 -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산후우울증의 유의한 위험 요인(risk factor)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출산 시 비취업인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 초산에 비해 경산인 경우, 제왕절개 분만인 경우, 출산 전에 우울증을 경험한 경우,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경우로 나타남.

- 특히 임신 중 또는 임신 전 우울증의 경험은 산후우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나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2006년, 2011년,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자료를 병합하여 살펴본 결과, 전체 여성의 산후우울을 포함한 주요 우울장애의 평생 발병률은 각각 1.3%(산후우울), 6.6%(그 외 우울)로 나타남.

-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대상자 중 주요 우울장애를 경험했으며 출산한 적이 있는 18~64세 여성의 약 17.3%가 산후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2015년 조사 기간(2013년 1월 1일~2015년 7월 31일)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만 15~49세 기혼 여성의 산후우울증 진단 또는 상담 경험을 분석한 결과, 산후우울증과 관련하여 진단이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은 2.6%에 불과함.

■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에딘버러 검사를 통해 산모의 정신건강 상태를 알아보고, 산모가 느끼는 산후 정신건강 문제, 산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욕구 등에 대해 심층 면접을 통해 질적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에딘버러 검사 결과, 낮게는 1점부터 높게는 23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고, 전체 15명 중 10점 이상인 위험군이 8명으로 나타남.
-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은 힘든 경험, 엄마라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부담감, 육아에 대한 정보의 부재와 부담감, 가까운 사람, 특히 남편과의 불만족스러운 관계 등임.
- 산후우울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와 정책적 욕구는 산후우울과 육아와 관련된 정보 제공, 산모를 바라보는 시각과 산후우울에 대한 인식 전환,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과 직장 문화의 개선, 돌봄 지원 정책, 재정 지원 정책, 상담 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확대·내실화·행정적 절차의 내실화로 요약할 수 있음.

정책 제언

■ 산후우울에 관한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리, 신뢰성이 있는 자료(database)를 통한 산후 정신건강 실태 파악과 점검, 이를 활용한 연구, 교육과 인식 개선,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기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산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은 출산모의 정신건강 수준에 따라 개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함.

- 산후 우울감을 경험하는 대다수 산모의 산후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산모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동시에 산후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산모가 우울증을 방치하지 않고 치료를 받도록 의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산모의 정책 욕구가 반영된 정책의 수립·확대가 필요함.

■ 생애주기에 따라 임신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미시(micro) 체계, 중간(mezzo) 체계, 거시(macro) 체계로 나누어 촘촘히 지원해야 함.

<표 1> 생애주기별 체계적 지원 방안

생애	체계적(systematic) 지원		
	미시(micro) 체계	중간(mezzo) 체계	거시(macro) 체계
	개인	가족	사회
임신 전	- 임신과 관련된 상담과 검진. - 임신·출산 관련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에 관한 교육과 이를 통한 인식 개선. - 자원(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인지.	- 배우자의 임신·출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이해, 육아 부담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과 이를 통한 인식 개선.	- 산후 정신건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산후우울증 유병률 산출 및 점검(국가 데이터 구축). - 관련 전문가 양성.
임신 중	- 산전 관리 시 정신건강 점검(screening).	- 정서적 지지.	- 산후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국가 차원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표준화된 지침 작성.
출산 후	- 산후 정신건강 점검(screening). - 사회적 관계 유지(자조 집단 등).	- 정서적 지지. - 육아 부담.	- 산후 정신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 산후 도우미(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정신건강 방문 서비스 지원. - 자조 집단(모임) 지원. - 국민행복카드 사용처 및 지원 확대. -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 취약계층 지원.

연구보고서
2017- 27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현황과 개선 과제

Coordination of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services

연구 책임자 전진아
공동 연구자 전민경, 홍선미, 전준희, 이용주, 오미애, 이난희, 김진호

연구 목적

-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대상자인 중증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현황을 살펴보고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둠.
 -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현황 파악.
 - 정신건강증진체계 및 유관 자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 현황 파악.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질적 면담 조사, 설문조사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반영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체계 내 주요 전달체계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증진체계 간 연계와 정신건강증진체계와 지역사회 복지 자원 간 연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함.
 - 첫째,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내 연계의 현실은 제도가 그려 놓은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로 이어지는 시퀀스 구조를 가진 연계와는 달리 중증정신질환자와 보호자, 서비스 제공자 모두 의료기관 퇴원 후, 낮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집을 병렬적 구조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함.
 - 둘째, 정신건강증진체계 내뿐 아니라 중증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 지역사회로 왔을 때, 지역사회 복지 자원 연계의 정책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 등 지역사회 복지 자원과의 연계 역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는 점을 파악함.

- 셋째, 지역사회 내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케어가 주로 가족의 몫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즉 의료기관,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자원 모두 가족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보고 이용하는 구조임.

정책 제언

- 본 연구는 현재의 병렬적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구조를 시퀀스로 맞추는 방식으로 구조 전환을 꾀하기보다는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자원들을 어떻게 연계하여 중증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여 다음의 개선 과제들을 제안함.
 - 중증정신질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족교육 등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증진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주체 간 관계 맺기 지원.
 -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실무자 대상 교육 등을 통한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주체 기관장의 리더십 제고.
 - 지역의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실무자 간 정보 공유.
 - 시설, 인력, 예산 확충 등.

연구보고서
2017- 28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방안

Reinforcing the care programs for the suicide attempters in Korea

연구 책임자 이상영
공동 연구자 채수미, 정진욱, 윤시몬, 차미란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사회 자살시도자 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자살시도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

- 첫째, 자살시도자의 특성과 자살시도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자살시도 예방과 자살 사망률 감소를 위한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둘째, 자살시도자 발견 신고, 현장 출동, 위기개입,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공급 주체로 구성되는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전을 마련함.
- 셋째, 자살시도 초기 단계에서의 보호 강화와 함께 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자살시도자에 대한 등록·관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등 자살시도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함.
-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충하고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 사업 실시 확대,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지정, 자살시도자 관련 통계 생산 인프라 확충 등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함.

연구 내용

■ 국내외 자살 예방 사업 및 자살시도자 관리 현황 파악

■ 지역사회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에 대한 의견 조사 실시

■ 지역사회 자살시도자 관리의 문제점 진단

- 첫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고위험자 및 자살시도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 규정이 미흡함.
- 둘째, 자살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상해의 치료비 지원이 미흡하며, 이러한 상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응급입원의 경우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원도 없음.
- 셋째, 자살시도 초기 단계에서 응급입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살시도자들이 가진 욕구에 부응하는 위기개입 서비스가 보다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음.
- 넷째,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함.
- 다섯째,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통계 생산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자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적 자원 투입도 열악한 실정임.

정책 제언

■ 자살시도자 관리체계 개선 방안

-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법적 근거 확충.
- 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
 - 자살시도자 응급입원 시의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원.
 - 자살고위험자 의료비 지원 및 기존 의료비 지원제도 간 연계 강화.
- 자살시도자에 대한 위기개입 서비스 확충.
 - 자살시도자에 대한 단기 시설보호서비스 제공 검토.
 -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지정.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확대 실시.
 -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현장출 동의 시간적 사각지대 해소.
- 자살시도자 관리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자살시도자의 관리 동의를 제고.
-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자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체계 강화.
- 자살 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 인프라 확충.
 - 자살 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예산 확충.
 - 자살시도 등에 대한 통계 생산 기반 구축.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목표 및 역할 범위 명확화.
 - 정신건강 관련 자원 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 자살고위험자 관리의 질적 평가 기준 마련.
 - 자살시도자에 대한 인간·생태적 접근 강화.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추진상의 행정적 위상 강화.
- 자살 예방 사업 담당 인력의 고용 안정.

연구보고서
2017- 29

2017년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세부2) 건강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모형 적용 연구

Project Management of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for 2017

연구 책임자 김정선
공동 연구자 최정수, 이난희, 정수경, 김진호, 이희나, 서미경, 정진욱, 손애리, 김주혜

연구 목적

- 건강영향평가제도를 중앙 단위에서 법제화하기 위한 전 단계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함.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의 제정 및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영향평가의 장점과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중앙 단위 건강영향평가 법제화의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입법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영향평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장기 간(1년 이상) 수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인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2016년 건강영향평가 결과의 성과를 파악하고, 변경된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포괄적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함.

연구 내용 및 방법

- 2016년 개발된 운영체계와 평가 도구 초안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의 간이 평가를 시범 실시한 후 현장에서 실제 활용이 가능한 평가 도구로 최종 수정하였고, 시범적으로 운영한 건강영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 지침을 개발하였으며, 서초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함.

- 포괄적 건강영향평가가 수행된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또한 양재천과 일반적인 하천의 기능을 비교할 목적으로 하천의 기능을 반영한 건강 결정 요인들로 사회적 기능, 연결적 기능, 정체성, 생태적 기능, 안전적 기능에 대해 양재천 방문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한 결과, 도심 하천은 여가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녹지 공간으로서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의 향후 방향 역시 산책로 정비나 여가 활동을 위한 녹지 확충이나 자전거 이동과 같은 주민의 건강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정책 제언

-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우리 원이 서울시 서초구 시범사업으로 2016년에 개발한 간이건강영향평가 운영체계와 평가 기준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였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이건강영향평가 지침을 개발하였음.
- 또한 사업의 예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장기간 수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한 포괄적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였음. 평가 대상은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으로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건강에 대한 불평등이 있는 특정 집단을 찾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건강영향평가가 성별영향평가나 부패영향평가와 같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 중앙정부는 법제도화 시 특히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수행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 검토의 비중과 범위를 확대하고, 여러 지방정부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영향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강영향평가는 다른 유사 영향평가보다 폭넓은 대상과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 개발 및 평가와 결과 분석을 위한 지원 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더욱 큼.

-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건강영향평가 운영체계, 평가 기준과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계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여야 하겠음. 이에 올해 개발된 지방자치단체 간이건강영향평가 지침에 대한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음.
-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광범위한 건강영향평가의 대표 사례로서, 평가 결과가 기존 하천의 기능을 뛰어넘는 도심하천의 역할이 향후 사업 추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 이렇듯 다양한 대상들을 평가하여 평가 방법들이 축적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이전이라도 정책과 사업 추진 현장에서 건강영향평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임.

연구보고서
2017- 42

장애인의 건강한 삶 정착을 위한 건강권 증진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moting strategies for the right to health for
healthy lif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연구 책임자 김성희
공동 연구자 황주희, 김용진, 노승현, 이동석, 정희경, 호승희, 객미영, 이민경

연구 목적

■ 연구 배경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이 제정되어 2017년 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접근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 목적

- 장애인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의 건강권 개념, 현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관련 법·제도, 특히 새로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법」을 검토하고 장애인의 건강 실태와 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해외 선진 사례 검토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건강권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건강한 삶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권 증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 내용

가. 장애인의 건강권

■ 장애인의 건강권

- 장애인의 건강권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각종 관련 시설·환경·의료서비스 자원에 대하여 장애에 따른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고, 포괄적인

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 내에서 자원을 차별 없이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으며,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문화적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될 수 있음.

나. 장애인의 건강 격차(실태)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 건강 수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양호한 건강 인지율은 낮고 만성질환 이환율은 높았음. 건강 인지율은 남자인 경우, 고학력, 고소득층일수록 높았으며 만성질환 이환율은 여자인 경우, 저학력, 저소득층일수록 높았음.
- 정신건강: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우울증상 경험률, 자살 생각률, 약물 복용률이 높았음. 우울증상과 자살 생각률 모두 여자인 경우 높았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의료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입원율과 응급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높았음. 비장애인보다 높은 개인 의료비를 지출하나 비장애인에 비해 미충족 치료율과 초과 치료 제한율이 높았음. 미충족 치료율은 여자인 경우, 저학력, 저소득층일수록 높았으며 초과 치료 제한율은 저학력, 저소득층일수록 높았음.
- 건강행태: 비장애인에 비해 걷기 실천율이 낮게 나타남. 현재 흡연율과 위험 음주율은 남자인 경우, 고학력, 고소득층일수록 높았음.

다. 장애인 건강 관련 법·제도

■ 장애인 건강권법(2015년 12월 제정, 2017년 12월 시행)

- 장애인 건강권법: 총 6장 28조로 구성
- 목적: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제1조).
- 적용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재활의료, 재활운동의 경우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 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포함함(제3조 제1호 및 제4호, 제15조).
- 주요 내용
 -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 건강검진 제도화 방안 마련으로 건강검진 시설·인력·장비 인프라 구축의 기준 개발과 의료인용 매뉴얼 개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 인증 기준 마련, 장애인의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는 검진 항목 설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 등의 내용.
- 재활체육 및 운동: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와 제공 시기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 등이 포함된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 체계의 구체화가 필요.
 - 장애인 건강관리: 장애인의 건강 수준 및 건강관리 필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건강평가기준과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보건사업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
 - 건강주치의: 장애인 대상 일차 의료 제공 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장애인에게 진료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면서 주치의 제도를 통해 건강 문제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다른 의료서비스와의 조화와 연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
 - 의료기관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인 콜택시 우선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에 교통수단, 이용보조·수화통역 등을 제공하는 보조인력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함.
 - 방문 진료: 지역 수요에 맞는 방문 진료를 계획·구상하고, 방문 간호 등과 연계한 장애인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 모델의 확대 도입 방안을 검토하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방문 진료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함.

라. 외국의 장애인 건강권 지원 정책

■ 영국

- 장애인 건강 관련 제도 변화와 배경
 - 「건강 및 사회적 돌봄법(Health and Social Care Act)」(2012)이 제정되고 대대적인 건강 및 돌봄서비스 개혁이 추진됨.
- 장애인 건강 개선을 위해 NHS는 2012년 개혁 조치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건강예산(Personal Health Budgets)’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함.
- 시사점 및 제언

-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논의 이전에 건강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예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급자 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산 방식의 지원이 필요함.

■ 독일

- 장애인 건강(권)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
 - 장애인 건강 정책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연방 차원에서 2011년에 ‘국가적 행동계획1.0(Nationaler Aktionsplan 1.0)’을 마련하였고 2016년 6월에 ‘국가적 행동계획2.0(Nationaler Aktionsplan 2.0)’을 재설계하여 13개의 행동 영역에서 175개의 전략을 구체화함.
- 장애인 건강제도 현황
 - 장애인 급여군 중 ‘의료적 재활 급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의료적 재활 급여는 만성질환과 장애의 예방·제거·완화·보상 및 악화 방지와 생업 능력의 제한과 돌봄 필요성의 최소화·극복·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제공됨(사회법전 제9권 제26조 제1항).
 - 의료적 재활 급여들은 공적의료보험기관, 공적연금보험기관, 공적사고보험기관이 담당하며, 건강 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라면 대부분 의료보험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생업기능 회복에 목표를 둔 재활서비스라면 연금기관이 비용을 담당함.
- 시사점 및 제언
 - 장애인 건강 정책은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다 세분화되어야 할 것임.
 - 재활스포츠와 기능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 이는 건강에서 장애인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 통합·참여에 목적을 두고 실시되어야 함을 의미함.
 - 지역사회에서의 ‘무장벽의료(Barrierefreie Medizin)’ 추진을 통해 모든 장애인이 일반 의료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일본

- 장애인 건강증진과 주치의 제도

- 장애인 건강검사(1992년)는 일반 건강검진과 유사한 검사 내용으로 장애를 고려한 검사 도구와 배려 내용을 선택할 수 있음. 그러나 전액 자기 부담 원칙임.
- 주치의[가카리쓰케 의(医)]제도는 홈닥터 또는 주치의와 같은 의미로, 지역 주민과 밀착하여 일상적인 건강 유지 상담이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생활 습관병 등 만성질환을 진료하고, 전문적인 검사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병원을 소개함으로써 의료의 역할 분담을 꾀하고자 도입됨.
- 장애인 대상의 의료 및 의학적 재활
 - 장애인 보건의료사업(총 274개, 2014년 기준)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주요 취지이며,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 의료비 조성 사업 또는 치과 진료, 질병의 초기 발견과 치료, 정신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장애아동 지원 사업, 장애인복지 관계자 교육 사업 등임.
 - 장애인 의료재활 전문기관(국립재활병원 장애인건강증진·운동의과학지원센터)을 운영함.
- 장애인 스포츠 사업
 - 스포츠기본법 제정(2011년) 및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대부분의 도·도·후·현과 시·정·촌에 설치함.
- 시사점
 - 건강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건강증진 노력이 이루어짐.
 - 전인적 차원의 장애 예방→운동(스포츠)→재활이 연결됨.
 - 법률에 기반한 장애인 건강 관련 실행 계획과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으며 장애인 운동 처방 및 지도사 등 장애인 재활체육 관련 인력의 양성이 이루어짐.

정책 제언

■ 기본 방향

- 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은 장애인의 장애 특성, 건강 특성 그리고 욕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아울러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건강권 증진 방안

-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방안
 - 전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정책 마련.
 - 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건강 정책 마련.
 - 여성 장애인, 고령 장애인, 저학력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다양한 지원을 통한 건강 격차 해소.
 - 장애인의 치과서비스 이용 확대.
-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건관리 강화
 - 장애인 건강검진 제도화 및 사후 관리.
 - 재활운동 및 재활체육 활동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다학문적 팀 접근 및 관계기관 협력.
-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방안 마련.
 - 의료기관 이동 지원 및 이용 편의 제공 등 무장벽 의료 추진.
 -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 진료 서비스 도입.
- 장애인의 건강 관련 통합법으로서의 장애인 건강권법
 - 장애인 건강 관련 법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으며, 개별 법률의 주요 대상과 시행 내용이 다름에 따라 기관 및 주체 간 협조가 어려우며 관련 법률의 중복 등 한계가 있음. 「장애인 건강권법」을 보강하여 장애인 건강에 대한 통합법으로서의 역할 수행.
- 장애 차별 없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적 건강 정책 지향
 -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므로 건강권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를 위한 적극적 정책 필요.

0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ANNUAL REPORT

KiHASA

2017년 연구 성과

03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II)
-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시간 사용과 정책과제
-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 가구의 소득·소비·조세구조와 정책 과제
- 2017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소득보장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기본소득기반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 근로빈곤층의 부채에 대한 질적연구: 부채발생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coordination mechanism) 개선 방안 연구
-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복지환경의 변화와 대안적 복지제도 연구
- 사회보장제도 성과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공공부조 제도(소득 보장)를 중심으로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 2017년 빈곤통계연보
-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 포용적 복지 철학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2017- 08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II)

Long-term Demographic Change and Financial Projection of
Social Insurances (II)

연구 책임자 신화연

연구 목적

-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경제 여건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연금제도 성숙 등 다양한 정책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재정추계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 1차 연도에 이어 특히 사회보장지출 중 인구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장기지출전망과 부과대상소득 전망 등 인구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수입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 모색.
-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개발을 통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중장기 재정추계 및 제도 발전 방향 논의 시 기초자료 제공.
 -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검토를 위해 각 제도별로 지출추이를 분석하고 자원부담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개편방안 논의시 기초자료로 활용
 - 이를 위해 장기재정전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계모형 및 분석 방법론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함.

연구 내용

- 1차 연도 연구에 이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사회보험재정 장기전망 중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에 대한 재정추계모형 구축.

- 인구고령화와 제도 성숙 등을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추계모형 구축 및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출전망, 2015년 말 개정법을 반영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재정추계모형 개발을 위한 방법론 연구.
 - 2016년 말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한 사회보험재정 장기전망을 위한 모형 구축.

■ 사회보장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및 기초연금 등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모형 구축.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기초연계에 대한 장기재정전망 선행연구의 방법론 비교.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등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해 재정추계 방법론, 분석을 위한 가정, 전망 결과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재정추계 방법론 비교 분석.
 - 국민연금 등 모형 보완, 경제변수 및 정책변수 가정 등 변화 요인별 분석.

정책 제언

■ 공적연금재정에 대한 장기전망 결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도 지출 규모가 장기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된 이후에는 노후소득보장에 해당하는 연금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현재 연금제도 특성상 당분간 지출 규모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공적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재정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

■ 공적연금 장기재정추계 활용 방안 측면에서 장기전망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적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인구고령화와 공적연금제도의 성숙으로 인해 노령정책 관련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적정 연금 수준과 부담 수준 등 재정적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향후 공적연금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보다 신뢰성 높은 전망 자료

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

- 특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재정추계 기반 강화 방안 모색 필요.

연구보고서
2017- 09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시간 사용과 정책과제

Time Use in Low-Income Household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연구 책임자 이현주
공동 연구자 서주연, 윤자영, 지만웅, 전지현

연구 목적

■ 사회복지정책이 발전하면서 복지 욕구에 맞는 정책의 개발과 확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소비뿐만 아니라 시간 소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금전적 자원의 소비는 가구의 욕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분석만으로는 부족함.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금전적 소비가 아닌 시간 소비로 욕구 충족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소득 중심 욕구에 대한 이해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삶을 보다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생활시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

- 본 연구에서는 소득보장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보장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을 전제하고 생활시간 분석을 통해 저소득층의 일상과 욕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저소득층에게 시간 압박의 위험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의 주제를 구성함.

- 노동시간과 아동돌봄시간, 간병시간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돌봄 부담을 분석하고, 통근시간과 혼자 보내는 시간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이동과 고립 위험을 분석함.

-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생활시간 분석에 앞서 해외 주요국 저소득층의 생활시간을 위의 주제를 고려하여 비교 분석함.

■ 연구 주제별로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기타 소득계층과 비교하여 대체로 시간 압박이나 사회적 고립이 더 위험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유급노동시간과 아동돌봄시간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남성은 주중이 아니라 주말에 노동시간이 길고, 저소득층 여성은 유급노동시간은 짧지만 돌봄시간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간접 돌봄시간은 저소득층에서 짧아서 저소득층 아동은 문화적 경험 등 집 밖의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됨.

■ 간호·간병시간에 대해서는 돌봄 필요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간호 및 돌봄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함.

- 저소득층은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더 많은 반면 가구 규모는 작아서 가구원의 간호·간병 부담이 크고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 또한 서비스 구매력이 낮은 저소득층은 돌봄자의 수면 및 개인유지시간은 짧고 일과 가정관리시간은 길어서 돌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돌봄자의 개인 특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돌봄자의 상당수가 나이가 많은 준고령자라는 것임.

■ 저소득층의 통근시간은 짧았지만,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상 특성이 반영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원거리 통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임금을 기대할 수 없고, 좋은 주거지를 선택하거나 원거리 이동을 선택할 경제력이 없기 때문인 것임.
- 또한 저소득 가구에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확률이 높아서 먼 거리 일 자리를 선택하기 어렵게 하였을 것임.

■ 사회적 고립 위험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혼자 보내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은 대체로 혼자 보내는 시간도 길고 집 밖에서의 활동시간도 짧음.

- 저소득층 아동과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게 나타나 사회적 관계의 위축, 고립의 위험이 있음.
- 하지만 저소득 노인의 경우는 사회서비스 지원 등의 이유로 방문자가 많고 혼자 보내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았음. 그러나 집 밖의 활동시간은 짧아 저소득 노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정책 제언

■ 주제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확충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책 대응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돌봄노동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주말에 유급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주말의 아동 돌봄서비스 강화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제도적 확충에는 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보상 수준 제고, 주말 및 야간 근로를 최소화하는 노동 여건 조성, 돌봄노동에 대한 성인지적 정책 정착, 저소득 아동에 대한 문화적 기회 확대 등이 수반되어야 함.
- 둘째,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간호·간병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 정책이 시급함.
 -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질환 발생률은 일반 소득계층보다 높은 데 반해 서비스를 구매할 경제적 능력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간호·간병 부담은 해당 서비스의 시장가격이 높아서 중간소득계층까지도 높은 간호·간병 부담을 지고 있다고 추정됨.
- 셋째, 저소득층의 주요 통근 수단인 대중교통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확충 등 정책적 고려가 중요함.
 - 통근 부담 감소를 위한 정책과 함께 주거비 경감 정책, 보다 나은 근로 조건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정책, 돌봄 관련 복지정책이 함께 요구됨.
- 넷째, 저소득층 아동 대상 활동 서비스 지원이 보장되어야 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의 실비 부담이 일부 필요하더라도 그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임.
 - 저소득층에 한정하기보다 중간소득계층까지 포괄하여 아동의 방임 및 노인의 고립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보고서
2017-10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n Youth
Poverty and Policy Implications

연구 책임자 김문길 부연구위원
공동 연구자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연구 목적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구조적으로 인구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청년세대는 높은 학력 수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과거 세대만큼 좋은 성과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월 경신되는 청년실업을 같은 지표와 'N포 세대'로 상징되는 비관적인 청년의 상황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청년 빈곤 문제는 뒤편으로 물려서 있는 상황임.
 - 빈곤지표가 대표하지 못하는 청년의 어려운 상황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청년들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다차원적인 방법으로 청년빈곤 문제를 살펴보고자 함.

연구 내용

- 청년정책 현황
 -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고용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소득이나 주택을 지원하는 정책은 매우 미비함.
 - 청년기는 사회생활, 결혼생활, 미래를 위한 준비와 같은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현시점에서 청년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음.
 - 청년을 위해서는 한 가지 영역에서의 지원 정책보다는 청년을 다차원적으로 인식하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청년노동의 동태적 특성

- 경기침체기 청년 입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경험의 상태의존성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과거의 근로 경력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임.
- 상용임금근로의 상태의존성과 임금의 상태의존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 30~34세에서는 취업, 상용직, 그리고 임금에서 모두 높은 상태의존성을 나타내 이 시기가 경제활동의 정착기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전문대졸은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취업이나 상용직에서 상태의존성이 낮아 안정된 일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다음 기에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음.
- 경기침체기의 청년 입직자의 경제활동 상태가 청년기를 벗어난 시점(2015년)에 빈곤(중위소득 50% 기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기침체기의 경제활동이 불안정할수록(최적매칭점수가 높을수록) 장년기에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청년기 경제활동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청년 소득빈곤

- 청년의 경우 아동과 노인빈곤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빈곤율 수치는 낮을 수 있으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의 감소 폭(공적이전소득의 효과)에서는 소극적인 차이를 보였음.
- 청년가구 유형 중에서는 청년단독가구의 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90% 수준으로 다른 청년가구에 비해 전체 가구 대비 소득 수준이 최근 들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청년의 빈곤율을 비교한 결과,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청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청년에 대한 정책 마련 시 다차원 접근과 동시에 청년 유형별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소득보전 또는 소득활동과 연결될 수 있는 근로 유인 등 청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청년 주거빈곤

- 청년이 가구주인 청년단독가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물리적 주거 환경(오피스텔

또는 지하, 반지하, 옥탑방 거주)과 불안정한 주거 점유 형태(월세), 임대료 과부담 등의 주거 문제 전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함.

- 이 점이 청년세대의 미래 자산 형성에도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청년이 저렴한 양질의 주택으로 상향이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또는 임대료 보조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이 이어져야 할 것임.

■ 청년 시간 사용 특성

- 청년들이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어떠한지, 역할 유형과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활용함.
- 청년의 역할 유형은 학생 유형, 가사·육아 유형, 취업 준비 유형, 취업 유형, 이중 역할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유형별 시간 사용 특성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함의를 논의함.

■ 다차원적 빈곤

-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의 6개 차원으로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율을 산출한 결과, 청년은 경제력, 고용, 안정성 영역에서 중장년과 노인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보였으며, 경제력과 고용 영역은 모두 크게 안정성 영역으로 포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안정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취약하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 가중치 부여 방법에 따라 다차원 빈곤율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청년의 경우 소득 빈곤율에 비해 다차원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의 소득 빈곤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과 달리 청년의 다차원 빈곤율은 다른 세대와 비교해 소득 빈곤율만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다차원 빈곤에 대한 차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경제력과 고용 차원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초기청년(19~24세)은 고용과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반면, 후기청년(25~34세)은 초기청년에 비해 주거 차원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 청년가구 유형별로 다차원 빈곤율을 살펴보면, 청년단독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

은 반면 청년부부가구 또는 청년부부가구+자녀 가구의 다차원 빈곤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정책 제언

■ 전반적인 정책 방향

- 현재의 고용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청년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청년 유형별 정책 접근이 필요하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부의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함.
- 향후 청년정책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함.
- 생애주기별 빈곤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사회지출 구조를 장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대규모의 청년종합실태조사 등 청년정책 수립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고용정책, 소득지원정책, 주거지원정책 방향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질 제고, 양질의 일자리 매칭을 위한 조건 정비 등이 필요함.
- 소득지원에서는 기초보장제도에서 소위 청년인지적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수급가구 자녀의 부양의무 완화,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성, 청년자활 확충 등이 이와 관련될 수 있음.
-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되 생활의 독립성과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규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여성 문제, 지역 문제, 과로 문제 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한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연구보고서
2017- 24

가구의 소득·소비·조세구조와 정책 과제

Income and Consumption of Family Support Households and Its Implications

연구 책임자 황남희
공동 연구자 김경래, 배혜원, 김재호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가족 부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청장년의 관점에서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에 따른 가계 소득과 소비지출의 특성과 함께 가구 내 조세 지출과 수입 구조(정책 수혜와 납세 실태 등) 등을 살펴보고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양적 접근을 이용한 가구의 소득과 소비, 조세 구조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질적 접근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 신체적 및 도구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가족 부양 실태와 제도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자 함.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의 가구 소득과 소비, 조세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자녀 양육 가구는 자녀의 학령 단계(연령), 자녀 수, 모의 취업 여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른 특성이 나타남.

- 자녀의 학령 단계가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과 조세 부담, 가구 소비가 많은 경향이 있고, 가족 부양 가구는 가구에서 부담하는 조세와 사회보장 부담금의 금액뿐만 아니라 범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가구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수혜하고 있음.
 - 미취학 자녀 가구는 다른 자녀 양육 가구에 비해 공적 이전소득이 많은데, 이는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때문임.
- 교육·보육비는 자녀의 학령 단계가 높을수록 많은 편이나, 구성비 측면에서는 학령

단계에 상관없이 유사한 수준임(약 17%). 또한 교육·보육비 중 미취학 자녀는 보육비, 중고등학생 자녀는 사교육비, 대학생 자녀는 공교육비가 많음.

- 사적 이전지출은 대학생 자녀 가구가 미취학 자녀 가구보다 약 2.5배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자녀 양육 가구는 자녀 수와 모의 취업, 가구 소득이 모두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 조세 규모와 양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령 단계별로 미취학 자녀 양육 가구는 양육하는 자녀가 많거나 모가 취업한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양육수당은 줄어들고 보육료 지원은 늘어남.
- 소비 측면에서는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는 자녀가 많거나 소득 수준이 낮을 때 부모에 대한 사적 이전지출이 줄어드는 경향이 발견됨.

■ 노부모 부양 가구는 부모 동거 여부와 동거하는 부모 수 등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는데, 먼저 부모와 동거하며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구 소득과 조세 부담, 소비지출이 적는데 이는 근로소득이 적기 때문임.

-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하는 가구는 공적 이전소득-기초연금과 농어업 정부 보조금-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소비지출 면에서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식료품비와 보건·피복비(각각 11%, 9%), 사적 이전지출은 많고 교육·보육비는 적음.
- 동거 부모 수가 많을수록(1명→2명) 소득과 조세, 소비가 더 많은데, 동거 부모 수가 많으면 공적 이전소득-기초연금, 국가유공자보조금 등-을 더 많이 수혜함.

■ 부모와 따로 살면서 부모에게 사적 이전지출을 하는 가구의 부양 수준별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가구 소득 수준과 부양 수준은 양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 가구의 경제 상황에 따라 부모에 대한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부모에 대한 사적 이전지출 규모가 작은 가구는 기초연금과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학비 지원 등의 공적 이전소득이 많은 것으로 보아 소득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 가구 소비 규모도 부양 수준이 높을수록 많아지며,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부양 수

준이 높을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반면 교육·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음.

■ **자녀의 학령 단계와 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사례 연구를 실시한 결과, 사례 연구 대상 가구는 모두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됨.**

- 자녀 양육에 우선순위가 있으며, 부모보다는 자녀 양육에 방점을 찍고 있음.
- 또한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은 대체적(trade-off)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공존함.
 -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이 대체적이지 않다는 의견은 자녀 양육에 방점을 두고, 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만약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본다면 이러한 의견은 조금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됨.

■ **현행 가족 부양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

- 자녀 양육 정책이 부모 부양 정책보다 중요성이 높고(10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5.7점, 4.3점), 현재 정책 이행 실태도 높다고(잘 이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각각 38%, 18%) 평가하고 있음.
- 가족 부양의 공사 역할 분담 측면에서는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모두 가족의 역할이 높는데, 향후 정책 방향성은 부모 부양의 국가 부담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자녀 양육 정책은 자녀의 학령 단계에 따라 국가의 부담 수준이 다른데,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는 국가의 부담 수준이, 중고등학생 자녀와 대학생 자녀는 가족의 부담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평가함.
- 다만 가족 부양에 대한 비경제적인 지원에서는 부양 대상에 상관없이 모두 가족의 역할이 강조됨.

양이라는 관점에서 가족과 국가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려, 2) 가족 부양의 비경제적인 지원 강화, 3)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에서는 가족, 부모 부양에서는 국가의 역할 강화를 제시함.

- 자녀 양육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로 1) 자녀의 학령 단계가 낮을수록 국가의 책임 강화, 2) 자녀 출산 순위에 따른 욕구를 반영한 정책 개선, 3)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 부양 부담 욕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제안함.
- 노부모 부양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점진적 완화 후 폐지, 2) 노부모 부양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 검토, 3) 노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도출함.

연구보고서
2017-33

2017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The 2017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Descriptive Report연구 책임자 김태완, 이봉주
공동 연구자 오미애, 박형준, 이주미, 신재동, 정희선, 이병재, 박나영, 김태성, 강상경, 박정민,
정원오, 백승호, 함선유, 김화선, 신유미

연구 목적

-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국민의 삶의 영역에서 복지 욕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그에 따라 정부의 정책 영역 중에서도 사회정책, 특히 복지정책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풍부한 지식과 실증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 수립 및 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는 조사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6년부터 '한국복지패널(KOWEPS)'을 구축함.
- '한국복지패널(KOWEPS)'은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가구 형태, 소득 수준, 취업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층의 규모 및 생활 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 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 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연령, 소득 계층, 경제활동 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인구집단별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구체적인 조사 및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자 함.

- 표본 규모의 측면에서만 아니라 표본의 특성 측면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 조사로 전국 지역별 가구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설계함.

연구 내용

■ 조사표 구성

- 조사표 구성은 크게 가구 조사표, 가구원 조사표, 부가조사표로 구성됨.
- 가구 조사표는 가구원 공통 항목에 대한 설문 내용이 중심이고, 가구원 조사표는 15세 이상 가구원(중고생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설문 내용으로 구성됨.
- 부가조사의 경우에는 아동, 복지 인식,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2006년부터 3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순환 주기에 따라 2017년 12차 조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네 번째 부가조사가 수행됨.

■ 조사 방법

-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원이 조사 대상 패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 대상 가구원을 만나 조사 대상이 응답한 내용을 현장에서 CAPI 프로그램(2010년 5차 조사부터 도입)에 입력하는 타계식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함.

■ 2017년 12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수행 개선 사항

- 장애인 부가조사 표본의 추가 확보
 - 장애인 부가조사는 3차 조사의 표본 중 조사 대상 이전 연도에 탈락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장애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 3차 조사 당시 표본 수는 총 1000명이었으나, 11차 조사 대상자 중 한 번이라도 장애인 부가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가구원은 502명이었음.
- 12차 장애인 부가조사에서는 3차, 6차, 9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조사 완료된 사람(총 502명)뿐만 아니라 11차 연도 복지패널 조사 대상 중 이전에 장애인 부가조사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 가구원 전원(총 866명)을 포함하여 조사함.

■ 2017년 12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수행 결과

- 조사 완료 가구
 - 11차 조사를 완료한 조사 대상 원표본 4560가구 중 4398가구를 12차 패널 조사에서 완료함. 원표본 가구 기준 조사 완료율은 96.45%로 높은 수준임.
 - 12차 조사에서는 원표본 4398가구에 더해 기존 분가 가구와 올해 발생한 추가 분가 가구를 포함한 683가구, 신규 패널 가구인 1534가구 중에서 조사가 완료된 1500가구까지 총 6581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조사 대상 가구 기준 95.67%)하였음.

■ 12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활용한 기초분석 결과 제시

-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경제활동 상태, 가구경제(소득, 지출, 재산 및 부채 등), 주거 및 건강, 가족, 생활 실태와 자원활동, 사회보장 관련, 장애인 부가조사의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함.
- 또한 12차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빈곤 및 소득이동성, 혼인과 출산 경험의 영향 요인, 생계 및 의료지원 이용 경험의 변화, 장애인 부가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

정책 제언

■ 사회복지 관련 패널 데이터가 구축됨으로써 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함.

- 빈곤층을 포함한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와 실태, 사회보장, 경제활동 상태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12차 조사를 기반으로 '2017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본 보고서를 통해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는 연구자들이 이 자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 국민의 복지 실태와 복지 욕구를 정태적, 동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는 복지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개선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복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적 인프라 제공이 가능함.

- 사회복지 관련 통계 인프라 정비와 더불어 사회복지 관련 기초자료 생산 시스템을 마련.

■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영역을 넘어 사회과학 전 영역에 걸쳐 학문적 논의를 위한 기초적 통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문 분야별 연구 활성화와 교류 활성화에 기여함.

- '한국복지패널'은 한국의 대표적 패널로서 사회복지학, 경제학, 사회학, 가정학, 보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훌륭한 학제 간 연구의 기회를 제공함.

연구보고서
2017-39

소득보장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Improving Income Security System of Korea

연구 책임자 강신욱
공동 연구자 노대명, 이현주, 정해식, 김계환, 김근혜, 조한나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한국의 소득보장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득보장제도의 체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소득보장제도의 범위 안에 있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는 물론 취약 집단이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현금 급여를 대부분 포괄하여 검토하고자 하였음. 또한 이들 제도의 급여 수준을 일정 부분 인상하거나 대상자를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에서 나아가 제도 간의 비중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근본적이고 장기적 관점의 대안을 찾고자 하였음.

연구 내용

- 한국의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고 보험 가입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제도 적용이나 보험료 징수가 용이한 집단을 먼저 제도로 편입시켰음. 그 결과 정작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집단들이 사회보험에 편입되는 시점이 늦었고 여전히 사회보험 가입률은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임. 한편 공공부조제도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나 엄격한 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그 결과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급여 충분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인구구조 및 가구 구성의 변화는 소득보장제도의 미래에 작지 않은 도전 요인임.
 -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되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감소, 노동

시장의 양극화와 소득분배의 악화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결국 디지털 전환의 확산은 경제사회의 구조적 특징과 역량,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 등의 확산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에도 의존하지만, 불가피한 구조 전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합의의 유무에도 크게 의존한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사회보험 중심형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서, 최근의 소득보장제도 개혁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보편성에 대한 강한 지향, 둘째, 소득보장제도와 경제사회적 현실 변화에 대한 조응성 제고, 셋째, 사회보험 중심형 소득보장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자원 조달 방식의 모색, 넷째, 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노력임.

- 소득보장제도에서 현금과 현물 급여 제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사회보장제도가 소득 확충뿐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려면 기초 욕구에 대응하는 현물 보장도 강화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기본소득과 같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전략은 소득보장제도의 현재 사각지대 문제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음.

- 즉, 비전형, 비정규 노동의 증가에 따라 이들을 사회보험이라는 제도의 틀 안에 편입시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사회보험이 아닌 다른 형태의 제도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한국의 경우 비전형,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역 가입자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가입자의 속성을 함께 고려한 분석이 필요함. 따라서 사회보험의 포괄 범위를 넓히는 방법으로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제도뿐 아니라 다른 소득보장제도 전반의 포괄성과 충분성 문제를 세부 집단 별로 살펴보았을 때, 노인 빈곤 가구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빈곤 가구들에서는 수급

자 비율과 빈곤 격차 해소율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가구 특성을 불문하고 현금지원 중 기초보장급여가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크다는 점은 소득보장체계 재편의 필요성을 보여줌.

- 이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장애인과 한부모 가구 등은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한부모수당 등의 포괄성과 급여 수준을 확대하고 기초보장급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아동 가구를 비롯한 근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는 빈곤 가구의 경우 현행 제도의 개편 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책 제언

- 현재의 한국 소득보장제도는 기본소득과 같은 급진적 대안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성의 확대와 제도별 비중을 크게 조정할 여지가 많음.
- 사회보험 지역 가입자 확대 전략은 비전형 취업자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일 수 있으며, 근로 무능력 집단을 대상으로 한 급여의 보편성을 높이는 방안과 근로 연령대 빈곤층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연구보고서
2017- 41

기본소득기반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A Comparative Study on Effectiveness of UBI-based Social Insurance System

연구 책임자 김중훈
공동 연구자 장인수

연구 목적

-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사회보장 원리로서 성격과 배경에 대한 동의는 부재. 더불어 제도 도입의 가능성, 도입시 효과성에 대한 분석 방법, 정책의 성과와 가치에 대한 판단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그 단초가 되는 종합적 시각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하고자 함.

연구 내용

- 기본소득 관련 선행연구와 논의의 고찰을 통해 우리현실에 부합하는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한 정책적 개념을 규정.
 - 역사적으로 기본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정치철학과 정책이념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대체로 사회공동체의 부조를 통해 구성원의 인권과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들로서 자원조달-지출방식의 조합 가운데 하나로 기본소득을 이해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의 정책적 관심과 연구도 기초보장과 소득보조의 대안적 형태로서 기존의 기초보장제도의 형식과 제도의 틀에서 기본소득을 이해.
 - 하지만, 사회보험제도가 주로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수급권이 보장되는 소득기반 재원 및 구조를 따르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 방식의 대안에 대한 논의는 사회보험 자원조달을 포함한 보다 넓은 스펙트럼에서 논의되고 있음.

- 기본소득에 관련한 해외의 다층적, 다원적 실험시도는 이러한 움직임의 반영에 더 가까워서, 기존의 협의의 기본소득 논의와 혼란을 빚고 있음.
- 기술과 과학의 비약, 전문화, 글로벌화, 양극화, 고령화 등의 요인이 근로기반 소득과 이에 기초한 사회보험(수급권) 형태를 위협하는 중장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정책적 준비와 논의가 필요.

■ 기본소득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이러한 이분성(dichotomy)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기준으로 대체로 확연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리의 정책적 접근 역시 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함.

- 따라서 기존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차원의 논의를 확장하여 공적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전체의 대안적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제반 사회보험 자원조달-지출-제도재정추계와의 분석적인 비교 평가가(실험적으로라도) 시도될 필요.

■ 제도 도입의 장기적 가능성이 논의되는 단계에서 기존 제도와와의 실증적 비교평가는 가능하지 않으나, 단기적인 기본소득 실험사례, 기존 제도에 대한 평가 결과로부터 간접적인 분석 방법론과 실제 분석 예를 제시함.

- 해외 기본소득 관련 정책실험 사례들을 성격과 범주에 따라 구분하고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의 규모와 기간의 한계로 의미있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불가능함.
 - 기존의 기초보장(소득보조)제도 및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여의치 않음.
- 정책 이념과 가치관에 종립적이면서 정성적인 비교가 가능한 분석방법론으로 동태행위모형에 기반한 구조실험모형이 적절함을 주장·제안함.
 - 이 연구에서는 모형의 설계 단계에 그쳐 실험가능한 모형의 제시와 실험의 시범·시현 실시까지는 이르지 못함.

- 적어도 정책적 환경과 사회경제 여건이 그러한 정책적 수요를 낳은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시작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연구 초기단계인 사회보험 및 사회정책 분석 동태행위모형 개발 연구를 기본소득 관련 분석 모형으로 확장하는 연구로 연계하여 정책 논의의 기본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언

-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사회보험을 포함한 근로소득기반 사회정책으로 확대, 심화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보고서
2017- 43

근로빈곤층의 부채에 대한 질적연구: 부채발생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Household Debt of the Working Poor in Kore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Causes and Ripple Effects

연구 책임자 노대명
공동 연구자 박창균, 박상금, 한솔희, 김솔휘

연구 목적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이것이 경제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커지고 있음. 이는 저축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가계부채는 개인과 가족의 삶, 사회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 근로빈곤층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실직과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부채를 지게 될 잠재적 위험이 큼.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위험성 또한 큼.

연구 내용

-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영국, 프랑스, 일본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이는 서로 다른 경제사회시스템 하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각국의 금융당국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왔는지 보여줌.
- 저소득층 가계부채가 규모와 부담 정도, 그리고 상환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다른 소득계층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 소득 또는 자산 대비 부채 규모,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등 부채 부담을 측정하는 각종 지표를 점검한 결과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은 고소득층에 비하여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변동금리 신용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구조 측면에서도 취약함.
- 근로빈곤층은 빈곤층 중에서도 일정한 소득능력을 전제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가구의 소득능력이 취약한 집단임. 그러나 아동이나 학생 자녀를 양육에 지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가계부채를 감수할 개연성이 큼.
- 이들의 가계부채는 소비형 가계부채가 큰 역할을 함. 가계부채의 용도를 보면, 생활비 마련이 38.2%로 가장 높고, 교육비 마련이 15.2%에 이룸. 주거와 관련된 항목의 합이 교육비보다 크고, 이는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에서 생활비로 인한 부채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점을 시사.

■ 심층면접을 통해 가계부채가 발생하는 원인과 경로, 그것이 가족의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이들이 가계부채에서 탈출하기 위한 노력과 어려움을 확인.

-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질적 여성가장들은 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자녀 양육에 집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음.
- 과중채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지출, 주로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함.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과정에 있는 여성가장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러한 위험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빈곤과 가계부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립 노력이 쉽지 않음. 많은 과중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이력으로 취업하지 못하고 창업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것이 부채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정책 제언

- 금융정책 제언으로는 서민금융시장의 정상화의 관점에서 접근하였음. 현재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미소금융대출 사업의 재설계, 협동조합형 서민금융기관의 육성, 채무자 친화적 신용상담제도의 활성화를 제안.

- 사회정책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할 강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음. 근로빈곤층의 낮은 소득능력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을 보충하는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발생을 억제해야 함.
-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여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에 대한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이들의 취업능력을 고려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에 대한 통계 인프라 구축을 통해 표적집단의 규모와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것을 제안.
-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가계부채 문제의 충격을 다중채무자 및 자살 문제와 연동시켜 대비할 것을 제안.

연구보고서
2017- 44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coordination mechanism)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alternatives of policy coordination mechanism in social security policy

연구 책임자 정홍원
공동 연구자 최호진, 박상철, 류진아

연구 목적

- 사회보장정책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 운영 난도도 높아지고 있어 정책조정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사회보장정책의 일관성 확보, 새로운 정책과 기존 정책의 조화를 위해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포함한 사회정책 거버넌스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자 다음 4가지의 연구 목적을 설정함.

- 사회보장의 정책조정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함.
- 최근 사회보장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조정 사례를 분석함.
- 주요 국가들의 정책조정 기제와 정책조정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사회보장정책의 조정 기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연구 내용

- 정책조정의 개념과 현황에 대하여 검토함.

- 정책조정을 좁은 의미로 정의한다면 갈등 해결을 위한 조율이라 할 수 있으며, 보다 넓은 의미로는 관련 정책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의 구성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행정부 내에서 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과 기제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사례를 검토하여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함.

- 개별 국가의 정부 형태에 따라 정책조정기구와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정책조정 권한이 최종 정책결정권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동일함.
- 정권 교체와 같은 정치적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정책조정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조정에서 활용되는 공공서비스 협정 방식은 상당한 유용성이 존재함.
- 프랑스 행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정책조정 방식인 '부처 간 기구'도 검토할 가치가 있음.
- 일본은 정책조정이 필요한 상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음.

■ 최근 사회보장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과 저출산·고령사회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례를 검토함.

-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의 경우 정책 갈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 또는 확산되는 경우 합리적 정책조정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갈등 완화와 정책조정을 위한 중재기구가 부재한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점, 정책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형적 봉합을 하는 경우 갈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
- 위원회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최고 정책결정권자 또는 위원장의 인식과 태도에 의해 좌우되며, 행정부 내부의 다양한 의사결정체계와의 기능 중첩, 경합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정부와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 조직이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음.

정책 제언

■ 사회보장정책 영역 정책조정 기제의 개선을 위하여 4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함.

- 부처 내 정책 기획 및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강화 또는 신설.
-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의 역할 명확화를 통한 수직적 정책조정체계 개선.
- (사회)관계장관회의 재편과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수평적 정책조정체계 개선.

- 위원회는 행정부 결정에 대한 견제와 사회적 협의기구의 역할로 재설정.

■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도출함.

- 사회보장정책의 합리적 결정과 효과적 조정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의 역할 정립이 필요함.
- 전문부처주의 확립과 사회보장정책 전반의 정책조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복수 차관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정책조정 기제 개선을 위해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현행 관계장관회의를 재편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편성권의 분권화가 동반되어야 함.

연구보고서
2017- 48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복지환경의 변화와 대안적 복지제도 연구

Designing A Korean Welfare State Model in a
Changing Policy Climate

연구 책임자 **여유진**
공동 연구자 김미곤, 김수정, 박종현, 백승호, 이상호, 이승윤, 정준호, 주은선, 김성아, 조한나

연구 목적

- 본 보고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특징과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여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방안과 대안 복지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 내용

-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복지국가 형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복지국가에 미칠 파장을 예측하고자 하였음.
 - 한국은 서구 복지국가와는 대조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중화학·수출대기업 중심의 산업 육성과 직접적인 금융지원, SOC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도 직접적으로 개입한 데 비해 가정경제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가족과 시장의 영역에 맡겨 둔 채 거의 개입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였음.
 - 그 결과, 1997년의 경제위기가 고스란히 사회적 위기로 전화, 경제적 위기를 사회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초저출산, 신용불량, 부동산가격 급등과 가구부채 급증, 높은 비율의 노인빈곤과 자살 등의 문제들이 추가되면서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 위협.
 - 이에 더해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기술 혁신으로 노동시장 불안정성 확대, 디지털 인공지능과 로봇 사용에 따른 숙련 일자리의 감소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비정형 노동의 증가가 예고됨.

■ 이러한 현재의 특성과 미래의 파고에 맞서 근로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가족지원제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 기존 복지제도, 즉 근로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가족지원제도,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모두 형식적 외양이나 양적 측면에서는 급격히 성장해 왔으나 제도의 포괄성과 적절성, 그리고 제도 간의 연계성과 관계 설정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문제점이 있음.
 - 근로계층에 대한 지원의 경우, 높은 자영업자 비율,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심화, 그리고 새로운 기그경제하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와 같은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사회보험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함. 또한 한국 노동시장의 근로계층의 불안정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근로 연계 복지제도의 지원 수준, 보장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가족지원정책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과 확대를 통해 양적 성장을 성취한 대신 개별 프로그램의 질적 미성숙 문제와 단시간에 여러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으로 도입되어 정책 우선성과 프로그램 간 정합성 문제를 갖게 되었음.
 -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다층체제로 자리잡았으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노후 보장 역할이 미흡함. 기초연금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인 가구 수급 기준 소득인정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기초연금 인상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도 크지 않음.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의 가입 이력이 길어지면서, 소득비례방식의 공적연금으로서 기대되는 기본적인 수준 이상의 소득보장 기능을 다하지 못함.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보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응성이 높은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사적연금 축진을 위해 도입되어 퇴직금제도와 병행되고 있음. 개인연금 역시 여타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과 같이 고용 지위 및 소득 수준에 따른 가입률 격차와 보장성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음.

■ 또한 대안적 복지제도로써 자산 기반 복지제도,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그리고 기본소득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였음.

-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산 기반 복지제도는 디딤씨앗통장, 희망·내일 키움통장 등이 있으며,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아동과 중장년 근로빈곤층 위주에서 최근 청년층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임. 하지만 여전히 지원금액이 적고 주로 빈민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협소하게 운영되는 등의 한계가 있음. 한편 자산유동화제도로써 주택연금은 공공성이 가미된 역모기지제도로 세계적으로 상당

히 성공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소득이 빈곤한 노인이 자산도 빈곤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적경제는 경제활동의 목적을 돈벌이가 아니라 살림살이와 사회적 필요의 충족에서 찾으며, 경제활동 및 노동분업의 원리를 재분배·상호성·가정경제·교환으로 재구성한 플라니의 작업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음. 국내 사회적경제의 현황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고용 비중은 1.4%, 유럽연합(EU)은 6.5% 수준이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은 1만 4948개, 고용 인원은 9만 1100명임. 한계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부지원 의존성 심화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체성 훼손 위험,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생태계 미형성, 부처별 별도의 정책 수행에 따른 폐해 발생,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됨에 따른 사회적경제 협소화 등이 있음.
- 공유경제는 미사용 자원(이나 재화 또는 서비스)을 소유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함께 나눠 쓰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음. 자원의 공유가 확산되면 소유 기반 아래서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경제는 새로운 복지모델의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음. 한편 오늘날 복지와 관련된 공유경제 논의는 노동시장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 공유경제의 성장이 비정규직이나 불안정 고용의 양산으로 이어지면서 작업자에게 시장의 위험이나 불확실성이 그대로 전가되는 문제가 야기됨.
- 기본소득은, 노동 없는 미래와 불안정 노동의 확대가 진행되고 전통적 복지국가가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대안적인 복지국가의 재구성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음. 기본소득은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교부되는 주기적 현금'이며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지급, 충분성을 특징으로 함.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기본소득 원칙들을 실현하기 위한 실험들을 필요로 함.

정책 제언

■ 기존 복지제도의 재편 방향

- 기존 복지국가 제도들의 문제점에 대응하여 공통적인 재구조화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안들이 제시됨.

- 첫째, 좀 더 큰 영역에서의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둘째, 향후 재구조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도 간 연계성의 확립임. 셋째, 재구조화에서 미래 변화에의 대응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 각 영역에서의 재구조화 방안 및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음.
 - 근로계층을 위한 복지제도의 경우, 복지국가의 주축으로서 사회보험 강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의 구축과 노동 이력과 덜 연계된 방식의 사회수당 강화 등의 과제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
 - 가족지원제도의 경우, 향후 프로그램의 이용보편성, 급여적절성, 젠더 효과성을 높이고, 프로그램 간 정합성 및 우선성을 고려하여 급여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도 가족지원과 관련하여 돌봄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함.
 -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경우 재구조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우선 기초연금의 경우 급여액을 상향하고 보편적 수당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 이상과 부과대상 소득 상한 인상 등을 제안함. 또한 기초연금이 유일한 소득원인 노인을 위한 노인특별부조제도 도입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대안적 복지제도들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첫째, 무엇보다도 제안되고 있는 대안들은 기존 복지국가에 대해 '양날의 검'과 같음. 둘째, 대안들 모두 누구에게 이니셔티브가 주어지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셋째, 제도의 좀 더 정치한 설계도면과 함께 실현 가능성과 문제 해결 능력, 확대 가능성과 확대 범위, 기존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우위성 입증, 중장기 소요 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연구보고서
2017- 51

사회보장제도 성과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about the Improving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Social Securities

연구 책임자 오윤섭
공동 연구자 강지원, 이규환

연구 목적

■ 사회보장제도의 성과관리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 복지자원의 제약 속에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성과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이 필수적.
- 정책담당부서 및 사업부서에서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정립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
-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성과에 대한 의미 고찰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보장제도 성과관리체계의 구조와 적합성을 분석하여 사회보장 분야의 성과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 내용

■ 성과의 속성은 업무 자체, 업무 수행 역량, 업무 수행 결과, 업무 수행의 지속가능성 등 매우 포괄적인 개념임.

- 성과와 성과 기준은 고정되어 불변인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정책 목적, 정책 환경 그리고 집행 수단에 따라 가치 기준에 의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되며, 비판적 검토를 통해 새로이 변경 가능.

■ 사회서비스 정책의 목적과 사회서비스 생산과 이용에서의 특수성은 성과관리라는 측

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그리고 개인 등 민간 부문의 역할이 매우 큼.
- 서비스 제공 방식은 정부가 민간 사회복지법인 및 지자체 시설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탁 생산하도록 하는 방식, 바우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스스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성과관리체계는 아직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위탁계약과 바우처라는 정책관리 수단이 원래의 간접적인 성과관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통제도 완화된 상태.
- 하위 차원에서의 성과관리 외에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사회보장위원회 등 정책 성과를 관리하는 상위 차원에서도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관리는 아직 부족함.
- 성과관리의 중점이 아주 협소하게 정해져 있거나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성과지표로 성과관리를 하는 등 사회보장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는 매우 동떨어진 방향으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정책 제언

■ 성과관리 주체 및 제도 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이 필요함.

-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상위 기관 또는 개별 부처 자체의 성과관리제도 간 기능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 직접적인 성과관리제도와 간접적인 성과관리제도 간 보완적 정비 필요함.

■ 사회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가 맺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간접적 수단(위탁 계약, 서비스 가격, 이용권 사용 등)들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성과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연구보고서
2017- 53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공공부조 제도(소득 보장)를 중심으로

The EFC(Error, Fraud, Corruption) in Public Assistance and Coverage Gap

연구 책임자 임완섭
공동 연구자 오윤섭, 김문길, 황주희, 강지원, 박형준, 이규환, 김명중, 윤여선

연구 목적

■ 사회보장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비적격 수급 행태가 관측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사각지대와 비적격 수급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장 모니터링 모형을 현금 급여 형태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공공부조제도에 적용함으로써 정책 수행 전 단계에 대한 실증적 관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관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모니터링 조사 결과 등 현금 급여 수급의 적격성 및 사각지대 관리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적격 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 내용

■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인식과 관리 운영 체계, 그리고 복지 행정 활동과 제도별 사각지대에 대한 인식

- 사각지대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의 경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 제도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임.
- 급여 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대상 급여의 보장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행정 활동과 관련된 인식에서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의 목표 달성과 정착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으며, 사각지대 발굴 측면에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맞춤형 복지팀과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복지 부정 수급에 대한 인식과 관리 운영 체계, 그리고 복지 행정 활동과 제도별 사각지대에 대한 인식

- 부정 수급 관리 운영 체계 중 부정 수급 적발 시 벌칙이나 과태료에 대한 규정 등 법체계의 명확성에도 불구하고 관리 체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부정 수급 관리 전략의 경우 부정 수급 예방에서 대응에 이르기까지 복지 부정 수급에 대한 교육,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의 연계, 현장 방문, 주기적인 정보 업데이트 등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복지 부정 수급을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현재 사회복지 사업의 대부분이 시군구를 통해 전달되면서 시군구의 사회복지 사업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복지 부정 수급 관련 업무까지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조직의 체계와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언

■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사례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복지 전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연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사각지대와 부정 수급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의 모니터링 수행이 요구됨.

■ 부정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접근할 수 있음.

- 정부 재정 관리의 일환으로 협소한 의미의 '부정 수급'에서 벗어나 광의인 '부적정 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부적정 지출의 기초 통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통계는 개별 부처에서 세부 기준 없이 발표하는 것을 지양하고 범부처가 협조하여 공식적인 승인 통계로 생산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단위에서 부적정 지출의 내부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보고서(수시)
2017- 0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Abolition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연구 책임자 **여유진**
공동 연구자 김미곤, 황도경, 김명중, 정용문, 정재훈, 이주미

연구 목적

■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음. 그러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인으로 비판이 제기됨.

- 이에 제1차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¹⁾ 발표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는 물론 부수효과(side-effects)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점진적 폐지에 따른 긍정적 기대 효과와 아울러 부수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며,

- 이를 토대로 기대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사전 준비 작업-를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 내용

■ 해외 주요국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관계부처 합동. (2017. 8. 10.).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안.

- 독일의 경우 공공부조제도의 특성상 보충성 원칙을 포기하기는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소득 인정 기준을 높은 수준으로 올림으로써 부양의무자 규정을 사실상 폐지.
 - 그러나 독일은 노인빈곤율 악화 예방 기능의 상당 부분을 연금제도가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현 세대 노인 대다수가 국민연금 수급에서 비껴나 있으므로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재정의 급속한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생활보호비에 대한 정부 부담을 축소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 급여를 받는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사회보장제도 및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급여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일본 정부의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금을 포함한 소득 보장정책과 생활보호제도의 향후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호주의 사회보장체계는 한국과 매우 다른 발달 과정을 거쳐 왔으며,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잠재적으로 노인 수급 대상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때, 호주의 노인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그 특성, 기회요인 및 제약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의 점진적 폐지에 따른 긍정적 기대 효과로,

-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효과와 빈곤지표의 실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 수급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빈곤층의 삶을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복지-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국한되는 조치라 할지라도-에 있어 가족-시장-국가의 역할 분담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등 공적부양과 사적부양 간 역할의 재정립을 꾀할 수 있음.
 - 이는 적어도 '최저보장(national minimum)'에 있어 국가 책임이 실질적으로 명시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반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수 효과-주로 부정적 기대효과-도 예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제도 완화 시 기초보장제도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때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비형평성과 삶의 질 역전이 더욱 두드러지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 간 대체 효과와 가구 분리효과로 인한 수급자 증가 또는 재산의 사전 증여 후 기초보장수급 편입자 증가 등 사실상의 편법 수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민법에서는 부양의무 조항이 존치되어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경우 상위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민법과의 관계에서 상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정책 제언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에 따른 기대 효과와 관련 부수 효과, 그리고 외국의 관련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앞서 어떠한 사전적 준비 작업이 요구되는지를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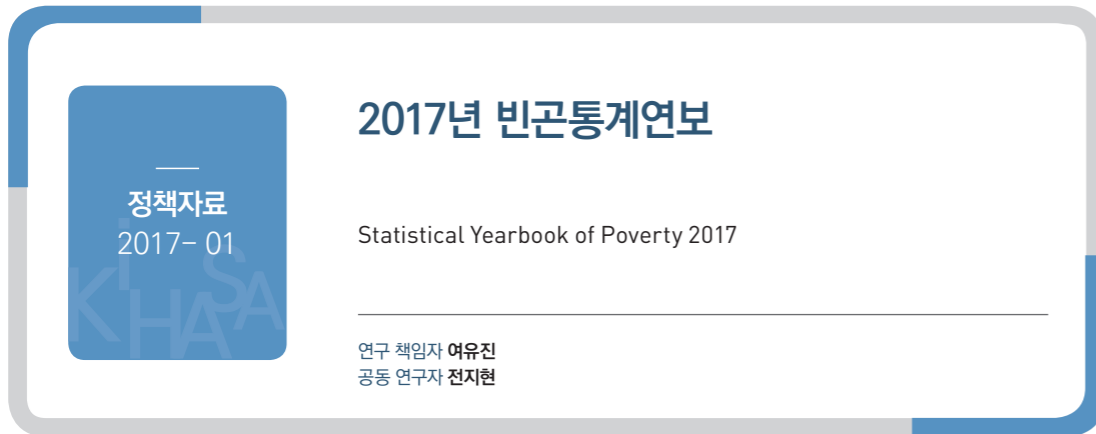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에 따른 단기 정책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 행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영향평가와 향후 완전한 폐지에 따른 추가 수급자 추정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음.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을 위한 대규모 조사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며, 이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예상되는 부수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에 영향을 받는 타 제도(법령) 및 공제제도 정비를 통한 형평성 제고 방안 강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앞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다층적 의료안전망 강화 방안 마련과 더불어 현행 의료급여 재정 누수요인 관리 기전 마련 필요.

■ **또한,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민법상 부양의무 조항이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상 부양의무자 규정의 재정비와 구상권 청구 장치의 마련이 필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상당한 부수효과가 기대되는바, 특히 기여에 의한 급여 수급자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체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로드맵하에서 단계적 폐지 방안 도출 필요.
 - 의료급여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전체 의료보장체계의 틀 속에서 의료급여 후속 대책에 대한 구상 필요.



연구 목적

- 우리나라는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빈곤 및 불평등과 관련한 연구가 증가해 왔으며 관련 자료의 수요도 증가함.
- 빈곤 및 불평등과 관련한 지표는 취약계층과 사회정책 대상자의 규모와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함.
 - 기초자료의 분석은 소득분배구조의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된 빈곤통계연보(2006~2016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빈곤 및 불평등 관련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입안자와 관련 연구자에게 정부의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정책 수립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연구 내용

- 다양한 빈곤 및 불평등 지수를 산출해 소득과 지출, 자산분배 실태를 시계열로 제시.
 - 빈곤통계 생산 방법에 대한 내용 정리, 분석에 활용된 빈곤지수와 소득분배 및 불

평등지수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함.

- 실증적 방법으로 소득 및 지출 유형별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불평등도를 산출함.
- 매년 발간되는 빈곤통계연보에서는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의 시계열을 추가하는 작업과 더불어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맞는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올해는 인구 유형별 빈곤 중 연령 범주별 빈곤 지표를 추가하였으며, 자산분배 관련 지표 중에서는 자산 빈곤율을 추가로 제공함.

■ 빈곤 및 소득계층 분포와 인구 유형별 빈곤

- 빈곤 및 소득계층 분포
 - 빈곤(가구)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 중위소득·지출 50~150% 분포
- 인구 유형별 빈곤율 제시
 - 여성가구주가구 빈곤율, 아동 빈곤율, 노인 빈곤율, 취업자 빈곤율, 한부모가구 빈곤율, 1인가구 빈곤율
 - 연령 범주별 빈곤율: 18세 미만, 18~25세, 26~40세, 41~50세, 51~65세, 66~75세, 76세 이상

■ 소득불평등

- 소득점유율, 분위수배율, 지니계수

■ 자산분포

- 소득분위별 자산점유율, 자산분위별 자산점유율
- 자산분배지표: 중위자산 기준 빈곤(가구)율, 자산 지니계수

정책 제언

-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는 가정해체, 자살률, 범죄율 증가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해 사회

적 비용을 증가시킴. 더 나아가 사회적 배제와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는 어느 집단이 취약계층인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사회정책의 방향, 정책 대상자의 규모 및 관련 정책의 지출 규모를 결정해야 함. 이때 빈곤 및 불평등과 관련한 지표가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빈곤 및 불평등의 변화는 정책을 실행한 이후의 정책 효과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결과는 OECD 등의 국제기구와 국내외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사회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공무원과 학자,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함.

- 소득 및 지출 관련 변수의 빈곤·불평등 지표와 더불어 자산분배와 관련된 지표를 함께 제공하여 소득빈곤에서 확장된 범위의 빈곤을 살펴보고자 함.
- 다만 다양한 지표의 현황과 추이가 시사하는 바를 설명하거나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부와 학계 그리고 관심 있는 독자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수를 생산,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임.

—
정책자료
2017-02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Monitoring Evaluation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Frontline Worker Forum

연구 책임자 정은희
공동 연구자 김현경, 이병재

연구 목적

■ 본 사업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를 중심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제도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임.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와 혼용)가 2015년 7월 이후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되면서 제도 집행 대상자가 인식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에 초점을 둠.

연구 내용

■ 현장 전문가를 통해 개별급여 모니터링 결과를 맞춤형 급여와 자활지원제도 개선 방향으로 나누어 제안하였음.

- 맞춤형 급여와 관련해서는 보장 수준 강화,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급여의 효과성 강화, 전달체계 인력 충원과 전문성 강화,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 등이 필요함을 제안함.
- 자활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목표, 자활센터 권한, 자활프로그램 보완, 대상자 선정과 관리 방식, 자활급여 수준, 자활 사례관리 인력 충원과 전문성 강화, 효과성 관련 개선 사항들을 제안함.

정책 제언

■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함.

- 맞춤형 급여 체계에서는 생계급여와 구거급여의 보장 수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근로 능력 판정 기준 현실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점진적 폐지, 탈수급을 위한 유인제도 보완,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제안.
- 자활 대상자 특성 변화에 맞는 사업 목표 재설정, 보호 및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보완 및 신설, 현실에 맞는 대상자 선정 기준 도입, 자활급여 수준 인상, 탈수급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집중적 개입·지원을 제안.

연구보고서(수시)
2017-05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Measuring and Analyzing the Korean Happiness Index

연구 책임자 김미곤
공동 연구자 여유진, 정해식, 박이택, 김성아

연구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행복의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대리변수로 GDP를 사용하였고, 소득과 행복에 관한 횡단면 분석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대리변수로서의 GDP는 일정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었음.
 - 하지만, 소득과 행복간의 시계열 분석에서,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스털린의 역설(The Easterlin Paradox)'이 1974년 발표된 후 사회진보를 측정하는 대안적 지표로서의 GDP의 한계가 더욱 부각됨.
-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체계, 부탄의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지수, 영국의 국민웰빙(National Well-being) 등 최근 발표되고 있는 국제적인 행복지수는 삶의 질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하여 개발되었거나 자국의 경제·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개발되어, 우리의 현실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사회진보 지표로서의 행복지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 연구의 목적

-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요인별 가중치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지수를 산출.

연구 내용

- 행복을 측정하는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결과, 개인 및 사회의 측정 단위에 따라 주관적 만족, 관계, 지역사회, 자연환경, 생활의 질, 경제적 안정, 일, 건강, 주거, 교육, 참여와 거버넌스, 안전, 거시적 조건, 자유, 관용 등의 영역과 각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제시되며, 각각은 사회적 우선순위에 따라 중요도가 결정되고, 추상적 관념으로서의 행복을 구성하는 영역과 지표를 선택하기 위하여 그 시대의 가변적인 필요를 반영하는 공적 논의의 과정이 요구됨.
-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접근방법을 채택함.
 - 첫째, 행복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으로서의 즐거움이 아닌 삶에 대한 만족, 혹은 가치 평가의 공리(公利)적 접근을 지향.
 - 둘째, 문화적 공통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며 행복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한국인의 행복의 영역과 지표를 구성.
 - 셋째, 관념적 개념으로서의 행복을 구성하는 다차원적인 영역과 지표를 선택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여론을 반영하고자 현 시대 공적 이성(public reason)을 활용.
- 2차례의 전문가 이메일조사와 일반국민 전화조사를 통해 생산된 기초자료를 활용해 산출한 행복지수에 따르면, 실업자, 저소득층의 행복도가 낮은 집단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
 - 또한, 실업자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행복의 수준은 월등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은 평균적으로 낮은 행복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행복의 내부 분산도도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소득 이외의 요인에 의해 행복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중위 행복도(6.46점)의 50%, 60%, 75%로 계측된 행복빈곤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42~68%에 이를 정도로 높아 경제적 박탈과 결핍의 경험이 행복의 결핍을 야기하는 경로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대안이 요구됨.

정책 제언

- 본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요인별 가중치를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고, 행복 개념을 탐색, 결정요인 및 요인별 가중치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산출된 행복지수 점수와 주관적 행복도, 삶의 만족도, 미래 안정성 점수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출된 행복지수의 안정성과 타당도를 검증했음. 이를 바탕으로 발견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보다 엄밀한 연구가 필요.
 - 둘째, 한국인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일 영역'과 '건강 영역'에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
 - 셋째, 실업자, 저소득층의 행복도가 낮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

연구보고서(수시)
2017- 06

포용적 복지 철학과 정책방향

The Philosophy of Inclusive Welfare and Policy Vision

연구 책임자 김미곤
공동 연구자 여유진, 김성아

연구 목적

-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발간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취임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를 ‘포용적 복지(Inclusive Welfare)’라고 명명하고 있음.
- ‘포용적 복지’가 복지정책 수행의 등대(나침반) 역할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배경, 개념, 정책방향, 정책과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 정권 초기인 현재로서는 ‘포용적 복지국가(Inclusive Welfare State) 달성을 위한 구성 요소로서의 “포용적 복지(Inclusive Welfare)”라는 개념 설정에 머물고 있는 상태임.
 - 따라서 “포용적 복지”에 대한 철학적 배경, 개념, 정책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필요.
- 본 연구는 포용적 복지에 대한 철학적 근거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성격규명과 실현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포용적 복지의 철학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둠.

연구 내용

■ 복지의 현 좌표와 시사점

-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산 위기는 ‘압축 성장’과 ‘위기의 압착’으로 설명되고, 전근대, 근대, 탈근대적 사회·경제·문화·가치관이 공존하여 유교적 가족문화와 가족이기주의, 연줄망과 연고에 기반한 네트워크 정치, 정경유착과 재벌위주의 경제, 제도적 합리성 결여되어 있음.
- 사회복지의 안정화 기능이 취약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청년과 노후 빈곤이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의 안정(security)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생애주기상의 사회적 위험(social risk; 실업, 질병, 장애, 노령 등)에 대한 안정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음.

■ 제2부 ‘포용적 복지’ 철학

- ‘포용적 복지’의 핵심 철학은 행복권(무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0조)과 사회권(헌법 3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31조), 근로의 권리(32조), 노동3권(33조), 환경권(35조) 등에 대한 고려임.
 - 그리고 분배정의, 사회통합, 보편주의 복지, 전 국민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의 포용성,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취업 가능성을 증진하는 사회투자 의 혁신성,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발전에 대한 대응으로서 선제적 대응성, 황금 사각형 모형(이행노동시장 포함)의 선순환성 등임.

정책 제언

■ ‘포용적 복지’ 정책방향

- 기본 방향은 인본주의로 물질중심에서 사람중심, 성장 중심에서 복지중심, 이윤 중심에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사회적 지향을 전환하여 수단과 목적의 전도현상을 극복하는 것임.
-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 실현으로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함.

0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ANNUAL REPORT

2017년 연구 성과

04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협동조합을 통한 청년고용 창출모델 연구
-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 전달체계 연구(I):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정책 기능 및 재정제도 재정립 방안
- 발달장애인 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KiHASA

연구보고서
2017- 11

협동조합을 통한 청년고용 창출모델 연구

A study on youth job creating model based on entrepreneurship

연구 책임자 이철선
공동 연구자 김진희, 이연희, 김성기, 조혜경, 백필호

연구 목적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 방안으로서 청년협동조합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모델 육성 방안을 모색.
 - 첫째, 일반 영리기업의 창업 시 정부 지원이 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는지와 영리기업이 아닌 비영리 사업체의 창업 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 현황을 파악.
 - 둘째, 기존 비영리법인의 대안 모델로서 청년협동조합의 가능성과 지원 방향을 제시.

연구 내용

- 첫째,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조사 등 최근 5년 동안의 거시 통계지표와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지침 등 2차 문헌 자료 등을 통해 기존 청년창업의 문제점을 파악.
- 둘째, 청년창업 세부 기업 모델을 구분한 후 각 청년 지원 사업의 경쟁력과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FGI를 통해 파악.
- 청년창업 모델로서의 청년협동조합의 가능성 검토를 위해 창업 육성 방향, 자금 조달, 창업의식 고취 등 세 부분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검토.

정책 제언

-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청년기업 양성을 위해서는 청년협동조합 육성 방향과 금융 인프라 구축, 그리고 창업교육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
 - 육성 방향에서는 선배-후배 협동조합 간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멘토링 창업 지원 사업을 예비 창업-창업-성장 등의 단계별로 맞춤형하는 것이 필요.
 - 청년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청년협동조합 등 비영리 사업체들을 위한 단기적·장기적 금융 조달 방안이 필요.
 - 비영리 사업체들의 창업을 위한 교육 지원 과제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비영리법인 창업론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연구보고서
2017-37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 전달체계 연구(I):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for Optimizing Public Service Use(I): A Focus on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Public and Private Welfare Agencies

연구 책임자 강혜규
공동 연구자 김보영, 김현중, 김동진, 김효진, 유애정, 최복천, 함영진, 안수란, 권영빈, 이정은, 하태정, 이주민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부문의 공공, 민간 핵심 사업기관들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 역할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서비스·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 간 분담 구조를 진단하여, 통합적 조정의 필요성과 그 과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그간의 전달체계 개선이 '수혜'로서의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을 찾는 과정의 적합성,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었다면, 다종다양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복지사업(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공공성을 지닌 서비스'로서 '선택, 이용'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접근이 요청된다는 점에 주목함.

연구 목적

■ 국내외 사례 분석

- 국내 지자체의 독자적 전달체계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중앙정부 정책에 조응하거나 이를 발전시켜 지역 현장에서 진행되는 전달체계의 변화와 그 시사점을 파악함. 국외 사례도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실태와 복지 현장의 작동을 파악하고자 한바, 정보 접근이 수월한 영미권의 국가를 선택하여 상세한 지자체 중심의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함.

■ 지역 단위 복지 수요·공급 공간 구조 분석

- 복지전달체계의 지역 단위 편차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복지 대상자와 복지 공급기관의 분포를 살펴보고 이들 간의 다차원적 공간 구조 분석을 시도함.

■ 복지 욕구의 특성과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분석

- 그간의 전달체계 연구가 집중했던 공급자의 시각이 아닌 이용자의 시각에서 현재 전달체계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받았는지 상세하게 파악하여 어려움의 원인과 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개선 필요점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함. 이를 위하여 ① 한부모가구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중장년 1인 가구 ④ 노인 단독 가구 ⑤ 발달 장애인가구 ⑥ 청년 중증장애인 등 6유형에 대하여 사례 조사를 실시함.

■ 지역 단위 복지전달체계의 구조와 기능 분석

- 전국 단위로 복지전달체계의 구조, 국가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전달체계, 사업기관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도 간단치 않지만,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작동되는 전달체계의 실태와는 편차가 클 가능성이 높아,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지역 사례 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전달체계의 작동, 사업 운영의 현실을 파악함. 사례 지역인 5개 시군구의 공공·민간 서비스기관 분포를 파악하고, 지역 간 차별성과 동질성, 서비스 영역별 공급기관의 충족도를 확인하며,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 간의 연계·협력 상황을 분석함.

정책 제언

■ 분절화된 전달체계의 문제는 다양한 복지 욕구의 출현과 전문화가 요구되는 서비스의 발전 상황과 결부되므로, 이는 한 가지의 대안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즉 전문화의 전략과 통합성 향상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

-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례의 위기도 및 특수 문제에 특화된 전문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고 관련 서비스 간의 연계체계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일선 복지창구에서는 대상자 발굴, 욕구 진단 과정에서 욕구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음.

■ 서비스의 연속성(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간 점검이 필요함.

- 예컨대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아동·청소년 통합사례관리 수행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12세 이후 청소년에게도 적절한 통합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에 대해서

는 기관(제도)의 통합 방안과 현 제도에 기반한 명확한 의뢰체계 확립의 대안이 가능할 것임.

- 의뢰체계 확립과 함께 유관 기관 간 개별 사례회의체에 대한 교차 참석 의무화, 정기적 교류를 지원하는 방안, 협업이나 서비스 연계와 관련된 규정 개선의 경우 유관 정부 부처 간 공동 작업을 통해 지역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또한 지역 단위의 서비스 통합성, 전달체계의 연계 및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 단위에서 정책조정기구의 운영을 강화해야 함.

연구보고서
2017- 38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정책 기능 및 재정제도 재정립 방안

On the Different Rol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Welfare Provision and Financing

연구 책임자 박인화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과 지방 각각에 적합한 정책 기능과 책임성 있는 재정제도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맞춤형 사회보장'과 '재정분권'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임.
- 동 국정과제와 연관하여 현안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재정지출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임.

연구 내용

- 첫째, 중앙·지방 간 정책과 재정 부담 논거에서는 재정대응성(fiscal equivalence) 관점의 외부효과와 내부효과, 규모의 경제, 주민의 정책 욕구와 선호의 이질성, 납세자 이동성이 비중 있게 고려됨.
- 한편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넘어서는 정책 이슈는 여러 각도에서 종합적 판단이 뒤따라야 하며, 정책 이양과 재정 관계를 재정립할 때 적절한 자원보전 조치와 함께 지방의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함.
- 둘째, 대표적 지방재정 지표인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분권 수준'을 보면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미국, 독일이 재정분권 상위권 국가이며, 우리나라도 지표 값이 관찰 대상 15개국 평균에 근접함.
-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수입 구조상 지방세가 국민 부담의 17% 정도로 OECD 평

균(15%)보다 다소 높고, 지방 자체 수입 대비 70%에 이르는 재원이 이전되므로 지방의 실수입이 늘어남.

- 한편 OECD 회원국 실태에 따르면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분권 수준' 간에는 관련성이 거의 없고 정부 형태에 관한 각국의 헌법적 틀도 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셋째, 해외 사례를 보면 각국은 보조금 운영의 비효율에 직면해 자국 여건에 적합하게 제도를 개선하는데, 출발점은 중앙정부의 정책 목적을 재점검하고 각종 보조금을 조정하는 것임.**

- 전반적인 동향은 제도 간소화와 정책 프로그램 중심으로 불특정보조금화(non-earmarked grants)하면서 지방의 재정 절감 유인과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

■ **넷째,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방향성과 분담의 논거에 비추어 정책 준비가 우선시되는 영역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국고보조사업임.**

-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국고보조사업은 2017년 현재 7개 중앙부처에서 41개 정책 프로그램 아래 207개 세부 사업으로 수행됨.

■ **다섯째, 지방재정 운용에서 세심하게 관찰할 사항은 지방에 부과된 사회보장예산 부담과 가용자원 간의 관계임.**

- 2017년 지방 사회보장 세출은 총 52조 6000억 원으로 이 중 88%가 보조사업이며, 이 사업비는 국비 29조 1600억 원(63%), 지방비 17조 2300억 원(37%)으로 조성됨.
-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같은 기간에 연평균 8.9% 증가하여 가용자원 수입보다 4.3%포인트 빠르게 늘어남.

■ **마지막으로, 재정 운용을 둘러싼 실상을 감안할 때 재정분권의 방향성과 재정지출의 효율 제고에 부합하도록 정책 기능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재정 흐름과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부담을 예측력 있게 진단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도모되도록 해야 함.

정책 제언

■ **첫째, 사회보장 영역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정책 목표를 같이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정책 기능을 재편하여 중앙·지방 간 적절한 기능을 분담하도록 조정해야 함.**

■ **둘째, 지방 이양 프로그램에 대해 중앙은 정책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정책 수행에 따른 성과도 철저히 평가해야 함.**

- 이는 정책 전문성과 방향성은 중앙이 주도하고 사업 선택과 집행은 주민과 밀착된 지역이 행하도록 행정주체 간 역할과 책임 분담을 정착시키는 토대가 될 것임.

■ **셋째, 현행 지방행정 조직의 틀 내에서 선별적 지원과 관련한 차등보조율제도는 특·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적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하도록 함.**

- 일률적인 국고보조율 인상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별 상이한 정책 수요와 재정 부담을 예측력 있게 진단하여 지역별로 차등 지원토록 해야 함.

■ **넷째, 자치단체에 부과되는 재정의무를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 법정지출 사업이 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의 재정의무를 부과하며 가용자원 여건은 어떠한지를 점검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연구보고서
2017- 45

발달장애인 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plan of welfare delivery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연구 책임자 황주희
공동 연구자 김용득, 김용진, 박혜미, 오다은

연구 목적

■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한계

- 장애인복지정책은 각 사업별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고 신체장애인 중심으로만 발전하여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지원 과정에서 소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광역별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맞춤형지원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급하게 발전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 맞춤형지원체계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전달체계 구축

-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이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과정 및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맞춤형지원체계로의 개편 현황과 변화, 쟁점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맞춤형지원체계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전달체계 간 관계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 내용

■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장애인복지전달체계는 복지전달체계와 동일한 체계를 지님.

- 이에 서비스 중복, 획일적인 진입창구, 통합된 행정기관의 부재 등의 한계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많으며 국가 재정의 효율이 저하되는 구조를 유지함.
- 장애등급제 폐지와 맞물려 본 사업의 실시를 앞두고 장애인 맞춤형 시범사업을 3차까지 실시함.
- 향후 본 사업에서 맞춤형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3차 시범사업의 읍면동-시군구 협업모형에서 읍면동 복지행정팀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최초 진입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 전국 17 시·도에 설치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과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과 권리구제, 공공후견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
- 그러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법적 권한의 부재, 서비스 연계 기관의 부족, 사법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타 기관과의 사업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또한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맞춤형지원체계의 관계에서도 설치 및 운영의 주체 정비, 지역 환경에 따른 자체 고유사업의 활성화 등의 역할이 요구됨.

■ 해외 사례

- 미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장애인복지전달체계는 전체 사회복지전달체계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 미국은 장애인과 노인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독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통합적인 접근을 추구하며, 프랑스는 지역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독자적인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전달체계 구축 시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함.
- 독일은 공동서비스센터를 통해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최초 접근 지점을 단순화하였고, 프랑스의 지역장애인지원센터, 미국 캘리포니아의 리저널센터 모형 모두 이용자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임.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독일의 공동서비스센터에서는 상담 시 장애인 관련 기관의 인력을 동반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발달장애지원센터와 미국의 리저널

센터의 경우에도 발달장애의 전문적 진단과 평가가 가능한 인력을 기반으로 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정책 제언

■ 맞춤형지원체계의 개편 방향

- 맞춤형지원체계는 현재 사회복지전달체계와 마찬가지로 읍면동을 서비스 최초 진입점으로 해야 함.
 - 읍면동-시군구-광역으로 이어지는 행정 단위와 광역 단위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 발달장애인 전달체계 구축 시 고려 사항

- 맞춤형지원체계 내에 발달장애인의 욕구 및 특성에 맞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적절한 전환이 가능해야 함.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마련이 필요함.
- 맞춤형지원체계 활용을 통한 협업 관계를 설정해야 함.

■ 향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모형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권익 옹호 기능에 대해 제도적 역할, 서비스 수행, 제도 보완 측면을 고려한 다양한 모형을 도출하여 각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권익옹호 기능을 강화하고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도를 통합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권익 옹호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광역센터는 행정을 지원하고 기초단위 지역센터는 이용자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출장소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음.

03

2017년 연구 성과

05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건강 현황과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모형
-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질 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 - 환자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 정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1)
-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 방안
-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 고령친화산업 수요 전망 및 인력 수요 추계 연구
-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 건강 수준과 건강 노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비교 연구

협동보고서
2017- 01**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건강 현황과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모형**Health Status and Integrated Care for Elderly People:
Focused on Healthcare

연구 책임자 김남순

공동 연구자 박은자, 전진아, 서제희, 정 연, 이용주, 김창오, 김광준, 김소윤, 석희태, 홍성민,
왕승혜, 장민선, 카와쿠보히로시, 송은솔, 차미란, 배정은, 이동현, 백상숙, 양지현,
이지연, 백승주**연구 목적****■ 의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이 연장되어 고령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유병률과 의료비가 증가하는 추세임.**

- 고령화 시대의 노인에게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노쇠를 지연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노화'의 개념이 제시되었음.
- 건강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제공되는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건강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의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법제적 발전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연구 내용****■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관하에 상급종합병원(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참여로 진행되었음.****■ 지역사회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방안(제2부)**

- 건강노화와 노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노인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하고 노쇠의 개념과 측정 방법, 중재 방안 등을 정리하였음.
- 국외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사례 및 노쇠 중재 사례와 국내의 지역사회 노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을 고찰하여 정리하였음.
-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 질병 현황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질병의 유병률 변화를 분석하였음.
-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질적 면담 조사를 수행함.

■ 급성기 의료기관 중심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방안(제3부)

- 의료기관의 노인 친화적 서비스에 대한 캐나다, 일본 등의 국외 사례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복합적 건강 요구를 가진 노인 환자에 대한 급성기 병원에서의 표준 진료 지침을 개발하였음.
- 개발된 표준 진료 지침을 바탕으로 급성기 의료기관 중심의 노인 진료 제공 체계 시범 사업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음.

■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제4부)

- 노인 건강권에 대한 논의를 헌법과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정리하였으며, 개별 법령 검토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에 속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고찰하였음.
- 지역 중심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을 구축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의 법제를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으로 분석하여 우리 법제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음.

정책 제언**■ 건강노화 정책의 핵심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역량을 보존하고 'ageing in place'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모두에서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연구 결과를 근거로 국내 지역사회와 급성기 의료기관의 노인건강 관련 서비스 개

선이 필요한 9대 과제를 제안함.

- 첫째, 건강노화가 가지는 의미와 노쇠 관리를 포함한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노인 및 보건의료 인력의 인식을 개선해야 함.
- 둘째, 지역사회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는 노쇠 단계에 따른 서비스 제공, 보편적 서비스 제공, 돌봄 서비스와의 연계를 원칙으로 재설계하여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노쇠 관리를 포함한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셋째, 급성기 의료기관에는 노인 친화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과 조직, 환경을 재설계해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 수준에서 노인 친화적 서비스 제공 병원 시범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넷째,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모두 노쇠 관리와 노인 친화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부족하므로 노인 건강관리 전문 공중보건 인력과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제도를 마련해야 함.
- 다섯째,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 환자의 추적 관리와 함께 다른 의료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두어야 함.
- 여섯째, 지역노인포괄케어센터를 시·군·구별로 설치하여 노쇠 관리에 초점을 둔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관리하고 의료 서비스,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절을 담당하도록 해야 함.
- 일곱째, 노인건강 관련 정보와 이용 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예: NHS Direct).
- 여덟째,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모두 노인 친화적 서비스에 대한 정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재원을 마련해야 함.
- 아홉째,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체계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여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함.

연구보고서
2017-02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질 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 - 환자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Quality Care Strategy for Long-term Care Hospitals and Nursing Homes - Focusing on Patient (Resident) safety

연구 책임자 박은자
공동 연구자 서제희, 정연, 윤시문, 이나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의 환자 안전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외국 의 관련 제도를 파악하여 고령사회에서의 질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첫째,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의 환자 안전 관리 현황을 분석함.
- 둘째, 고령사회에 진입한 주요 외국의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의 질 관리 제도를 조사하여 국내 시사점을 도출함.
- 셋째,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의 환자(입소자) 안전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함.

연구 내용

■ 국내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의 질 관리 제도

- 환자 안전(patient safety)은 보건의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방 가능한 위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개발된 개념으로 최근 장기요양 분야로 확대됨.
- 국내 요양병원의 질 관리 제도로는 인증제와 환자 안전 관리 제도가 있고 노인요양 시설 질 관리 제도로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있음.

■ 주요 외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 제도

- 영국과 미국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하여 질 관리를 함.

- 미국은 CMS에서 장기요양병원 질 관리를 하고, 질 관리를 위해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함.
- 영국에서는 CQC가 모든 등록된 서비스 제공자를 감사하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지방정부의 활동을 평가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 체계를 운영함.
- 또한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질 관리를 위해 이용자의 건강상태나 신체기능 등과 같은 임상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정량적 지표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를 질 관리의 핵심 기준으로 사용함.

■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와 근무자의 환자(입소자) 안전에 대한 경험과 인식

- 요양병원의 시설, 병실의 환자 수, 노인전문간호사 채용 등은 요양병원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환자 안전 전담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인 안전사고 관리가 가능했음.
- 요양병원에서 낙상 사고가 있었던 환자의 보호자들은 간병인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이직이 잦아 환자를 충분히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함.
- 요양시설 간 입소자 수, 요양보호사 근무 형태,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에 차이가 있었으며, 공공시설 등 원하는 요양시설의 대기시간이 길어 이용자가 요양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았음.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보호자와 근무자들은 입소자의 낮은 건강 수준, 질병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요양시설 입소자의 보호자와 근무자들은 낙상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와 함께 입소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할 시 이를 인지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환자 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함.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보호자들은 입소자들이 요양시설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들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전문가 설문조사

-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요양병원 환자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인력 측면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사 배치 기준 늘리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우선순위가 높았음.
- 시스템 및 제도 측면에서는 '요양병원 설립 기준 강화'가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았

고, '노인요양시설 입소와 요양병원 입원 기준의 명확한 구분', '모든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 전담인력 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됨.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인력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야간에도 입소자를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24시간 근무제가 아닌 요양보호사 교대근무제 운영'과 '노인요양시설에서 1인 이상 간호사 근무 의무화'의 중요성이 높았으며 '24시간 근무제가 아닌 요양보호사의 교대근무제 운영'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의 시급성이 높았음.
- 시스템 및 제도 측면에서는 노인 입소자들의 의료적 필요 충족을 위한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의 연계 강화'와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음.

정책 제언

■ 법적·제도적으로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환자(입소자) 안전 관리 보장.

- 노인 환자(입소자)의 안전 관리를 제고하기 위한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의 인력, 시스템 및 제도, 안전교육 및 정보 제공 측면에서의 개선.
- 주요 안전사고인 낙상, 의약품 사용 과오, 감염 등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
- 환자(입소자) 안전 관리에 대한 감독·감시체계 및 기관 간 격차 감소 노력.

■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환자(입소자) 안전 관리 계획을 세우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

- 개별 기관에서 주요 안전사고인 낙상, 의약품 사용 과오, 감염 등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예방·관리 계획을 세워 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환류.
-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장기요양서비스 인력 양성.
- 개별 기관에서 환자(입소자) 안전 문화 및 노인 인권 존중 분위기 조성.

■ 환자 안전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통계 산출.
- 환자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증 근거 생산.

연구보고서
2017- 07

정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Retirement Age Extension연구 책임자 남상호
공동 연구자 임용빈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정년연장으로 인한 고령자 노동 공급 증대가 경제성장, 부문별 고용, 산업별 생산, 가계 부문의 복지 수준(빈곤 및 불평등), 노후소득 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OECD 국가에서는 정책의 설계 단계에서 예상되는 정책 효과를 연구할 때 정책에 대한 가상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시뮬레이션 분석이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로 수행하는 보건복지 관련 정책 연구에서는 노동시장과 관련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를 보완하는 방법의 하나로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 것임.
 - 본 연구를 통하여 복지와 노동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본 모형을 구축하고 정책 시나리오의 사전적 정책 효과 평가가 가능한 분석 도구를 갖출 수 있음.

연구 내용

- 경제주체 간의 이질성과 상호의존성을 모형 내에 포함하는 CGE 모형을 이용하여 고령자 고용 확대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함.
 - 가계 부문과 노동시장을 코호트별로 세분하고, 숙련도에 따른 취업 형태를 구분한 다음 각 그룹별 소득-지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년연장의 장·단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봄.

-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특히 정년연장을 통한 노동 공급의 확대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또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봄.

정책 제언

- 정년연장은 모든 산업, 모든 직종에 적용되기보다는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산업 및 직종에 선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그중에서도 '전문, 과학 및 기술',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등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가장 클 것임.
 - 일부 산업에 대한 정년연장제도의 선별적 도입은 노동시장의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년연장으로 인하여 모든 근로자 그룹에서의 국민연금과 퇴직금 수급액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정년연장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 증가분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음.
 - 그 이유는 노동 공급의 증가로 인한 균형임금의 하락과 임금피크제의 병행 실시로 인하여 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 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임.
 - 오히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의 병행 실시와 같은 고용주에 대한 제도 도입 유인을 잘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정년연장제도 도입으로 인한 다양한 근로자 그룹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임.

연구보고서
2017-08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1)

A Study on The Assessment of Various
Elderly Poverty Indices (1)

연구 책임자 윤석명
공동 연구자 고경표, 김성근, 강미나, 이용하, 이정우

연구 목적

- 2015년 국회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사회적 기구’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상대 노인빈곤율과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제 상황 간에 괴리가 적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 일찍이 학계에서도 현행 소득 중심 빈곤지표가 빈곤 측정의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 충분한 조건은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
 - 소득 중심 빈곤 접근 방법의 경우에는 충분한 저축이나 살기 좋은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소득이 없는 자를 ‘빈자’로 분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임.
-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빈곤지표의 산정을 통해,
 - 기존의 빈곤지표로는 포착할 수 없었던 노인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빈곤지표에 반영하고자 하였음.

연구 내용

- 알카이어-포스터 차원 계수 접근(AF counting approach)을 바탕으로 다차원 노인 빈곤지표를 산정한 결과, 2015년 기준 우리나라 (OECD 기준) 소득 빈곤 노인은 노인 인구 100명당 46명꼴로 나타났음.
 - 하지만 이들 중에 약 21명만이 소득과 함께 주거 또는 자산 차원에서도 결핍을 겪

고 있는 다차원 빈자였음.

- 심지어 이들은 대부분 최저자산층에 해당하였고(95.2%), 건강 상태가 비교적 열악하였으며, 혼자서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나머지 25명은 소득 차원에서만 결핍을 경험하고 있을 뿐 주거와 자산 차원에서는 결핍을 겪고 있지 않았음.

- 그리고 이들 중 66.3%가 고자산층 이상에 해당하였고, 최저자산층은 2%에 불과하였음.
- 또한 건강 및 주거 측면에서도 비교적 나은 여건에서 생활하는 집단임을 알 수 있었음.

정책 제언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OECD 기준 상대 노인빈곤율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절반이 가난하다고 하는데 정말 이들이 모두 가난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하자면, 다차원 빈곤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음.
 - 과연 OECD 기준 소득 빈곤 노인 모두가 정책 우선순위에 포함되어야 할 만큼 열악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숙고가 요구되며,
 - 노인 빈곤 정책은 소득 분포만이 아닌 소득과 그 외 영역(건강, 자산 등) 간 결합분포를 바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보고서의 연구 내용에 대한 정책 함의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소득 빈곤 노인 중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집단을 식별함으로써 정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임.
 - 둘째, 여러 차원의 결합 분포를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설계한다면 한정된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임.
 - 셋째, 다차원 빈곤지표 산정 연구의 질을 높일 기초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임.
- 최근 국내에서도 다차원 빈곤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까진 연

구 범위나 깊이 측면에서 제한된 측면이 없지 않음.

- 향후 다차원 빈곤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 노력이 필요해 보임.



연구 목적

-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경험한 압축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만큼 인구정책 환경 또한 복잡한 사회체계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관계되는 선진국형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
 - 국제 인구변동의 동향과 특징, 인구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인구정책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주요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본 연구는 인구정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까지의 인구변동을 진단하는 한편 향후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있음.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첫째, 인구변동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봄과 함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인구정책의 주요 사례와 이슈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 둘째, 인구정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 인구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을 검토하고 있음.
 -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1960년대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가 보여 준 성장 중심의 발전론적 접근이 인구학적 차원에서 표출시킨 문제라고 할 수 있기에 현시점에서 단기간에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단기적인 처방 대신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인구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국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향후 우리나라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기본 원칙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정책 제언

- 인구정책의 경우 장기적 안목에 기초한 적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인구 현상 및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한 일관되고도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함.
 - 무엇보다도, 국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조응하는 방식의 인구정책이 필요함.

연구보고서
2017-25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Quality of Life Indicator System for Older persons

연구 책임자 정경희
공동 연구자 오영희, 황남희, 오미애, 이선희, 김정석

연구 목적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의 삶의 질이 한국 사회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노인에게 특화된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은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하였으며, 계량적 접근이 부족한 현실임.
- 이에 노년기 삶의 조건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삶의 질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지수화하고자 함.
 - 더불어 국제 비교와 지속적인 수정·보완 및 지표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연구 내용

-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을 위하여 총 6개 영역(소득, 건강, 교육 및 여가, 가족 및 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및 환경)의 22개의 지표체계를 개발함.
- 개발된 지표체계를 바탕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지수화한 결과,
 - 한국 노인의 삶의 질은 스웨덴과 영국, 스페인 등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한국 노인의 삶의 질의 하위 집단별 및 시계열 비교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수치를 살펴보면, 영역별 삶의 질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안전 및 환경’ 영역 60.8점, ‘건강’ 영역 59.6점, ‘가족 및 공동체’ 영역 53.7점, ‘소득’ 영역 48.2점, ‘시민참여’ 영역 33.3점, ‘교육 및 여가’ 영역 15.2점.
- 한편 노인의 성과 연령에 따른 삶의 질 수준 차이가 크며, 모든 영역에서 남자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남.
- 연령군별로 비교해 보면 전기노인(65~79세)은 48.7점으로 후기노인(80세 이상)의 39.6점에 비하여 높으며, 이러한 연령군별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발견됨.
- 노인의 삶의 질은 큰 폭은 아니지만 지난 10년간 높아져 왔음.
 - 2004년의 삶의 질 점수는 40.4점이었으나 2014년에는 46.7점으로 약 6점 증가하였으나, 구체적인 양상은 영역에 따라 상이함.

정책 제언

■ 지표체계의 지속적인 개발 및 지수화 작업의 지속가능성 담보 방안 모색

- 이와 더불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각화를 통한 활용도 제고 필요.

■ 지표체계 보완 방향 제시

-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거시지표 개발.
- 노인의 특성 및 사회적 변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개별지표 개발.
- 영역별 개선 난이도를 고려한 지수화 방안 모색.
- 개별지표의 선정과 지수화에 노인의 관점을 반영하려는 시도.

■ 정책적 함의

- 노인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노인자살률 저하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 필요.
- 절대 수준이 매우 낮은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독려.
- 최근 하향 추세인 가족 및 공동체 연대의식을 강화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삶의 질에서 성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경주.

연구보고서
2017- 26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 방안

Suggestion of Long-term care system reform in View of Aging in place(AIP)

연구 책임자 이윤경
공동 연구자 강은나, 김세진, 변재관

연구 목적

■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는 노인이 생활하던 지역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인복지 실천의 가치로서 노인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차원뿐 아니라 사회 국가적 측면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지속발전 가능성을 위한 대안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지향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AIP의 구체적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 전문가, 정책설계자에 따른 상이한 개념화의 문제가 있고, 당사자인 노인이 생각하는 AIP의 모습에 대한 연구가 부재함.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AIP의 구체적 실천 사례와 성과에 대한 평가가 부재함.

■ 이에 본 연구는 AIP의 개념 정의 및 실천의 제한요인 등에 대한 분석과 국내외 정책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노인의 AIP 실천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연구 내용

■ 우리나라의 노인과 노인전문가 관점에서의 AIP 개념 정리

- 노인과 전문가 관점에서 보는 AIP 개념의 핵심은 요양시설이 아닌 일반 거주지임.
 - 가능한 한 오래 집이라는 거주 형태에서 살기를 희망.
- 노인 자신에게 있어 AIP 실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은 건강요인으로 노인의 건강이

약화되었을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

■ 국외 장기요양에서의 AIP 실천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장기요양, 노인돌봄체계로의 전환.
- 지역 단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사정, 서비스 계획 및 제공 등의 체계적 사례관리.
- 가족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노력.
- 다양한 고령자용 주거 형태에서의 재가서비스 적극 활용.
- 장기요양과 의료의 연계.
- 지역사회 거주 시 필요한 복지기술 적극 도입.

■ 국내의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실태 및 정책적 저해요인

- 노인장기요양제도 내의 설계 및 운영의 제한점
 - 재가급여 이용량 부족
 -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이용량의 형평성 부족
 -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방식
 - 노인돌봄 자원으로서의 가족 활용 부족
 - 재가급여의 주택 개조 등 주거지원 부족
- 의료서비스의 지역 내 이용 어려움 및 요양서비스와의 연계 부족
-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부족

정책 제언

■ AIP의 정책 목표

- 노인이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집 또는 장소에 거주하면서 친숙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좋은 죽음(well-dying)을 맞이 하는 것.

■ 제도 개선 방안

- 장기요양제도에서의 재가급여량 확대.
 - 노인의 기능상태에 따른 적절한 방문형 급여 제공을 위한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례관리체계 구축.
 - 가족요양에 대한 중요성 공식 인정을 통한 보상과지지.
- 일상생활수행 제한 노인의 AIP를 위한 방안 확대.
 - 방문의료, 외출 동행, 구매 등과 같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 거주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 보장.
 - 주택개보수 지원.
 - 고령자형 주택의 지역 내 확대.

연구보고서
2017- 43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Social Policy in Asian Countries:
focusing on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연구 책임자 노대명
공동 연구자 김명중, 쿠엔첸, 백혜연, 장인수, 한솔희

연구 목적

■ 아시아 국가들이 저출산과 함께 여느 지역보다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직면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요구와 제도연구의 필요성이 커짐.

- 우리나라 역시 복지정책이 현재 처하고 있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각국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대한 비교연구는 다른 무엇보다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가짐.
- 이러한 필요에 비해 아시아 연금제도는 보장범위가 좁고, 보장수준이 높지 않은 문제가 있어 노후소득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과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
 - 제도 내용과 보장성, 소득수준 등 성과의 차이가 있는 각국의 경험으로부터 한국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성과 소득수준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음.
- 지리적 접근성, 문화적 동질성, 급속한 고령화 속도, 노후소득제도 미비함 등 유사한 배경과 사회적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공적인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국가가 제도를 마련하고자 할 때, 앞서 고령화와 제도적 대응을 경험한 국가들의 성과평가가 제도 초기 구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연구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대만의 현지 전문가들을 통해 각국에서 핵심이 되는 이슈들과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됨. 본 연구에서 다룬 한국·대만·일본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음.

-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하에서 총별 총 연금소득 수준을 과거의 주된 일자리

의 종사상 지위 및 종사자 수, 그리고 현재의 소득계층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 분석.

- 현 노인세대가 수급하고 있는 공적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해 본 결과 과거의 주된 일자리가 어느 정도 현재의 공적연금 수급 여부와 수급액 수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고용과 복지는 서로 상호 정합적인 관계여야 더 효과적일 수 있음. 앞으로 노동시장제도로 개인의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험을 보호해 주고, 복지제도로 개인이 빈곤에 빠질 위험을 방지해 주는 정책의 결합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봄.
- 대만의 연금은 조합주의의 특성을 명확히 나타내며 서로 다른 직업적 지위에 대한 제도가 다양해 다각적임.
 - 대만은 사회부조가 기초 안전망 역할을 하고 그 위로 1층에 공적연금(사회보험에서 지원)을, 2층에 직업연금(퇴직기금에 기초)을, 3층에 자발적인 제도를 쌓아 올리는 다층 구조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이지만 공무원과 민간 부문 근로자 간의 복지 급여 격차가 상당히 큼.
 - 현재 대만 연금 개혁의 목표는 지극히 불평등한 분포를 보이는 평균 복지 급여 수준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음.
- 일본에 대한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 및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고용 형태의 다양화가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무연금자가 몇 십만 명 이상 존재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2층 부분인 후생연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고령자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음.
 - 고령자 빈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 연령 사이에 존재하는 소득공백기간을 없애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언

■ 각국의 주요 핵심이 되는 이슈들과 정보들을 제공하여 소개하는 연구는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확장하고 개혁해야 하는 많은 국가가 어떻게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우리의 현실과 보다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의 시행착오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본 연구로부터 얻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현재 근로연령 세대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현금급여(특히 생계급여)의 수준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공적연금을 포함하여 최저생활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입법 과정에서 단기성과주의나 비난 회피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입법 절차 등이 필요함.

연구보고서
2017- 55

고령친화산업 수요 전망 및 인력 수요 추계 연구

Population ageing and its effect on the elderly friendly industry

연구 책임자 김대중
공동 연구자 이난희, 김진호, 이지웅, 윤소영, 이용재

연구 목적

- 고령자를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향후 수요를 전망하고, 파생되는 고용 인력 수요를 추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고령사회 경제는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의 감소와 구매력이 낮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소비·투자의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요소가 있음. 미시적으로는 연령별 인구구성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소비 패턴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연구 내용

-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 수요 전망을 실시한 결과, '의식주 관련 소비지출'과 '보건의 소비지출'은 상승하고 '교육·통신 등 나머지 소비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고령층의 소비 성향이 당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연령대별 욕구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이비 부머는 이전 세대에 비해 학력, 소득, 저축, 소비 등에서 수준이 높아 이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소비하는 제품 및 서비스는 이전 세대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지만, 최근 증가 추세를 이끌던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감소로 감소 추세로 전환한 상황임. 아울러 고령화로 급격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었던 노인복지주택도 수요 부족으로 매우 낮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근무하는 인력의 수요와 전망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정책 제언

■ 초기 단계에 있는 고령친화산업의 경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우호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

- 우선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시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 제품 및 시설에 대한 인증, 새로운 진입자의 진입장벽을 줄이기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의 합리성(rationality) 결함으로 인해 신흥 시장 형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소비자가 과도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방안 마련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시장의 실패 보완, 외부 효과가 큰 연구개발투자 지원 등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일 것.
- 건강, 영양 등과 관련한 욕구를 내실화하고 문화관광 등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 향상과 같은 부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정책 차원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에서 제품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이 필요.

연구보고서(수시)
2017-03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 건강 수준과 건강 노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비교 연구

The review of health care policies for promoting healthy ageing in Asian countries

연구 책임자 전진아
공동 연구자 박은자, 백상숙, 송은솔, 배정은, 김민지, 한솔희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아시아 주요국 노인의 건강 수준, 만성질환 유병 규모 등을 파악하고 각국에서 건강 노화를 위해 실시 중인 중장년 및 노인 대상 보건의료 프로그램과 정책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국내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둬.

연구 내용

■ 건강 노화는 단순히 노인 개인의 신체적 건강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아시아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출산율 감소 및 의료기술과 생활여건 개선 등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 또한 각국은 공통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같은 기능 감소,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 치매 유병률 및 발생률 증가 등의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구조에서 각국은 건강 노화라는 글로벌 기조에 따라 건강 노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구현해 나가는 등 정책적 관심을 쏟고 있는 중임. 하지만 각국이 노인의 건강 문제에 적절하게,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아시아 각국의 건강 노화 정책 및 프로그램이 최근 글로벌 보건 이슈 논의에서 강조되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 충분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며, 노인 대상 분절적 서비스 제공 현상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음.

정책 제언

- 아시아 국가의 건강 노화 촉진을 위한 노력을 검토해 볼 때 한국의 건강 노화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건강 노화 지원 정책, 제도, 프로그램의 충분성과 접근성, 환자 중심의 연속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계속 거주 가치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

03

2017년 연구 성과

06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과제
-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 배우자 간 사회·경제적 격차 변화와 저출산 대응 방안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
- 고등교육이 출산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와 메커니즘 연구: Regression Kink 연구 설계를 통한 통계적 검증
- 인구영향평가체계 도입 평가방법론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17-12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Economic Self-reliance and Family Formation of Youth in Korea
and Japan

연구 책임자 조성호
공동 연구자 스가 케이타, 와타나베 유이치, 시카타 마사토, 김유경, 김지민

연구 목적

- 인간의 생애 주기 중에서 청년기라는 단계는 학교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청년들의 주거 및 경제적 자립의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전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곧 그다음 단계에 진입하는 것 또한 늦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 즉 다음 단계 이행의 지연(delay)은 가족형성(이성교제,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청년층의 생애 주기 단계 이행 중 가족형성, 그중에서도 그동안 정책 연구에서 소외를 받아 왔던 이성교제와 결혼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음.

연구 내용

1. 이성교제
 - 일본보다는 한국에서 경제적 자립이 이성교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에서는 남성에게서 경제적 변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음.
 - 특히 부모에게서 분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성교제를 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음.
 - 그런데 심층면접 분석에서 한국 남성은 분가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부모와 계속 거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동거와 경제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2. 초혼

- 한·일 양국에서 첫 취직은 초혼 해저드를 크게 증가시키며(초혼시기를 앞당기며), 취업이 남성 초혼시기에 끼치는 영향은 여성보다 5배 이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첫 직장이 비정규직이면 정규직보다 초혼시기가 늦었으나 이것은 남성에게서만 1% 정도의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며, 여성에게는 종사상 지위가 초혼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졸업 및 종퇴부터의 경과 시간을 보면 한·일 남성의 진학분가는 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분가 후 초혼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남.
- 졸업 후 경과 시간을 보면, 대학 졸업은 한·일 남녀의 초혼시기를 앞당기지만 이 영향은 한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 비대도시 출신으로 진학분기한 경우의 초혼시기가 빠르고, 여성의 경우 대도시 출신으로 취직분기한 경우의 초혼시기가 늦어지는 결과가 도출됨.

정책 제언

-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생애 첫 일자리의 안정성이 양국에 모두 중요하나 한국에서 더욱 중요하며, 이것은 청년 정책의 방향이 일자리의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
 - (경제적 자립 단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완화하여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청년들이 더욱 수월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구직 센터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가족형성 단계)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및 가족 형성 촉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가족형성에 대한 편익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청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 통계 보완이 필요함.

연구보고서
2017-16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Association between Housing and Fertility among Newly Married Couples

연구 책임자 이상림
공동 연구자 이지혜(A)

연구 목적

-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응에서 청년 일자리나 주택 문제와 같은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하여 출산을 유도하려는 구조적 접근(infra approach)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혼인 시작 시점 및 현재 시점에서의 주거 특성과 출산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 내용

- 시군구 지역 단위 출산율은 지역의 신혼부부 비율에 크게 좌우됨.
 - 지역 단위 출산율 차이의 상당 부분이 정책 효과보다는 구조적 인구이동의 결과.
- 주거 특성과 출산 간의 연관성 분석 결과, 신혼 초기의 주거 특성이 계속적으로 출산 및 추가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주택 점유 형태 등 주거의 안정성이 실제 출산아 수나 계획출산아 수의 차이를 만들.
 - 많은 신혼부부들이 혼인생활을 시작한 주택에서 출산과 양육을 이행하지 않음.
 - 신혼부부는 부모의 자산 이전에 의존하여 혼인생활을 시작하고 있고, 가족 지원이 다시 출산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함.

정책 제언

- 주거지원에서 공급 확대와 함께 신혼부부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지원 전략 필요.
 - 그러나 대출의 확대는 출산과 양육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음.
 -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자녀 양육 등 생애과정에 따른 주거 확장 등의 수요를 고려해야 함.
- 개별적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거시적 주거안정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
- 지방정부는 단순 지원을 넘어 인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접근이 필요.

연구보고서
2017-15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Work-Family Balance among Female Workers and Its Policy Implication

연구 책임자 박중서
공동 연구자 이삼식, 유삼현, 전광희, 염지혜, 성명재, 손일선, 이희연, 서지영, 최효진, Noriko Tsuya, Marie-Thérèse Letablie, Norbert F. Schneider, Maria M. Bellinger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가구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가구 변화가 미래 사회 제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함.

-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가구 변화가 복지 욕구, 소득 불평등, 소비 행태, 지역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이러한 가구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술 발전 및 지역사회 역할에 대하여 검토함.
- 연구 결과는 인구·가족 및 관련 제 분야에서의 학술 연구에 기여하고, 미래 인구 및 가구 변동에 대응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연구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동 가정에 따라 가구추계를 실시.

- 미래 우리나라 가구는 가구 규모의 지속적 증가, 가구 크기의 소규모화, 가구 구성의 고령화 등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여기에 더해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하여 가구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가구 자체의 변동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향을 미칠 것임.

- 우선, 미래 가구 변화 중 대표적인 것으로 노인 1인 가구, 특히 중·후기 고령 인구로 구성된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
 - 가구의 소규모화와 고령화가 동반하여 진행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들 가구의 신체적 및 정서적 돌봄 욕구를 증가시킬 것임.
- 가구 구성의 고령화는 사회 전체적인 소득 불균등도를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 노인 가구의 증가는 시장소득이 낮아지는 은퇴 가구 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이들 가구는 저소득층의 주류 가구로 형성.
 - 소득 불균등도 확대에는 계층 이동성의 저하 현상, 산업 및 직종 간 격차 확대, 임금 격차 고착화, 기술 편향 발전 경향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들 요인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 가구의 증가가 소득 불균등도 확대의 주된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향후 인구 및 가구 변화는 소비 행태 및 유통 산업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
 - 평균 수명 상승에 따른 후기 고령 인구의 증가는 쇼핑 약자의 빠른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청년 혹은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는 소비의 개별화와 식생활의 개인화 등 가구의 소비 행태를 변화시킬 것임.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생활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에 의해 소비 성향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유통업이 소규모화되어 가고 있음.
 - 접근성 제고를 위해 편의점이나 드럭스토어 등의 소규모 점포가 증가함.
 - 상품 판매의 본연적 기능 외에 각종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됨.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구 구조 및 가구 유형 변화는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는 비수도권이나 농촌에서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농촌 지역의 경우 노후화된 건축물이 많고 빈집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밀도가 매우 낮거나 무거주 지역이 많아 민간이나 공공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가구는 다양한 위험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임.

정책 제언

- 노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신체적·정서적 돌봄 욕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들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심리적 고립을 최소화해야 함.
 - 특히 이러한 접근은 노인 가구의 성별과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이동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 거주자에게는 세대 공존 돌봄 커뮤니티를 구축하도록 함.
 - 노인 가구의 경우 은퇴 이후 시장소득이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사회의 소득 격차도 증가함.
 - 저소득층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지원은 효과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향후 노인 가구 증가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인구 감소 및 가구 변화에 따른 소비 행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소비 시장 축소에 따른 유통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고령 가구의 증가로 인한 쇼핑 약자의 증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량 구매 증가, 인구의 도심 회귀 및 행동반경이 좁은 고령 가구의 증가 등으로 편의점이나 드럭스토어 등 소규모 유통업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화되는 가구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지역 간 토지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여 어느 곳에서 생활하든지 간에 삶의 질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간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
 - 가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재생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
 - 주택 수급을 전망하여 빈집 발생 문제를 줄이고, 기존의 유휴 공간들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
 - 미래 노인 가구가 독립적 주체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삶의 질을 위한 기술(Quality of Life Technologies)'을 활용하여 이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케 해야 함.
 - 기존의 복지 서비스 제공의 접근에서 벗어나 신체 및 정신 건강, 이동성, 사회적 유대감, 안전, 일상생활 및 레저 등의 생활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 개발 필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구 변화로 파생되는 각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함.

- 정부-지역사회-개별 가구 등 여러 주체가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파트너십은 지역 통합적, 성 통합적, 연령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연구보고서
2017-17**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과제**Work-Family Balance among Female Workers and Its Policy
Implication연구 책임자 박종서
공동 연구자 김은정, 변수정, 이상림, 이소영, 최인선**연구 목적****■ 본 연구는 지금까지 근로자 관점에서 일·가정양립 실태가 체계적으로 파악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함.**

- 일·가정양립 정책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런 문제가 여성의 경력단 절로 이어진다는 기존 연구를 반영.
- 특히 일·가정양립 취약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실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일·가정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 임금근로자 6600명을 대상으로 표본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함.

연구 내용**■ 돌봄과 관련하여 주관적인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

- 기관이용시간이 길수록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많고, 가정추가형의 서비스 이용자인 경우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대체자원의 활용이 용이한 경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감소되는 반면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동안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시간활용 측면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일·가정 균형의 어려움에 대하여 분석.

- 직장 내 조직 문화가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조정하고 일정을 계획하는 등 유연하

고 합리적일수록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육아시간이 길어질수록 병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사시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특히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의 부족 등에는 육아시간과 직장에서의 시간 및 일정관리의 자율성 정도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의 활용도와 욕구를 분석.

- 본 연구 결과, 모성보호제도 내외적 사각지대는 영세한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형성되며, 이들이 저소득층, 비정규직, 특정 서비스업 종사자를 형성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사용자의 법정의무임에도 근로자가 인식하는 제도 도입 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났고,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모두 향후 활용 가능성에서 사각지대 근로자의 이용 의사가 매우 낮게 나타남.
- 유산휴가제도는 2006년 도입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활용률이 극히 낮고, 사각지대 근로자는 더욱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 반면 육아휴직의 경우 희망하는 급여 수준은 현 제도의 지원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주목됨.
 - 이는 현재 제도의 지원 수준 강화보다 사각지대 해소가 더 시급한 문제일 수 있음을 함의.
 - 시간제 근로와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고, 이 역시 사각지대 근로자의 현실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일·가정양립과 삶의 질(결혼만족도, 자녀 출산, 건강)에 대하여 분석.

- 고용 형태에 따른 일·가정양립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 정규직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일·가정양립 갈등이 적을수록, 시간이 여유 있을수록, 직장의 양성평등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직장의 문화가 합리적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된 후에도 이러한 일·가정양립 갈등

- 과 직장문화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시간이 여유 있을수록, 직장의 문화가 합리적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졌다.
- 일·가정양립과 출산의 관계 분석
- 일·가정양립, 특히 시간 부족의 정도와 출산은 상관성이 있었고, 일·가정양립의 상태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도 출산 순위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침.
 - 첫째아 출산은 보편적인 반면 셋째아 출산은 매우 특수한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더불어 첫째아 출산에 경제적 자원의 영향이 중요할 수 있음이 나타남.
- 건강 측면에서 일·가정양립과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분석
-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수준은 근로자가 인지하는 건강상태,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스트레스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선형회귀분석 결과, 직장에 비해 가정에 있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중보다 실제 생활에서의 가정의 비중이 작을수록, 일·가정양립이 어려울수록, 시간이 부족할수록 스트레스 정도는 높게 나타났고, 우울의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선형회귀분석 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남.

정책 제언

- 여성 근로자의 자녀돌봄의 어려움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개선이 선행적으로 검토될 필요 있음.
 - 정부가 추진하는 유연근무 형태 제도화는 공무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유연근무제도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관서비스나 부모 이외에 추가적인 돌봄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장시간 근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
 - 장시간 근로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추가 자원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주요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내외적 사각지대는 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발견됨.

-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은 비용 부담과 인력대체의 어려움으로 요약됨.
- 따라서 사업주가 느끼는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완화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고, 대체인력 지원체계에 대한 대대적 보완이 요구됨.
 -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강화한 후에는 엄격한 근로 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도 직장 내 조직문화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제도 활용률이 떨어짐.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자율출근제, 유연시간근무제도 등을 이용하는 데 눈치를 보거나 결과적으로 차별을 받는 등 제도 활용성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 제거.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가양득 캠페인'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요구됨.

연구보고서
2017-19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The consumer-oriented child care service system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연구 책임자 김은정
공동 연구자 이지혜

연구 목적

- 국내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서비스 이용 간의 유연성 현황을 검토하고, 제도적 지원체계 안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추고 시설서비스 이용 이외 사적 영역의 추가 서비스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연구 내용

- 보육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운영 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동안의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를 분석함.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영아기와 유아기 모두 시설서비스 이용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설서비스 외 추가돌봄서비스 이용 실태를 보면, 영유아기 모두 주시설서비스 이외 추가적으로 개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약 25% 내외(주로 친인척에 의한 돌봄)임.
 - 모가 취업한 경우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추가돌봄서비스 이용이 높아지는 경향.
 - 취업모의 경우 주당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추가돌봄서비스 이용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다문화 가구의 경우 전체적으로 시설서비스 이용 비율이 낮았으며, 주로 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 대부분은 언어발달 지원이나 이중 언어교육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자녀의 학습 및 언어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심층면접 조사 결과 시설보육서비스 이용에서 문화적 차이 및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시설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 실력이 낮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정양육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아 가구의 경우 분석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대부분의 장애아가 시설에서 제공되는 치료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으로 외부의 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치료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심층분석 결과 장애아 보육을 위한 시설 공급 확대, 특수보육교사의 충분한 공급, 통합보육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 개선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전문가 조사 결과,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중요도·부합도 차이가 큼.

-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공급 부족이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조사됨.
-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경우 접근성이 낮고 보육의 질이 낮아 수요 부합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정책 제언

- 유아기에도 실수요층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며, 유아교육 욕구도 충분히 반영하여 서비스 시간과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시설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개별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확보 노력 필요.
 -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돌봄시간 이외의 양육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여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대한 돌봄이 공급 확대 노력이 요구됨.

■ 다문화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이러한 지원 정책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보육시설 교사와 학부모 대상 다문화 가구 자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낮아 아동이 적절한 한국어 자극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 처한 가정양육자에 대한 지원 방안.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등.

■ 장애아 가구를 위한 지원 방안

- 장애아 보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 시설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치료서비스 확대가 요구됨.
- 아동발달 및 장애아동에 관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됨.

■ 보육서비스 운영 시간의 제고가 필요함.

- 국내의 긴 노동시간과 야근문화를 고려할 때, 현재 보육시설의 12시간 운영 시간이 부모의 근로시간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임.
- 본 연구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12시간 운영 시간 내에서도 다수 맞벌이 가구가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이므로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요구됨.

연구보고서
2017-20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Policy Implications for Embracing Diverse Families

연구 책임자 변수정
공동 연구자 박종서, 오신휘, 김혜영

연구 목적

■ 한국 사회의 가족은 '법적 혼인한 부부와 자녀'로 대표되던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에서 벗어나 그 유형이나 구조가 매우 다양화되었음.

- 하지만 오랫동안 유교적 가치가 중시되었고, 그에 따라 전통가족이데올로기, 가족 중심주의, 가족책임주의 등이 가족을 둘러싼 이념으로 자리해 왔음.

■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가족이 출산, 양육, 교육, 사회화, 경제적 안정, 정서적 지지 등의 기능을 무리 없이 수행하는 집단으로서, 사회 전체를 위한 가족의 순기능이 중요시됨.

- 가족 안에서 생계부양자인 남성과 돌봄의 주체인 여성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전통적 핵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이상적인 가족으로 여겨지고, 그 외 형태의 가족은 잠재적으로 병리적이거나 일탈 혹은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식됨.
-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 안에서 만들어진 제도 및 정책 역시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전제하고 기대할 수 있음.

■ (문제 제기) 가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들에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가?

■ 제도나 정책이 현대 가족의 새로운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통적인 틀을 유지해 간다면 가족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일부 가족만을 위한 제도로 남을 것이기 때

문에 가족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와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점검해 사회·문화적으로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시기.

- 본 연구는 가족의 기본생활과 관련된 제도와 출산·양육 관련 제도 및 정책이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가족의 다양한 모습을 얼마나 포괄하고 있는지 정리, 점검하고 가족의 관념과 관련된 인식 및 가치관 등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수용성 정도를 파악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 내용

- 제도 및 정책(사업) 검토 영역은 가족생활의 기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건강·주거 영역과 출산 및 양육 영역에서의 임신·출산, 자녀 양육, 일·가족 양립 영역임.

- 검토 기준: 기본적으로 가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법적 혼인 또는 혈연과 관련된 기준, 가족의 정의나 범위와 관련된 기준, 남성생계부양 모델 등 성 역할 구분에 대한 기준,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포괄성 정도를 알기 위해 특정 가족 유형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기준, (심층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는) 다양한 가족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조건이나 내용 등을 검토 기준으로 함.

- 제도나 정책이 가진 가족에 대한 관점이 일관적이지 않거나 명확한 관점이 없음.

- 소득 영역에서 살펴본 국민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나타나는 가족은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가 기본이고, 부모나 형제에 대한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됨. 기초적으로 「민법」을 기준으로 가족을 보고 있으나 제도를 관통하는 가족의 기준이 불명확함.

- 건강 영역에서 살펴본 건강보험제도에서도 가족에 대한 명확한 범위나 원칙에 의한 접근이 부족해 보였고, 가입자 조건 등에서도 가족의 범위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부재해 보임.

- 출산 영역에서는 모자보건사업 내에서도 가족 수 산정이나 범위가 상이함. 혜택을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신청 과정에서 지원 신청 가능자가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신청권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반드시 가족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책 의도나 가족의 상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 혼인관계에 대한 규정과 일관성 부족

- 현재 정책이나 제도에서 사실혼 관계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원 대상이 직접 부부가 되는 사업에서는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한 제도 안에서도 어떤 경우는 인정되고 또 다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 등 기준이 혼재되어 있음.

- 다양한 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바, 기존의 정책 및 제도가 다양한 가족의 상황을 면밀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설계되어 있어 제도가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 가족 내에 부모가 모두 존재하지 않거나, 자녀 돌봄을 도와줄 수 있는 조부모나 형제자매 등 주변 자원이 없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 연속되는 가족의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는 등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됨. 또는 양육 과정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이 통제 가능하도록 돕는 정책이 부족함.

- 특정 가족에게 더욱 필요하지만, 현재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됨.

- 기초적인 신체 건강에서 나아가 성인과 그 자녀의 성장에 더욱 중요할 수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매우 필요해 보이지만 부족한 상태임.
- 자녀 양육 방법에 필요한 정보 부족 등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 나타나는 결여를 채워 줄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함.

- 국민인식 조사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적 환경과 의식을 알아봄.

-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개인 스스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편견에서 사회-개인 간 수준 차이를 보임.

- 국민들은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보임.

정책 제언

- 향후 제도나 정책 수립에서는 가족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설계하고,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 제도에서는 가족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고 개선해야 함.

- 특히 임신·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인식이 들도록 보편적인 사례에서 벗어나 있는 산모나 영아, 그리고 가족까지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임.

■ **가족정책 설계에서 다양한 가족의 상황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핵가족이 우리 사회의 대표 가족이라는 전제에서 벗어나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배제되는 가족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야 함.
- 혼인관계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도 및 정책 설계 시 사실혼 인정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함.

■ **특정 유형의 가족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특정 가족 유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가족에게 편리하고 긍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변화임.

연구보고서
2017-21

배우자 간 사회·경제적 격차 변화와 저출산 대응 방안

Changes in homogamy and heterogamy in the era of low fertility of Korea

연구 책임자 신윤정
공동 연구자 이명진, 박신아

연구 목적

■ **배우자 간 사회·경제적 격차의 변화와 최근의 특성을 분석하고 배우자 유형별 출산과 가족생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함.**

- 변화되고 있는 배우자 매칭 구조에 따라 청년 결혼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배우자 유형에 맞추어 건강하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인 사항을 강구하고자 함.

연구 내용

■ **혼인 유형과 출산아 수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져 교육 수준에서의 성별 격차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35세에 이르렀을 때까지 미혼으로 남은 청년들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남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유배우율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학력별 유배우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은 동질혼 및 강혼(降婚) 부부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부부간의 교육 수준은 보다 평등해졌음.

■ **과거 동질혼, 승혼, 강혼의 부부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던 평균 자녀 수는 1960년대 코호트로 들어오면서 부부의 교육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부부 유형에서 2명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강혼 부부의 경우 다른 유형의 부부보다 무자녀 및 한 자녀 비중이 높고, 두 자녀와 세 자녀 비중은 낮게 나타남.
- 여성의 평균 혼인 연령 증가로 연령 측면에서도 부부가 보다 균등해졌음.

■ 배우자 교육 수준의 상관성 추이 분석 결과, 배우자 유형의 변화는 전반적인 교육 수준의 향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 과거 이질혼 중에서 승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원인은 남녀의 교육 격차가 컸기 때문이었으며, 최근 들어 이질혼 중에서 승혼이 감소한 것은 교육 수준이 대체로 상승하여 남녀 간의 교육 격차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남편과 부인의 교육 수준 상관성은 1970년부터 1990년까지 계속 증가하였다가 이후 2000년부터는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부부의 교육 수준 상관성이 낮아진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계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교육이 갖는 의미가 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녀 사이에 존재하였던 역할 구분이 흐려지는 까닭일 수 있음.

■ 모든 유형의 배우자에서 첫아이를 낳은 시점은 부부 모두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점이었으며, 둘째를 낳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아이에게 형제자매를 마련해 주기 위함임.

- 둘째 낳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및 미래의 경제생활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나타남.
- 배우자 유형별 가족생활 분석 결과 배우자를 만나게 된 배경은 같은 학교, 친구 소개, 같은 종교 활동 등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학적 측면에서의 동질혼 경향이 강하게 드러남.
- 동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승혼 부부 역시 남편과 부인 모두 일과 가정생활 양립 부분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특히 강혼 부부에게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남성의 부성 역할 제도화, 맞춤형 주거 공급, 결혼에 따른 기회비용 절감, 보편적인 양육 환경의 내실화, 근로자 고용 안정성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율 제고 정책들은 부부와 가족에게서 나타난 변화에 어떻게 사회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하는 고민보다는 경제적인 지원을 투입하면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현상학적인 측면에 집중한 측면이 강했음.
- 배우자 유형의 변화를 비롯하여 가족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역할 변화 등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측면에서 기울이는 노력은 제한적이었음.
-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부부간의 교육 격차 감소, 그리고 연령 격차 감소로 대변될 수 있는 부부간의 경제사회적 격차의 완화는 지금까지 부부간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체제 변화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음.

정책 제언

- 양성 분업적인 성역할에서 보다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연구보고서
2017-2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Issues and challenges in implementing the Korea child benefit

연구 책임자 **고제이**
공동 연구자 **고경표**

연구 목적

- 급속한 기술 발전에 의한 노동 대체적 생산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의 위험은 더 이상 노인부양비와 관련한 미래 재정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합계출산율의 즉각적인 상승을 목표로 하는 기존 저출산 대응 전략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입법 예고된 아동수당제도의 정책적 기능과 가치를 살펴보고,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쟁점 사항들을 검토함.
- 또한 아동수당제도와 현존하는 관련 제도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우리 사회 여건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함.

연구 내용

- 국가별 가족정책 비교 분석
 - OECD 35개국의 아동수당제도를 비롯한 기타 자녀 관련 지원 수단, 조세 혜택 및 보육 서비스 등 가족정책 전반에 대한 비교 분석 수행.
 - 이를 통해 한국의 가족정책이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중심의 소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
- OECD 국가별 아동수당제도 운영 사례 심층 검토
 - 각 국가의 아동수당 시스템 유형, 적용 범위, 수혜 자격 요건, 자원 구조, 과세 여부,

급여 수준, 적용 기준 조사.

- 기타 관련 수당 제도의 운영 방식, 보육 서비스 지원, 조세 혜택과의 관계 조사.
- 프랑스, 덴마크, 일본, 폴란드, 영국의 재정 위기 전후 아동수당제도의 축소·확대 과정 검토.
 - 특히 새로운 선별 방식으로 조세 체계를 이용하고 있는 영국 HICBC를 심층 조사.

■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사항

- 보편적 균등 지급의 적절성 분석.
 - 이론적 논증과 성장-분배 효과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 간 실익을 비교.
- 정책 대상 연령의 타당성 검토.
 -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효과성, 분배적 정의, 가족지원 체계의 균형적 측면을 고려하여 정책 대상 연령 설정 문제를 검토.
- 양육수당과의 중복 여부.
 -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일정 수준 제어하면서 합리적 가족지원 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제도 간 관계를 검토.
 - 이를 위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수행.
- 아동수당을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것의 적절성 검토.
 - 아동수당법 제정안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아동수당을 지역 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가운데 현물로 지급할 경우 현금 지급에 비해 갖는 장점과 단점 등을 비교 검토.

정책 제언

- 아동수당-양육수당-보육료지원 제도 간 관계의 합리적 설정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가족지원체계에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할 경우 양육 행태 변화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약 2천억 원으로 추계됨.
 - 이때 가정 양육이 필요한 영아 시기에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을 자극하고 저소

특층 자녀의 시설 이용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아동수당제도와 기존 보육 체계 간 조정이 요구됨.

- 추가적인 재정 수요의 행정주체 간 분담에 관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보조 방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아동수당 재정의 분담 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아동수당제도 운영 방향 제안

- 영유아 집단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현금 지급이 바람직함.
 - 선별 지급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이 결코 작지 않아 선별 지급의 실익이 보편적 지급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임.
 - 또한 아동수당 도입에 의해 세제 혜택이 축소됨으로 인해 아동수당을 현물로 지급할 경우, 부모가 자기 세금으로 원치 않는 상품권을 강제 구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여 아동수당제도의 원활한 정책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시설보호 아동도 아동수당 대상에 포함시키고 물가연동제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고유한 처분권이 귀속되는 소득.
 - 물가연동제를 통해 혼잡비용을 최소화하고 급여의 실질가치를 보장할 수 있음.

연구보고서
2017- 49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

Understanding Connections among Abuse and Violence in the Life Course

연구 책임자 류정희
공동 연구자 이주연, 정익중, 송아영, 이미진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및 노인기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와 폭력경험의 상호관계성을 분석하고 인구대상집단을 포괄하는 연계와 협력(cross-sector collaboration)을 기초로 한 통합적 정책 개입 전략을 모색하는 데에 있음.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학대 연구는 개별 인구대상집단별 학대의 이해와 정책 대응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 및 서비스도 인구대상별 특수성에 기초함.
- 그러나 아동학대, 또래폭력(따돌림), 데이트폭력, 가정폭력(배우자학대), 노인학대를 포괄하는 학대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며, 생애과정에 걸쳐 나타나는 학대경험은 매우 밀접한 상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음.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의 성인(만 19~59세)을 대상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와 폭력경험을 회고적으로 파악하고, 응답자의 개인 특성별 및 가구 특성별 학대와 폭력의 발생 및 제 특성을 분석하는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 완료된 총 4008건의 결과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음.

■ 과거의 학대 및 폭력피해경험과 현재의 폭력피해경험의 관계성

- 아동기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학대, 폭력 및 기타 부정적 생애경험을 한 적이 있는 성

인은 전체 조사 대상자 4008명 중 80%에 이르렀으며, 이는 미국(60%), 영국(46.4%), 동유럽 8개국(50%) 및 베트남(76%) 등 국외의 발생률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수치임.

-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지역사회폭력의 직접·간접경험(49.7%)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폭력 목격경험(49.1%), 정서학대(47.8%), 또래폭력(27.5%), 신체학대(26.1%), 정서방임 및 물리적 방임(22.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 수준별, 종사상 지위별 특성을 뚜렷하게 보임.
-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을 분석한 결과, 군대폭력은 피해경험이 65.3%, 가해경험이 48.4%로 성인기 폭력경험 중 가장 높았으며, 직장폭력 피해경험은 25.7%, 가해경험은 13.1%이었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와 가해경험이 각각 5.6%, 5.1%로 나타남.
- 현재 가정폭력 가해경험을 가진 성인의 89.5%가 과거 아동기에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과거의 학대 및 폭력 피해경험이 현재의 가정폭력 및 정신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 자녀학대 가해경험은 41.6%, 배우자의 자녀학대 가해경험은 35.3%로 나타났으며,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학대와 신체학대가 주된 형태였음.
- 43세 이상 연령, 여성이 다른 연령대 및 남성에게 비해 아동학대 가해 비율이 높았음.
- 아동학대 가해 여부에는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뿐만 아니라 과거 성인기의 폭력 피해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배우자폭력의 경험률은 27.5%로 나타났으며 가해(21.8%)와 피해경험(21.2%)은 유사한 수준이었음.
- 폭력의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통제 순이었음.
- 과거의 학대 및 폭력 등 부정적 생애경험은 현재의 배우자폭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배우자폭력의 피해경험과 밀접한 관련 아동기의 부정적인 생애경험이 많을수록 배우자폭력 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폭력 피해경험에서 남성의 경우 교육 수준과 양육 스트레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양육 스트레스, 우울, 자존

감,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

- 성인 중 지난 1년간 노부모를 학대했다고 보고한 비율은 13%에 달하며, 정서적 학대가 가장 주요한 형태였고 방임, 신체학대, 경제적 학대(통제) 순이었음.
-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이 많을수록 노부모학대 가해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대폭력, 데이트폭력, 직장폭력을 포괄하는 성인기 폭력 피해경험이 노인학대의 가해경험과 연관되었음.
- 과거의 중복된 학대 및 폭력 피해경험은 현재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과거 성인기의 폭력 피해경험은 삶의 만족도와 자기존중감에 부정(-)으로, 우울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다만,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경우 우울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정책 제언

- 연구 결과, 한국 사회에서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 및 폭력의 경험은 특수한 욕구와 개인적 특성의 문제를 가진 소수 인구집단의 문제가 아닌 보다 보편적 경험인 것으로 드러남. 따라서 조사와 처벌의 (현) 사후대응식 학대 예방 정책은 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사전예방적 정책 대응을 강화해야 함.
- 또한 학대 및 폭력을 포함한 부정적 생애경험의 빈도가 높을수록 성인기 사회경제적 지위의 불안정성 및 취약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시 성인기의 다양한 학대 피해 또는 가해의 가능성을 높임. 따라서 학대 및 부정적인 삶의 경험 전반에 빈곤취약가정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은 학대의 중복적 발생을 예방하고 학대의 세대 간 전수 고리를 끊은 근본적인 학대 예방 및 대응책이 될 것임.
- 학대 및 폭력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의 주 공간인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학대예방 및 보호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가족을 학대 예방 및 대응정책의 기본 단위로 고려해야 함.
- 아동기 학대 및 폭력경험을 예방하는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부모의 아동 양육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양육 및 돌봄의 사회적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역사회 내에서

의 부모교육 필수화, 아동체벌의 전면적 금지,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프로그램 등의 전문적 서비스 지원 등이 필요함.

- 성인기에 이어지는 폭력의 연속성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군대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 직장 내 폭력과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직장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조직적 체계 마련 검토, 데이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반 법제의 정비 등이 필요함.

연구보고서(수시)
2017- 01

고등교육이 출산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와 메커니즘 연구: Regression Kink 연구 설계를 통한 통계적 검정

Analyzing the Causal Impact of Higher Education on Fertility and Potential Mechanisms: Evidence from Regression Kink Designs

연구 책임자 손호성

연구 목적

- 교육 수준은 출산율 감소를 가져오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여겨지고 있음

- 하지만 교육 수준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아직까지 어떠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

- 교육 수준이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가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결국 실증 분석의 영역임.

- 본 연구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Census data)를 이용하여 교육 수준이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음.

- 1993년에 실시된 교육 정책 변화는 대학 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였는데, 교육 수준 변수에 내재된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1993년의 교육 정책 변화를 외생변이로 활용하여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였음.

연구 내용

- 출산율에 대한 교육 수준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Regression Kink Designs'을 사용하였음.

- 분석 결과, 대학 졸업 여부는 출산의 가능성(likelihood)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출산 횟수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노동 시장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대학을 졸업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임금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전문직

에 종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따라서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의 경우 출산의 기회비용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정책 제언

- 분석 결과에 입각하여,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임금 노동자 여성일수록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경제활동을 포기함으로써 잃게 되는 기회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출산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연구보고서(수시)
2017- 02

인구영향평가체계 도입 평가방법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Population Policy Impact Evaluation Plan and Its Analytic Quantitative Components

연구 책임자 김중훈
공동 연구자 박인화, 김경래

연구 목적

- 인구(영향)평가의 정책적 필요성과 근거기반 인구정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까지의 관련 논의와 타 정책분야 선행 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시행 방법을 제시하고 타당성과 기대효과, 한계를 파악, 제시하고자 함.

연구 내용

- 인구(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선행 기반연구에 대한 재검토
 - 근거기반 인구정책(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소요 제기의 타당성
 - 인구정책의 내용 및 대상의 융복합적 성격상 범 정부 차원의 정책조율과 조정을 목적으로 한 정책영향평가의 필요성은 분명함.
 - 다만, 인구정책의 다원적 성격과 정책수단의 이질성, 주관 부처의 정책 지향, 정책수요자의 개별성 등으로 인해 보편적이고 일관된 평가는 쉽지 않음.
- 정책(영향)평가제도 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선행 연구와 관련 논의의 취합과 재평가
 - 인구(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와 관련 탐색 연구는 정책영향평가의 본격화와 궤를 같이해 왔지만 가능성 탐색에 그침.
 - 현재 도입되었거나 시행 중인 정책영향평가 대부분이 해외 선행사례를 벤치마크

하고 있으나, 국가별·시기별·영역별 사례 취지-도입과정-시행단계-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 시사점 도출에는 미흡하여 외형적 체계와 형식에 치중.

- 인구정책영향평가체계의 선행 사례가 없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즉, 인구변동의 복잡성과 인구정책의 다원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

■ 인구영향평가 체계 시안 구축과 이를 위한 전제 조건 및 고려 사항 파악

- 평가체계의 개념적, 물리적 토대: 절차, 과정, 주체, 환류 및 활용
 - 체계와 운영방식은 현행 고용영향평가의 사례가 모범적임.
- 평가의 실증분석 방법론에 대한 고찰과 방법론 후보군 제시
 - 예산과 실적을 기반으로 산 기존의 시행계획 평가 방식은 정책의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는 도구로는 불충분하고 평가자체의 행정비용 및 부작용이 과다.
 - 실증방법론으로 다양한 회귀기반 모형, (준)실험 기법들의 조합을 대안의 하나로 제시함. 다만, 정성적 평가 요소가 배제될 경우 인구라는 정책 영역의 특성상 자료, 모형 분석도구 전체가 근거를 상실할 수 있음.
 - 보완적 대안으로 동태행위모형(dynamic programming) 기법에 따른 현실적 구조모형을 정책평가가 아닌 '연구평가' 형식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

정책 제언

■ 정책(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취지는 정책 영역과 대상 등에 따라 매우 이질적임.

- 인구변동의 복잡성과 인구정책의 다원성을 고려 인구정책(영향)평가는 좁은 의미의 성과평가-환류 목적보다는 인구정책의 전반적 조율과 방향성 조정, 제시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아야 함.

■ 인구(영향)평가체계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도입 시 "연구평가" 형식이 바람직함.

- 정책(영향)평가 선행 사례를 볼 때, 사전규제나 사후 예산증감의 상벌적 수단이 전된 평가가 구속력은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역할로 본다면 특히 인구정책을 대상으로 할 경우 바람직하진 않음.
- 단기-정례 성과평가와 예산반영 환류 방식보다는, 정책기획 단계와 장기 사후 시

점의 종합 연구평가가 적합(인구변동의 중장기적 시계와 더 부합함).

- 각종 정책평가와 감사의 과다와 중첩에 따른 평가의 제반 비용 및 음(-)의 외부효과를 감안할 때 평가의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고려가 절실함. 평가의 간소화가 필요함.

0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ANNUAL REPORT

2017년 연구 성과

07 한반도 사회보장의 구상과 사회통합

-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사회보장제도-통합기 단일체제
- 통일 대비 복지욕구 조사
- 동독 사회보장제도: 역사와 변화
-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Ⅳ):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KiHASA

연구보고서(일반)
2017- 32 - 01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사회보장제도- 통합기 단일체제

Social Security System in the North Korean Region after
Unification: For an Integrated System

연구 책임자 이철수
공동 연구자 우해봉, 조성은, 송철중, 정해식, 고해진, 모춘홍, 민기채, 이각희, 이용하, 이은영,
장인숙, 정은미, 한경훈, 조보배, 최요한

연구 목적

■ 남북한 사회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보장체제를 개선하고 남북한의 사회보장 통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함.

- 북한 주민들은 빈곤이 해소되고 소득권, 복지권, 건강권 등이 회복되어 삶의 질이 높아졌을 때 통일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임.

■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에 관한 연구는 남북 관계, 정치적 상황을 떠나서 항상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함.

- 통일사회보장 연구는 남북한의 격차를 해소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남북한 통일·통합을 완성하는 것에 관한 연구임.

■ 남북한의 사회보장체계는 격차와 이질성이 커서 사회보장 통합에 따른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도기를 거친 통합이 요구됨.

- 제도 운영의 비용에서나 효율성 측면에서나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한시적 분리 운영하는 방식의 통합이 바람직해 보이며, 본원의 2016년 연구에서도 일정 기간 남북한을 분리 운영하는 방식의 사회보장제도 통합 과정을 논의하였음.
- 본 연구는 과도기 이중체제를 전제한 2016년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통일 이후 10년의 시점을 기준으로 상당 부분 남북한의 격차가 해소되었음을 가정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을 논의함.

연구 내용

■ 통합기 단일체제 진입 시점을 기준으로 논의하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합기 단일체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을 위한 설정들을 제시함.
-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한 실태를 정리하고 통합기 단일체제 진입을 위한 정책적 판단 근거로 활용함.
- 생계급여 중심으로 북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 방안을 급여 대상, 급여 수준, 전달체계, 재정 부담의 측면에서 논의함.
- 공적연금 중심의 소득보장체제의 기본 틀을 제시하며 기본 방향과 원칙을 언급하고 통합의 전략과 전술을 논의하고, 소득보장체제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통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함.

■ 통합기 단일체제 진입에 대한 논의

- 남북한이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고 과도기 이중체제를 거친 이후의 상황을 통합기 단일체제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남북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함.
 - 현재 북한의 상황을 고려함과 더불어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 동안 남북한이 사회적, 경제적 격차와 이질성을 성공적으로 줄였다는 점을 기본 가정으로 함.
 - 통합기 단일체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 북한 지역에 설치된 별도의 특구 차원에서 시행되던 경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함.
 - 통합기 단일체제 진입 시점에서의 북한 상황을 화폐, 이주, 노동, 생산(소득), 조세(재정), 재산권 측면에서의 통합이 진행된 것으로 전제함.

■ 통합기 단일체제의 법적 제 문제

- 통일국가의 법제도 통합의 기본 방향
 - 두 가지 규범적 기준으로 첫째, 남북한 통일의 원칙에 부합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평화통일의 원칙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어야 하며, 둘째는 남북한 주민의 내적 통합에 기여해야 함.
- 사회보장제도 관련 남북한 법제 통합의 헌법적 쟁점

- 남북한의 사회보장법을 상호 분석하여 통합법 제정의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는 명목상의 사회복지 수준은 결코 낮지 않으므로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실현 가능한 제도로의 통합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며, 통일헌법 또는 사회보장법상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함.
- 사회보험법제 분야에서는 북한 주민에게 사회보장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와 그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만 하고, 사회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북한 체제의 불법 청산에 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법제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문제 되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적 역량이 중시되는 부분이라 법원(헌법재판소)은 판단의 전문성 부족(경제성 분석 등), 광범한 입법형성권(입법재량권)¹⁾ 을 이유로 수급권 제한에 관한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이 많음.
- 특히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하거나 조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함.

■ 북한 주민 생활 실태

-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사회는 국가의 국민 부양 체제에서 개인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력갱생 체제로 급속히 변화하여, 시장화의 진전과 사유화 영역의 점진적 증가 추세가 통일 이후 남북한 격차를 줄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의 구조를 볼 때 인구 통계에서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69.3%)은 사실상 공식 부문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은퇴자와 가사일 종사자 인구(23.7%)는 사실상 비공식 경제활동의 주요 참여자임을 주목해야 함.
- 북한 사회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것은 공식-비공식 경제활동의 병행 구조인데, 공식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비공식 경제활동에도 함께 종사하는데, 이유는 공식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임.

1)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입법형성권 또는 행정국가의 전문성이 고도로 필요한 영역에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결정을 자주 내려 왔다.

- 다변화되고 있는 경제활동의 유형으로 공식 경제활동의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상당수의 북한 주민은 소속 직장에 적(籍)만 걸어 놓은 채 비공식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음.
- 북한 사회에는 공식 소득과 비공식 소득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적 소득 구조가 형성됨.

■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방안

- 통합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음.
 - 남북한의 기초생활보장의 기본적인 틀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급여기준선과 급여 수준은 남한의 현 제도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하여 기준중위소득을 사용하는 상대적 빈곤 관점으로 적용하되,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의 기준중위소득을 별도로 정함.
 - 과도기 이중체제기에는 불가피하게 재산의 소득환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체제 통합기에는 이러한 특례를 폐지하고,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를 막기 위해 관대하게 설정하는 급여기준과 급여액은 점차 북한 생활 수준을 반영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수준으로 설정해 나감.
- 통합기의 적용 대상은 북한의 모든 저소득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함.
 - 북한 지역에 재산의 소득환산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남한 주민보다 더 유리한 급여 조건이 형성되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북한 지역의 급여기준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급여기준이 차등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을 적용하지 않고, 남북한 급여기준이 동일해지는 시기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을 적용함.
 - 통일 이후 남북한 단일체제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제로, 남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완화될 것을 예상하고 북한 지역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함.
- 통합기 단일체제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재원은 일반회계로 운용함.
- 남북한 경제 수준이 시일을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간다는 전제에서, 북한 지역 기준 중위소득이 남한의 50%에 상향한다고 보고 단일체제기의 급여기준 및 급여 수준을 남한의 50%로 전제할 때, 소요되는 재정의 규모는 연간 5조 1573억

2200만 원(20% 수급률)에서 10조 3146억 4500만 원(40% 수급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소득보장체계의 기본 틀

- 통일과도기에 전제했던 이중적 복지체제는 통일성숙기에 접어들면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하거나 통합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임.
 -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2016년 연구에서 통일 시 과도기 동안 현행 남한의 연금 제도와는 다른 제도를 북한 지역에 적용한 다음 나중에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함.
 - 통일 직후 북한 지역의 소득 파락이 곤란한 상황에서 적절한 소득보장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남한과 달리 보편적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국민연금은 거의 완전한 수지상등원칙에 기초하는 제도로 새로이 설계하여 점차적으로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함.
- 완전통합기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상: 국민연금 부분
 - 먼저 재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전형적' 기초(보편적)+비례 이원 연금체계의 경우 수급 부담 구조가 균형적인 비례연금을 적용하며 조세와 보험료에 자원 부담을 분산시킴으로써 인구 고령화 시대에 더욱 안정적인 제도로 평가됨.
 - 소득보장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전형적' 기초(보편적)+비례 이원 연금체계의 경우 높은 수준의 기초연금이 노후보장의 든든한 기반을 제공해 주고, 그 위에 부가적으로 비례연금(현행보다 급여 수준을 크게 낮춘 국민연금)이 보장을 제공해 줌으로써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전반적으로 유리함.
 - 마지막으로, 남북한 주민의 수용성 차원에서 '전형적' 기초(보편적)+비례 이원 연금체계가 더 선호됨. 만약 통합모형으로 남한형 이원체계를 북한 지역에 적용하면, 북한 주민들은 기초연금에서 당장의 손실을 보게 되고 보장 상태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높음.
 - 전체적으로 볼 때 완전통합기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통일 직후 북한 지역에 적용하였던 연금체계를 중심으로 일원화 내지 단일화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완전통합기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상: 기타 제도 부문
 - 먼저 기초연금이 모든 노인에게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국민연금(낮아진 비례연금)이 부가적으로 기초연금을 보완하는 상황이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과 기능도 변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 지역에 기업연금 등 사적연금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기초연금 적용 방안

- 단일체제기 기초연금제도의 위상은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항구적인 0층의 기초소득보장제도로, 이중체제기 동안의 유일한 공적연금과 주요 노후소득원이라는 위상은 보충적 공적연금으로의 위상으로 변화하며, 최저소득보장이라는 위상은 지속될 것임.
- 단일체제기 기초연금제도의 운영
 - 단일체제기 기초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상의 남북한 65세 이상 노인이며, 단일체제기 기초연금제도의 급여 수준은 현행 기초연금제도 급여산식에 기초하여 계산하며, 남북한 노인에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함.
 - 단일체제기 기초연금제도의 재원은 일반회계로 운용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되 북한 지역에 한해서는 통일 중앙정부가 최대한 부담한다는 원칙을 제시함.
 - 단일체제기 기초연금제도의 전달체계는 전국적 범위에서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북한 지역 국민연금 지역본부 및 지사를 실질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이중체제기에 육성하였던 기초연금 북한 인력을 실제 공단에 배치함.

■ 국민연금 적용 방안

- 급여 수준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아울러 40~50% 수준을 논하고 있으며, 보험료율은 북한 지역 연금제도 내 기여-급여의 수지상등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남한 보험료율보다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봄.
-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의 조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검토하고, 약 20년에 걸쳐 완만히 조정되는 출생월 기준 3개월에 1개월씩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제안함.
 - 남북한 제도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 지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야 함.
 - 그러나 북한 지역의 평균수명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급격한 수급 연령 조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남한의 수급 연령 조정이 2034년에 적

용 완료되는 것을 고려하여 2042년에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는 방안을 제시함.

- 북한 지역에 특례노령연금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함.
-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적용할 보험료 지원 사업을 제안함.

정책 제언

- 첫째, 통일이 실현되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통합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가는 통일 이전에 남북 간의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남북한 정치, 안보 문제와는 별도로 비정치 분야인 사회복지·사회보장 분야에서 북한과 주기적으로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함.
- 둘째, 사회보장제도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제도 간의 이질성을 충분히 고려한 통합 방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충분한 학술적 교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인구, 법제 등 다양한 정책적 협동연구가 요구됨.
- 셋째, 통일 이후 사회보장 통합에는 일시적으로 상당한 재원이 요구되므로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가칭) 통일복지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음.

연구보고서(일반)
2017- 32-02

통일 대비 복지욕구 조사

A research on the welfare needs of reunified Korea

연구 책임자 소성규
공동 연구자 박희진, 장인숙, 정병화, 정은미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및 중국의 북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간접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주민의 사회복지욕구 수준에 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사회복지 부문 관련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학문적·정책적 기여를 하고자 수행됨.

- 연구 조사는 국내 사례의 경우 2015~2016년 북한 지역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해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효 표본 수는 100명임.
- 해외 사례는 중국에서 북한 주민을 직접 면접조사한 경험이 있는 중국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함.
- 조사 내용은 북한 주민의 생활 영역별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빈곤과 불평등의 특성 및 양상을 살피기 위해 응답자 기본 정보를 제외한 총 4개의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기본생활욕구, 근로욕구, 소득보장욕구, 의료보장욕구를 조사함.

연구 내용

- 응답자 정보를 제외한 4개 영역의 복지욕구에 관한 총 60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 조사 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함.

- 첫째, 기본생활욕구는 식생활, 주거생활, 여가생활, 자녀교육, 사회관계, 통일 후 거주지 선택의 항목으로 조사가 진행됨.

- 연구 조사 결과, 식생활 부문에서 북한 주민들은 주식과 부식물(고기 및 과일, 다과)에 대해 높은 욕구 수준을 나타냄. 4인 가족의 일주일 식량 평균치는 14.2kg, 고기는 주 3회, 과일과 다과는 매일 섭취하고 싶다고 답함.
- 주거생활 부문에서는 아파트보다는 사적 생활이 보장되는 단독주택 유형을 선호하고, 주택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난방과 위생시설을 1순위로 택함.
-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여가를 즐길 만한 삶의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며 일상적인 여가생활(극장, 경기장, 유희장, 낚시 등)보다는 간헐적이어도 자유로운 여행(1년에 1번 이상, 2~3일간)을 더 필요로 함.
- 기본생활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가운데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높은 욕구를 나타냄. 자녀교육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층 간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믿음은 모든 연령대와 직업군, 소득 수준에서 동일하게 교육욕구로 나타남.
- 사회관계에 관해서는 세대 간의 차이가 나타남. 나이가 많을수록 과거의 공동체적 관계를 지향하는 반면 나이가 적을수록 집단보다는 개인적 관계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남.
- 마지막으로 기본생활욕구 중 특징적인 점은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거주지 선택 요인이 고향과 가족으로 나타났다는 것임.
-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에 의해 북에서 남으로 인구의 이동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본 조사 결과 다수의 응답자는 고향, 가족, 친척이라는 가족공동체와 부모, 형제, 자녀 등 혈연관계 중심의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

■ 둘째, 근로욕구는 노동시간, 근로 의지, 사회적 약자 우선 채용, 보육 문제, 사회보장비 징수에 관한 항목으로 조사가 진행됨.

- 연구 조사 결과,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통일 후 적정 노동시간으로 '8시간'을 선택하였으며, 추가 소득의 필요성 때문에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매우 수용적인 태도를 보임.
- 또한 통일 후 재교육과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참여 의지도 매우 높았음.
- 경제활동을 위해 대부분의 여성은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기를 원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비하여 사회보장비 의무 징수에 대한 수용력은 높은 편이나 공적 부문과 사

적 부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직업의 차이에 따라 수용 태도는 다르게 나타남.

■ 셋째, 소득보장욕구는 소득에 대한 기대 수준, 대체소득의 필요성,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견해의 문항으로 조사를 진행함.

- 연구 조사 결과, 북한 주민은 통일된 사회에서 더 높은 소득이 보장되기를 기대하나 남한 사회보다 더 높은 소득 수준을 바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 거주할 때 필요한 월평균 가구 소득의 평균값은 약 1200달러, 직장에서 받고자 하는 월평균 1인당 급여(임금) 수준은 평균 약 930달러로 나타남.
- 대체소득 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은 공감대를 보였으며, 필요성을 공감하는 수준은 '저축>공적 연금>사적 보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한 주민에 비해 저축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사적 보험에 대해서는 이해 부족과 낮은 신뢰감으로 필요성이 낮게 나타남.
- 사회보장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국가가 실직자들의 기초생계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낮은 지지도를 보임.

■ 넷째, 마지막으로 의료보장욕구는 국가의료보장에 대한 기대,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 가입 희망 여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세금 추가 납부 의사, 의료비 부담, 정기적 건강검진 필요성, 진료 희망 병원의 형태, 치매환자 간병 등에 대한 욕구로 범주화하여 조사함.

- 연구 조사 결과, 북한 주민은 국가의료보험에 대해 매우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음. 국가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집단은 여성, 50대, 경제 수준 중층으로 나타남.
- 국가로부터 더 많은 의료보장을 받기 위해 세금을 낼 의사가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추가 납부 의사는 경제 수준 상층보다는 중하층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의료비는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정기 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병이 났을 때 진료를 받고 싶은 병원으로는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평양 중앙병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 북한 주민들의 평양 중앙병원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확인할 수 있음.
- 치매환자의 돌봄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요양전문시설에서 돌보고 싶다고 응답함.

정책 제언

■ 첫째,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제도와 실태에는 매우 큰 간극이 존재하며, 북한에서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제도와 주민 생활의 실재를 구분하여 북한 주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제도의 폐기, 수정, 활용 및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남북한의 통합적 사회보장 제도를 고찰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됨.

■ 둘째, 북한에서 강조하는 제도의 취약성 문제 이외에도 제도 밖 주민의 복지 실태를 연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관한 북한의 복지욕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집계하는 것이 필요함.

- 의식주 기본생활에 관한 복지욕구 조사뿐 아니라 노동, 교육, 의료 부문의 심도 있는 복지욕구는 파악조차 더딘 현실이 나타남.

■ 셋째,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복지욕구 분출에도 대비해야 함. 현재 북한 주민은 기본생활욕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수준의 욕구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사적 욕망'이 잉태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음.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기대하는 통일이 '개인적인 것의 자유로운 보장', '높은 소비 수준의 향상과 보장'임을 암시함. 통일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현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욕구 수준에 대한해 밀도 있는 분석과 사회적 교육을 연계해야 함.

■ 넷째, 북한 주민의 복지욕구 중 국가 의존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사전적 준비 작업이 요구됨.

- 본 조사에서는 일자리 제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교육 문제 해결, 실직자의 기초생계 보장, 국가의료보험 및 의료비 부담과 관련된 항목에서 국가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90%를 상회함.
- 통일 이후에도 국가의존성이 지속된다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마지막으로 통일 대비 복지욕구 조사에 근거한 남북한 사회복지 분야의 종합적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됨.

연구보고서(일반)
2017- 32 - 03

동독 사회보장제도: 역사와 변화

Title: East German Social Security: History and Change

연구 책임자 정재훈
공동 연구자 박수지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동독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과 전개, 변화의 역사적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통일사회보장제도 논의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880년대 이후 70년 동안 확대되어 온 전통적 독일식 사회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동독에서도 계승되었으며, 어떤 차원에서 새 출발을 하였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전통의 계승과 단절을 찾는 과정은 동독 정권이 서독과의 체제 경쟁 수단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보았던 시기와 체제 경쟁을 포기하고 동독식 사회주의 건설 수단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했던 시기로 분류할 수 있음.

- 전통의 계승과 전통으로부터의 단절을 찾아보는 작업을 통해 이른바 자본주의적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제도의 이분법적·분리적 접근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연구 내용

- 동독 사회보장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동서독 양 진영 간 체제 경쟁 과정에서 사회주의적 재건을 시도한 동독 체제의 결과물임.
 - 생산 체제를 시장에서 국가로 옮긴 동독은 사회적 위험의 결과에도 국영기업 중심의 사회보험이 대응하는 '사회적 위험의 국유화'를 시도함.

-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노동영웅'과 인간상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는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해야 했음.
 - 동독 공산당이 추구한 노동자 민중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가는 '보호국가'로서 역할을 해야 했는데, 이때 사회보장제도는 보호국가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했음.

-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육체노동자와 사무직노동자 간 구분을 없앤 통합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함. 사회보장제도 확대에서 비보험급여 확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 출산 여성과 가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특히 1970년대 이후 비보험급여가 확대된 추세에 주목할 만함. 또한 주거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있었음.

- 이러한 과정에서 동독이 독일 복지국가 전통을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역사적 증거는 소득비례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임.

- 정률제 보험료 부담을 통한 재정 조달 방식을 토대로 동독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 또한 비스마르크식 조합주의 사회보험을 통합한 단일 사회보험 체제가 동독 건국과 함께 등장한 그 자체도 독일식 사회국가 발전 과정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한편 통합사회보험제도 자체에서 전통의 단절을 찾을 수도 있게 됨.

- 사회보험제도가 노령, 질병, 실업, 사고 등 사회적 위험 영역별로 분류하여 개별 조합 중심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벗어나 단일 보험료 납부, 단일 급여 지급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임.
- 더 나아가 무상 의료서비스 도입, 공공 소유 주택 규모 확대를 통한 주거의 공공성 확보, 가족 돌봄을 위한 폭넓은 지원 체계, 사회적 돌봄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은 전통적 독일 사회국가 사회보장제도 흐름과는 맥을 달리하는 특징임.

- 동독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과정을 꿰뚫는 주 흐름은 체제 정당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 체제 정당화 시도는 다시 두 시기로 나누어져 그 특색을 보임.

- 첫 번째 시기는 동독 건국 직후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대외적 체제 경쟁을 한 시기임.
- 1970년대를 넘어서면서 체제 정당화는 대외적 경쟁을 포기하고 대내적 체제 유지로

그 지향점이 변화함. 1970년대 초반 울브리히트(Ulbricht)에서 호네커(Honecker)로 정권이 바뀌면서 서독과의 체제 경쟁 포기를 선언하고 동독식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선언함.

■ 여기에서 더하여 주거의 공공성 강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남.

- 사회보험의 비보험급여도 확대됨.
- 특히 사회보험 재정을 토대로 한 비보험급여 차원의 가족지원 서비스가 현금과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급격히 증가함. 이는 결국 동독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부담 악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옴.

정책 제언

■ 동독 사회보장제도는 독일식 사회국가의 전통, 나치 정권 사회보장제도의 전체주의적 성격, 그리고 동독식 사회주의 이념이 결합되어 나온 복합적 체제임.

■ 북한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는 작업을 전제로 할 때, 또 동독 사회보장제도를 역사적 과정 중심으로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첫째, 북한 사회보장제도가 한반도에 전통적으로 존재한 상호부조, 연대, 자조 등의 사회적 규범과 관련 제도를 어떻게 반영하여 형성, 전개되었는가를 분석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남한 사회보장제도와의 공통점 도출을 모색할 수 있음.
- 둘째,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에서 국가 역할이 어디에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규칙 제정자 혹은 적극적 규제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작동하는 상황에 따라 통일 후 혹은 체제 교류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관련 변화의 양상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1990년대 이후 먹고사는 문제에서 국가의 관리·통제 기능이 붕괴했다고 추정하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함.

■ 이러한 시사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언을 할 수 있음.

- 첫째, 북한 체제 유지 정당성 기능을 북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북한 사회보장제도가 오늘날 체제 유지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선부른 북한 체제 붕괴론을 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둘째, 동독 사회보장제도에서 비보험급여 확대 규모가 전체 사회보장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던지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독일 통일이 주는 시사점으로서 통일비용 산출 관련 연구는 상당수 존재함. 그러나 등가원칙에서 어긋나는 비보험급여의 지나친 확대가 통일 후 서독식 사회보험제도에 적응해야 했던 동독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형성 요인으로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지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특히 여성·가족 지원을 중심으로 확대됐던 비보험급여는 독일 통일 후 동독인이 일상에서의 박탈감을 느끼는 중요한 요인이 됨.
 - 임신·출산·돌봄 지원 맥락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급여와 사회적 돌봄 시설은 통일 후 보다 나은 삶을 기대했던 과정의 토대가 됨. 그리고 동독 체제에서 받을 수 있었던 비보험급여의 상당 부분이 삭감된 통일 독일의 현실은 동서독 갈등의 한 단면 형성에 기여함.

■ 따라서 비보험급여의 실체를 중심으로 통일 비용을 산출한다면 독일 통일 후 생겨난 동서독 갈등의 이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연구보고서
2017- 5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V):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A Study of Social Problem and Social Cohesion in Korea with
Policy Recommendations

연구 책임자 정해식
공동 연구자 김미곤, 여유진, 전진아, 김문길, 우선희, 최준영

연구 목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근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2015년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년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17년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 사업은 한국인이 경험하는 불안과 불신, 불만이 라는 사고방식의 현상과 관계를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통합 증진을 위한 단초를 쌓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이를 위해 2017년 조사 주제를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로 하고, 전국 성인 남녀 383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하였음.

연구 내용

-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관계

-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과 같은 문제에서부터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직업 상실, 사회적 재앙 수준의 재난까지 한 개인은 다양한 트라우마 경험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

- 이에 트라우마 경험의 중첩성(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부정적 생활사건 빈도),

최근의 트라우마 경험이 현재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아탄력성이 이들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부적 연관성이 나타났으며,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했을수록 우울할 가능성,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 주며, 외상의 경험이 잘 드러나지 않아 초기 위기 개입이 어려운 상황도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시사함. 또한 외상의 경험이 외부로 드러나 초기에 위기 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조기 개입은 불가능하므로 조기 개입 체계를 구성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낙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자아탄력성 역시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자아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 프로그램 역시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 줌.

■ 물질적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개인적 차원에서 심각한 박탈과 빈곤 상태에 놓여 있거나,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에 대해 더 큰 불만과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클 것임. 이에 물질적 박탈과 정신건강, 특히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물질적 박탈의 영역별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경종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 연구 결과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이 박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진바, 소득보장, 건강보장, 서비스보장을 아우르는 생활보장의 차원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복지 전략 수립이 필요함. 또 물질적 박탈과 사회적 지지는 모두 정신건강, 즉 우울과 자살생각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빈곤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질병에 대한 보장률을 높이며 돌봄서비스 등 각종 사회서비스가 기존 가족 역할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여 개인의 정신건강, 나아가 사회의 통합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 또한 연령에 따라 개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박탈의 유형과 영향도가 상당히 달리 나타난 부분을 감안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과 전략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요컨대 정신건강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통합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령별,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국가·사회적 노력이 투입되어야 함.

■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사회통합

-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증가하는 소송 건수,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갈등 해결 방식의 높은 비율 등 사회병리와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안 중 하나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맥락에서 확인된다는 것임.
- 분석 결과 경제적 갈등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특징적으로 이념적 갈등이 급증하였으며, 자아탄력성은 빈곤, 비자발적 실업 경험, 실업 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해당하는 집단의 자아탄력성은 대체로 낮은 특징을 보임. 또한 물질적 박탈과 비자발적 실업 경험과 같이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노출된 경우 갈등 인식과 갈등 경험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었고 사회통합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갈등이나 정신건강과 같은 사회병리 또는 사회문제가 개인이나 가족의 특성에 전적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경제적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함. 이를 위해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원인별 갈등 중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는 가족 내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소득재분배 등의 구조적 정책과 아동 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실천적 접근도 필요함. 또한 빈곤과 실업 등의 사회적 배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함.

■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 한국인의 과도한 불안은 어느 수준이고, 그것이 얼마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지와 불안의 근저에 놓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실제의 위험보다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과도하게 인식하고 불안해하는 집단은 개인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거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높은 이들이라 할 수 있음.
- 분석 결과 생애주기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과 경제생활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속성이 반영되었으며, 불안함의 정도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공정성 및 우리 사회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부정적이었으

며, 사회구조 인식은 사회적 위험 인식(사회적 불안)으로부터 나타나는 부정적인 사회통합 평가를 매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통합 증진을 위해 객관적 여건의 개선이 절실함을 시사함. 그러나 한편으로 사회통합 증진, 특히 인식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살 만하다'는 평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불안 요소에 대한 직접적 개입 외에도 사회구조의 정상적인 작동에 대한 믿음을 줄 필요가 있음이 확인됨.

정책 제언

■ 이 연구의 목적이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임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하기는 어려우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 첫째,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며,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함.
- 둘째,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복지 전략으로서 소득보장, 건강보장, 서비스보장을 아우르는 생활보장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셋째, 연령에 따라 개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영향도가 달랐으므로 관련 정책 마련에서 개별화된 접근을 시도할 것을 제안함.
- 넷째, 격차의 해소, 물질적 불안정성의 축소 외에도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구조의 정상적인 작동에 대한 믿음을 줄 필요가 있음.

0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ANNUAL REPORT

2017년 연구 성과

08 선제적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정보통계 분야 근거 생산·관리

- 복지재정·성과관리 체계 연구
- 한국복지패널의 진단과 향후 개선 과제
-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사회보장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형 연구
- 2017년 보건복지통계정보통합 관리 및 운영
-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연구
- 2017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KiHASA

연구보고서
2017- 14

복지재정·성과관리 체계 연구

A Study of Systematized Welfare Finance and Welfare Policy
Performance Management연구 책임자 고경환
공동 연구자 오윤섭, 이연희, 함영진, 안민영, 정영애

연구 목적

■ 최근 국민의 복지욕구 증가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가 다양하게 확대, 확충되고 있어 성과지향의 재정 운용을 위해 사업 성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 복지재정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분배가 개선되는지, 국민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수명이 향상되는지 등의 동향 분석과 영향 요인 탐색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하여

- 이용자 중심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정책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DB 구축의 기본 골격을 설계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의 성과 지향 재정 운용과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정, 성과, 자원이라는 부문별 정보의 체계화와 이들 부문 간 정보의 연계화에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복지재정, 성과지표, 복지자원정보를 양적·질적, 종적·횡적 차원으로 범주화하여 개별 정보를 체계화하는 기본 틀을 구성하고,
- 다음으로 사회보장의 필수 투입 요소인 인력, 시설, 기타 무형자산인 복지자원의 세부 정보를 발굴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행정정보를 탐색하여 체계화하며,
- 끝으로 복지 성과, 복지재정, 복지자원 연계화로 성과 지향의 정책 수행과 다양한 복지정책 분야 분석의 기반을 마련함.

■ 개념적으로 접근한 정보의 체계와 연계가 잘 구축되는지를 살펴보고자 주요 사업을 사례로 들어 제도 흐름에 따른 재정과 성과 그리고 자원의 변수를 단계별로 살펴봄.

- 현금급여·사회서비스 등을 적용함.

주요 연구 결과

■ 재정정보 체계화

- 체계화는 현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양적·질적, 종적·횡적 차원에서 범주화하여 정보 축적의 깊이와 범위(양)를 확장시켜 분석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것으로, 사회보장정책 및 사업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음.
- 양적 차원의 예산 규모, 결산 규모, 집행률 등의 정보를 재원(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지원 방식(국고보조, 출연, 직접사업, 용자 등), 지원 대상(인건비, 자본보조), 지원 기간(연속사업, 단년도 사업 등) 등의 질적 차원 정보로 구체화하고,
- 이를 다시 정책,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 집행 단위별로 구분하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구분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재정적 관점에서 정책 및 사업의 분석을 가능케 할 목적임.

■ 성과정보 체계화

- 각 사회보장 분야 정책의 성과정보를 목표체계(미션-비전-프로그램 목표-단위사업 또는 정책과제별 목표-사업 목표)에 따른 정보를 기초로 구축·관리함으로써 개별 사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종합적 관점에서 성과정보를 확보함.
- 성과정보의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해 사업별, 프로그램별 성과 추이를 산출하고 결과 수준에서 추적 가능토록 하여 사회보장성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정보 체계화

- 인력, 시설, 조직(협의체 등), 기타 무형자산(각종 프로그램, 관리정보, 협업 경험, 사회적 자본 등) 등 사회보장에 필수적인 다양한 투입 요소를 발굴, 체계화하여 복지자원으로 범주화하고 그 정보를 축적하여
- 우리나라 복지자원의 배분 현황 및 지역별 자원 배분 특성 등 추가적인 복지자원에 관한 거시정보를 생산함으로써 투자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의 성과를 파악

하고 각종 정책 및 사업 진단에 활용함.

■ 재정·성과·자원정보 연계화

- 연계화는 질적으로 서로 다른 차원 간 정보를 결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정보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분석 대상과 방법의 다양화를 유도함.
 - 재정정보와 성과정보의 결합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재정정보와 자원정보의 결합은 투자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을, 성과정보와 자원정보의 결합은 성과 부진의 배경과 정책 및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조명하는 데 활용 가능함.
- 세부사업과 재정정보 연계.
 - 세부사업 개체는 세부사업명, 사업 주체, 사업 연도, 소관 부처,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지원 형태의 속성으로,
 - 재정정보는 국비, 지방비, 수익자 부담금, 예산, 결산의 속성으로 구성됨.
- 세부사업과 성과지표 연계.
 - 성과지표 개체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지표 유형, 평가(정성·정량) 성격, 지표 분야, 목표율(달성률) 속성으로 구성됨.
 - 세부사업과 성과지표는 1:1 대응.

■ 정보 연계 적용

-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과 기반의 복지재정과 지역사회자원의 개념적 체계화와 연계화에 있는 만큼 정보체계가 잘 구축되었는지를 세 가지 사업을 선정하여 '재정-집행관리-성과' 단계별로 검토한 결과 정보체계가 활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기초연금제도
 - 사회서비스사업
 - 인일자리사업
- 다만 현 단계에서 자료 수집이나 영향 요인 탐색의 한계에 대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요구됨.

연구보고서
2017- 34

한국복지패널의 진단과 향후 개선 과제

Korea Welfare Panel Survey: Present Status and Tasks for Improvement

연구 책임자 이현주
공동 연구자 오미애, 정은희, 정해식, 김현경, 손창균, 정익중, 박형준

연구 목적

■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음.

-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 생산 및 관리, 그리고 활용에 이르기까지 현황에 대한 종합적 파악.
- 한국복지패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과제를 도출.

연구 내용

■ 한국복지패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표본과 가중치에 대한 부분을 심층 분석.

- 이탈가구와 유지가구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고, 복지패널의 가중치 변화를 분석.
 - 각 차수별로 대표성을 검토하고자 응답률, 부차그룹 응답률 변동계수, 무응답가중치 분산, 사후층화 가중치분산, 대표성 지표(R-indicator) 등의 척도를 활용하여 원패널과 신규 패널의 상황을 분석.
 - 가구 규모별로는 3인 가구, 소득 계층별로는 저소득 가구에서 표본손실이 많았고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이,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의 손실이 많아 이들 집단의 가중치에서 상대적으로 극단값들이 나타남.
 - 가구 패널과 개인 패널로 구분하여 대표성을 평가한 결과, 대체로 원가구 패널의 경우 패널의 대표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시점이 7차 또는 9차 웨이브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규 패널이 투입된 시점부터 11차 웨이브까지는 지표들이 상대

적으로 안정화된 상태.

- 조사 방식과 관련하여 한국복지패널의 조사 운영 방식의 타당성을 진단하고 조사 방식 중 주요 수단 두 가지, 즉 CAPI 시스템과 인포시트(Info-sheet)에 대하여 점검.
 - 지역조사팀의 운영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역할 분담의 차이를 두는 융통성이 필요함.
 - 조사원들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미래 한국복지패널 조사원의 보강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기획에서 신규 조사원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축적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인포시트에서는 가구원의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업종, 직종 등의 정보 제공이 핵심적인 부분으로, 조사의 정밀성에 대한 인포시트의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인포시트 내용의 축약과 정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유효응답이 응답자의 3% 이하(7000개 사례 기준, 약 210개 이하)인 문항은 63개로, 조사 소요 시간으로 인한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 내용 재조정은 긴요한 사안임. 다만 각 문항의 의의와 활용 등을 분석한 이후에 최종 판단이 가능할 것임.
-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활용은 그동안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을 거듭하여 왔음.
 - 이용자 증가, 중단분석 연구의 증가, 분석 주제의 다양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한국복지패널 활용 연구 목록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노인', '우울', '빈곤', '가구', '웰빙', '변화' 등이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인구집단별 분석, 빈곤에서 복지 태도, 가족, 건강 등으로의 주제 변화가 포착됨.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복지패널의 견고한 기초정보를 근간으로 인구집단별, 주제별 연구로 핵심 주제가 이동, 확산 중인 것으로 판단됨.
 - 한국복지패널은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제화 준비가 충분하지 않음.
 - 현재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영문 유저가이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고 질문지도 영문화가 상당히 추진된 상태이지만 아직 타 패널과의 비교 연구를 위한 표준화 과제가 남아 있고 해외 연구진과의 자료 공유 기획 등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

을 보강하는 등의 기획이 중기적으로 필요.

■ 조사 운영

- 단기적으로는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지역조사팀을 꾸준히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조사의 부담을 고려해 조사 내용의 수정 보완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신규 표본의 교체 및 보강을 기획함과 동시에 조사 외주 등 조사 방식에 대한 근본적 대안도 기획될 필요가 있음.

■ 자료의 활용 및 공유

- 자료의 활용에서는 학술대회의 구성과 진행, 발표 기획의 다변화 등이 필요한 상황.
- 데이터설명회도 기존의 방식에서 더 긴 시간, 풍부한 내용으로 실제 패널 자료의 분석으로 이어지도록 보완될 필요 있음.
- 해외 패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되 이 과정에서 미진한 표준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강되어야 함.
- 정기적 이용자 포럼 등 다양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운영하고 필요한 변수에 한정된 자료 다운로드 등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자료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 모색도 필요함.

정책 제언

■ 표본 및 가중치 부문

- 표본손실과 가중치 변화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

연구보고서
2017- 46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사회 보장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형 연구

A Study on Social security Big Data Analysis and Prediction
Model based on Machine Learning

연구 책임자 오미애
공동 연구자 최현수, 김수현, 장준혁, 진재현, 천미경

연구 목적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대규모로 축적된 데이터에 대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자가 진화를 통한 알고리즘 성능의 지속적인 강화가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회보장 빅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통계기법을 연구함으로써 사회보장 빅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기계학습 기반 예측모형을 설계하고 근거 기반(evidence-based)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 내용

- 사회보장 빅데이터 및 기계학습 개념을 정의하고 활용 사례 및 딥러닝 기법의 동향을 분석함.
- 기계학습 통계기법 비교 연구를 위해 반응변수(종속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Logistic regression, Shrinkage method인 Elastic Net, Decision Tree, Random Forest, Boosting, Support vector machines, Deep Learning 방법을 살펴봄.

- 기계학습 기반 예측모형 평가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모형 평가 방법의 개념을 정의하고 모형 선택 기준을 살펴봄.

- 다양한 기계학습 방법론을 활용한 모형별 비교 평가를 위한 모의분석을 위해 복지수급 예측모형 분석 DB를 구축하고, 앞서 살펴본 방법론들을 비교 분석하였음.

정책 제언

- 기계학습과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하고 기계학습 방법이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음.

- 데이터 주도 혁신 및 정책 추진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기계학습이 가져다줄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음.

연구보고서
2017- 47

2017년 보건복지통계정보통합 관리 및 운영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Health and Welfare Data Portal System 2017

연구 책임자 최현수
공동 연구자 오미애, 진재현, 천미경, 전지수

연구 목적

- 기존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은 통계표 중심으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방대한 국가통계 정보와 차별성을 두고자, 연구원 고유의 다양한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생산된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및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였음.
- 이에 따라 2014년부터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을 보건복지데이터포털로 개편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특히, 2017년에는 포털 이용 경로 분석 기반을 구축하여 근거를 기반으로 데이터포털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보건복지 분야 조사데이터 관리 지원체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향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의 수요와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근거에 기반을 두고 포털 개선 방향을 도출하며 고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건복지 분야 통계자료의 활용도를 향상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함.

연구 내용

- 2010년부터 진행된 연속 사업으로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그동안의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구축 및

개편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2017년 주요 개편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함.

- 2016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고도화를 위하여 추진된 추천 시스템 및 마이크로데이터 연계 방안 연구에 이어 2017년에는 포털 이용자의 경로 분석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특히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으로 보건복지 분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관리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함.

■ 그동안 보건복지통계포털과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구축 및 운영 경과에 대해 정리하였음.

- 2014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로의 구조적 개편과 더불어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이를 개선하고 고도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함.

■ 2017년에 새롭게 추진된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신규 콘텐츠와 주요 개편 사항을 영역별 세부 내용에 따라 개편 전후로 비교하여 제시하였음.

■ 2016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신규 콘텐츠인 추천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방안에 이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포털 이용자의 경로 분석을 위하여 스크립트 방식을 활용한 분석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 ‘보건복지 분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관리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향후 발전 방향 및 추진 계획을 주요 단계별로 구체화한 것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마이크로데이터 기획 및 생산부터 관리, 제공을 통한 활용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별로 세부 추진체계와 업무 프로세스를 제시함.

정책 제언

- 최근 들어 데이터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데이터 주도의 혁신(data-driven innovation)과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한 시대적 흐름에서 보건복지데이

터포털의 중장기 발전 방향은 앞서 언급한 보건복지 분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관리 지원체계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진해야 할 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방향은 추천 시스템과 마이크로데이터 연계 서비스 확대라고 할 수 있음.
 - 향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적용 가능한 추천 시스템 난이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임.
 - 마이크로데이터 연계는 조사 환경 악화로 인해 어려워진 데이터 수집의 효율적인 통계 생산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

■ 기존의 포털 시스템 서비스, 추천 시스템, 데이터 연계 섹션(data linkage section)은 유기적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음.

- 기존의 포털 시스템으로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기가 높은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음.
- 추천 시스템으로 연관성을 분석하여 연관성 높은 연구과제와 데이터를 연계 데이터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통합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통계 시각화 및 인포그래픽스를 통해 제공하도록 함.

■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이 향후 보건복지 분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관리 지원체제로 확장 구축되고 연구적인 성격을 강화하여 연구자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사회과학자료원의 사이트와 명확하게 차별화될 것임.

- 보건복지통계정보 서비스 환경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와 신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임.
- 2017년 구축한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 경로 분석 기반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콘텐츠와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면,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은 데이터 주도의 정책(data-driven policy) 수행이 보다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건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데이터포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연구보고서
2017-50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ICT Governance in Health and Welfare

연구 책임자 이기호
공동 연구자 정영철, 김예슬, 송태민, 류시원

연구 목적

■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는 그동안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지만 최근의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및 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최근의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과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목표 달성과 이에 따른 가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 내용

■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및 정책의 이론적 논의와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보건복지 부문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검토함.

■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보건복지 부문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현황 분석

-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각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산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되고 있

으나 주요 외국의 경우 대체로 정보통신기술(ICT)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집중형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및 정책 수요 분석

-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및 정책 수요를 분석한 결과, 주요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감정(태도)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정보서비스, 정밀의료, 원격의료,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와 바이오산업이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미래의 주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으로 분석됨.

■ 보건복지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이슈 분석

- 보건복지부 정보화사업 담당자들은 현행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에 대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각 분야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장점으로 평가하였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이 어렵고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 체계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

-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과 분산형 ICT 거버넌스 체계, 집중형 ICT 거버넌스 체계, 절충형 ICT 거버넌스 체계 등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조직 및 기능, 장단점 등을 설명함.

정책 제언

■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

-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조직 구조의 변화로 인한 관련 부서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히 공감대를 확보해야 함.

■ 정보통신기술(ICT) 부서의 전문화 및 전담기관 운영

- 정보통신기술(ICT) 조직의 전문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조직의 확대,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제도의 활용, 전문기관 운영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함.

■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자문기구 활성화

-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부족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지식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개선 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관계 부처 간 협력적 정책 추진 및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최근의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은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다수의 관계 부처가 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계 부처 간 협력적 정책 추진 체계를 갖추어야 함.
- 또한 정부 주도의 통제와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간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인 행위자로 참여하여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요 예측

-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요 예측은 정책에 대한 수요와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으로 기대되는바,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정책자료
2017- 03

2017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Social big data trend analysis based on health and welfare issues in 2017

연구 책임자 오미애
공동 연구자 최현수, 송태민, 이상인, 천미경

연구 목적

- 소셜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 환경이 갖추어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정형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13년과 2017년 새 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 이슈 및 관심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소셜빅데이터 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이슈를 다루었음.

연구 내용

-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정책 동향 및 이슈 분석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 대선 이후까지 보건복지 정책 영역에서 다루어진 주요 정책 이슈와 관련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러한 이슈와 관련하여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16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한 연구 동향을 파악함.
- 소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으로 텍스트 마이닝의 전반적인 설명 및 네트워크 모형, 토픽 모형을 살펴봄.
- 전문가들이 선정한 보건 분야의 5개 정책 이슈(의료보장성, 응급의료체계, 노인장기요양, 보건의료체계, 건강증진)에 대해 2013년과 2017년 새 정부 출범 초기 추진과

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워드클라우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음.

- 전문가들이 선정한 복지 분야의 8개 정책 이슈(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노후소득보장, 아동인권, 복지전달체계, 저출산, 사회서비스, 장애인 권익)에 대해 2013년과 2017년 새 정부 출범 초기 추진과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워드클라우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음.

정책 제언

- 다양한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보건 분야의 정책 이슈 가운데 보건의료산업, 자살, 식품안전, 복지 분야 정책 이슈 중 고용복지 연계 관련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2013년 초 박근혜 정부 당시 설정된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과 2017년에 출범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주요 공약 및 정책 브랜드 네이밍의 차이로 인해 정책 이슈별 하위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 수집 결과에 왜곡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임.
- 소셜미디어상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영역별 이슈를 키워드 중심으로 상이한 시점을 비교 분석할 경우, 해당 정책 이슈와 관련된 제도 및 프로그램이 가진 브랜드 네임 등 고유명사를 각 시점에 맞게 설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음.
- 향후 정책 동향 관련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 시점 또는 특정 정부 간 세부 정책 영역별 이슈에 대한 언론 동향 및 소셜미디어상의 반응을 비교할 경우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04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ANNUAL REPORT

KiHASA

2017년 연구 활동

-
- 01. 2017년 주요 행사
 - 02. 정기간행물
-

2017년
주요 행사

■ 국제회의

행사명	개최 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 주최/주관(후원)
제1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과 대응	2. 23.	저출산·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현실을 진단하고, 장기간 많은 정책적 실험을 해 왔던 일본의 정책 경험을 공유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의료시스템 혁신 성과 평가 방안에 관한 공동세미나	4. 10. ~4. 11.	미국 의료 질 보고서(NHQDR) 개정 내용 공유, 한국 의료 질 보고서 개정 내용 공유 및 정책적 활용 방안 논의, 환자중심성 및 환자경험 관련 조사 (CHAPS) 및 평가지표 활용 방안 논의, 환자안전에 대한 양국 간 제도 및 정책 공유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 Quality
시니어시프트(Senior Shift) 시대의 고령소비자 정책 한·일 국제 세미나	6. 1.	한·일 고령사회 대응 정책, 일본의 고령 소비자정책 현황 및 과제, 한국의 고령 소비자정책 현황 및 과제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	한국소비자원, 일본 국민생활센터
2017 한일 공동 워크숍 - 한일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보호 제도	8. 21.	한·일 영유아 보육 정책 현황과 정책 과제 연구 발표 및 토론	한국소비자원, 일본 국민생활센터
	8. 23.	한·일 아동 보호 제도 현황과 정책 과제 연구 발표 및 토론	
노인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와 노쇠 관리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8. 30.	각 국가의 병원 기반의 노인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기반의 노쇠 예방 및 관리서비스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 수렴	연세대학교 의료원
한국복지패널(KOWEPS)과 일본가구패널(JHPS/KHPS) 국제학술회의	10. 19.	한국복지패널과 일본의 대표적인 가구 패널인 JHPS와 KHPS를 소개하고, 양 패널을 활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양국의 사회보장연구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도모	
2017 국제 인구 컨퍼런스: 고령화 시대 저출산 문제의 도전과 대응	10. 19. ~10. 20.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전 세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 OECD 국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시사점 도출	보건복지부, OECD, UNFPA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제와 성과 측정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10. 26.	미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의료시스템 혁신을 통한 가치 향상과 성과 측정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그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	
유럽의 가족정책과 출산: 한국의 시사점	10. 30.	유럽 국가들의 인구 변동과 대응 노력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들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독일연방연구소, 독일연방외교부 주한 독일 대사, 중앙일보

행사명	개최 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 주최/주관(후원)
2017 KIHASA-EWC 컨퍼런스 및 워크숍: 저출산, 노동시장 및 가족 간 상호작용과 정책적 함의	11. 19. ~11. 23.	저출산, 노동시장 및 가족 간 상호작용과 정책적 함의에 대한 연구 발표 및 토론	미국 하와이대 East-West Center

■ 정책토론회 등

행사명	개최 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 주최/주관(후원)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3. 8.	보건복지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부처 논의	보건복지부
고령친화형 식품의 제도적 시스템 구축 및 경제·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국회토론회	3. 16.	고령자의 영양 섭취 이대로 좋은가?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정책 방향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건강 현황과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제공 모형 포럼	3. 23.	제1차 건강노화 및 노인친화적 의료 포럼	
한국노년학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주최 정책세미나	3. 24.	초고령사회 혁신적 대응 전략,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과 노인복지,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국노년학회
아동빈곤포럼	3. 31.	OECD 및 한국의 아동빈곤	
발달장애인 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복지전달체계 포럼	4. 21.	복지전달체계의 흐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등 관련 발표 및 토론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건강 현황과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제공 모형 포럼	4. 26.	제2차 건강노화 및 노인친화적 의료 포럼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설명회	4. 28.	1~11차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설명 및 특별 강연	
정책연구기관 공동 전시회	6. 12.	대한민국 정책연구, 한눈에 보다	
아시아사회정책연구 컨퍼런스	7. 10.	한국과 중국의 아동 및 노인복지의 최근 동향	
새정부 보건복지정책 기초강연 세미나	7. 13.	새 정부 보건복지정책의 기초와 주요 내용	
한국의료패널 데이터 설명회	8. 29.	한국의료패널 자료 설명회	
의·한의 이원화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포럼	10. 26.	'의료계·한의학·소비가 입장에서의 의료 이원화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발표 및 토론	

2017년
주요 행사

행사명	개최 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 주최/주관(후원)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연구 공청회	11. 27.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토론	보건복지부
2017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치매노인을 위한 공적 책임의 강화	12. 8.	치매 국가책임제의 적절한 구현에 대한 논의와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 대토론회	12. 28.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추진방향 공유 및 논의	보건복지부

■ 정책포럼

행사명	개최 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 주최/주관(후원)
기초보장 현장모니터링 포럼	4. 18.	기초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와 관련 지원제도 체계 및 연계성	
	11. 8.	자활제도 쟁점과 개선 방안	
	10. 27.	지역자활센터 실무자의 자활제도 진단과 개선 방안	
	12. 22.	2017년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 •1주제: 기초보장제도 현안과 발전 방향 •2주제: 자활지원제도 현안과 발전 방향	
사회보장 모니터링 포럼	6. 29.	장애인연금제도의 이해 및 사각지대 쟁점 발굴	
	9. 27.	호주 사회보장 동향: 통제와 효율의 제도적 실천	
사회통합포럼	5. 19.	한국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9. 6.	새 정부에 바라는 사회통합 과제	
	12. 13.	사회적 통합으로서의 사회통합 - 이주민 문제를 중심으로	
통일사회보장 세미나	1. 18.	2015-16년 북한사회 변동과 합의	
	2. 14.	스웨덴의 이주·난민정책	
	2. 21.	시진핑시대 중국사회보장제도의 변화와 전망	
	3. 14.	통일독일의 사회법제 변화와 전망	

행사명	개최 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 주최/주관(후원)
통일사회보장 세미나	4. 4.	북한조사연구 경험과 사례	
	6. 15.	환대의 윤리와 평화	
인구포럼	2. 24.	주요 저출산대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10. 27.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정책에 대한 다학제적 검토	
	12. 19.	저출산 대응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강화	
사회적기업 포럼	4. 18.	제1, 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5. 23.	각국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6. 27.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당면한 문제와 개선 방향	
	7. 11.	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방향과 주요 개선 과제	
	7. 25.	사회적기업의 금융, 창업 및 경영 지원	
세종통일연합포럼	3. 28.	2017년 국책연구기관들의 통일·북한 연구의 방향	
	8. 3.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	
고령사회포럼	1. 19.	적극적인 노인의 역할 모색 관련 포럼 개최	
	3. 29.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5. 10.	장수시대 사회, 문화적 격변에 따른 고령자의 위상과 역할	
	7. 11.	고령화 시대의 노인의 역할	

■ 학술대회(후원 포함)

행사명	개최 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 주최/주관(후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	5. 19.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국민연금연구원, 한림대학교 행복연구팀
2017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5. 26.	왜 시민은 다시 광장에 나서야 했을까?: 민주화 30년, 한국사회 정책의 반성과 과제	한국사회정책학회, 중앙대 사회복지 대학원, 참여사회 연구소, 한국노동 연구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년 제16차 Korea and the World Economy 국제학술대회	6. 29. ~6. 30.	New Paradig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한국경제연구학회, RCIE, 베트남사회과학원 등

2017년
주요 행사

행사명	개최 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 주최/주관(후원)
2017년 한국재정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6. 30.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	한국재정정책학회, 충남대 국가정책연구소, 충남대 경영경제연구소,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2017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	9. 8.	신정부의 복지정책과 사업 성과 분석·평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지방공기업평가원, 월드리서치
제10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9. 15.	1~11차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17년 통일보건의료학회 추계학술대회	10. 13.	통일 준비와 보건의료 정책	통일보건의료학회
2017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10. 13.~10. 14.	새 정부의 조세·재정개혁 과제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금융연구원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10. 13.~10. 14.	IMF 경제위기 20년, 한국 사회의 격차 해소 전략과 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복지법제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등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7 추계학술대회	10. 20.~10. 21.	사회복지 노동과 임금: 열정을 가로막는 보상체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17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10. 27.~10. 28.	한국사회복지: 반성과 변혁을 꿈꾸다	한국사회복지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굿네이버스,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자광재단, 중앙자활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2017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11. 3.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논하다	한국보건행정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7 한국노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11. 3.	노년, 불안을 말하다	한국노인복지학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7 IAFICO Global Forum for Financial Consumers	11. 3.~11. 4.	Financial Consumer, Society and Global Development	국제금융소비자학회(IAFICO), China InsurTech Lab, Fudan University, Financial Research Center, Fudan Development Institute, 성균관대학교 등

행사명	개최 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 주최/주관(후원)
2017년 한국복지경영학회 동계 학술대회	12. 5.	고령친화산업과 복지경영	국회의원 김중석, 한국복지경영학회, 광주복지재단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12. 14.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국민건강보험

■ 해외 연수

연수 일자	연수 내용	연수 기관
4. 28.~5. 28.	- 소득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논의 전망을 기본과제 수행에 반영 - 사회적 위험의 불평등 관련 연구자료 수집 및 동향 파악 - 리즈 대학교, 에든버러 대학교, 글래스고 대학교 방문 및 연구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확대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LSE)
5. 3.~5. 28.	-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국제적 연구 동향 파악 - 해외 시간소비 자료의 축적과 활용에 대한 정보 수집 • 2017년 기본과제 연구보고서 내용에 반영 - 소득보장제도의 환경 변화와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최근 이슈 파악 - 요크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협력 연구 중 기초 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정보 수집과 연구자 교류, 네트워크 구축 - 요크 대학교와의 MOU 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등 사전 논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요크 대학교(Dept. of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MOU 체결(11. 24.): 논문 및 출판물 교류, 세미나·컨퍼런스 참여 확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요크 대학교
4. 20.~5. 19.	- 독일 인구 현황, 연구 동향, 정책 지원 현황 논의 및 자료 수집 -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한·독 인구 문제 공동 연구 방안 논의 - 독일 인구전략(demographic strategy) 현황 자료 수집(독일 내무부) - 독일 지역 인구변동(지방소멸 문제) 현황, 연구 및 정책 동향 논의 (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und Raumforschung, BBSR) - 독일 인구변동에 따른 이민 현황 및 정책 논의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BAMF) - 독일 지방 인구정책 동향 논의(라인랜드 주 정부) - 독일 출산 동향 및 추계 방법 논의/인구통계 관련 네트워크 구축(독일연방통계국)	독일 연방인구연구소(BIB)

2017년
주요 행사

연수 일자	연수 내용	연수 기관
11. 5.~1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 전문가와의 연구 협력 • 보건계정 자료 분석과 WHO 보건계정데이터베이스 검토 •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발표와 이슈 논의 •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과 재정 위험 분석 	WHO
11. 26.~1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네트워크 형성(2018년 국제세미나 개최 논의) - 영국의 지역박탈지수 산출과 정책적 활용에 관한 논의 - 영국의 지역 단위 건강형평성 정책에 관한 논의 	영국 킹스칼리지
12. 4.~1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적 복지시스템에서의 가족정책 방향 논의 - 미국 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및 최근 연구 이슈 파악 - 대학교 방문 및 연구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확대 	미국 UIUC/CSU

■ 특강 / 교육

주제	개최 일자	운영 목적
[인문학 특강]		
미학과 예술의 가치	2. 6.	인문학적 소양 함양 및 창의적 사고 발전
예술/동성애/죽음: 문학과 영화	2. 22.	
문학과 영화에 나타난 치매	4. 3.	
두 가지 거짓말로 본 고대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	7. 3.	
천황과 일본	11. 6.	
[공통역량 강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9. 4.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통한 직장문화 조성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1. 2.	안전의식 수준 향상
청탁금지법 사례 설명	6. 7.	청렴, 반부패 의식 함양
연구윤리교육	8. 22.	연구윤리 의식 제고
개인정보보호교육	5. 8.	개인정보보호 의식 향상
정보보안교육	3. 6.	정보보안 의식 향상

주제	개최 일자	운영 목적
글쓰기 교육(1~7차)	7. 25./7. 26. 8. 1./8. 2./8. 8. /8. 9./8. 17.	문서 표현 및 기획 능력 향상
공문서의 바른 표기, 표현 교육	10. 30.	올바른 공문서 작성법 습득을 통한 행정 신뢰도 개선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1~4차), 연말정산 교육	2. 21./3. 31. 8. 10./11. 2.	직원 업무 적응도 향상
[기초연구 역량 강화]		
통계계량교육(1~6차)	1. 2./1. 9./1. 16. /2. 6./2. 20. /2. 27.	연구기초 역량 강화 및 당해 연도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활용
통계학 및 계량경제학 기초 및 응용(1~8차)	3. 12. 4. 3./4. 10. 4. 17./4. 24. 5. 15./5. 22. 5. 29.	
머시러닝을 활용한 소별 빅데이터 분석과 미래 신호 예측 1~4차(위탁 교육)	4. 21./4. 28. 5. 12./5. 19.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단기강좌(위탁 교육) - 구조방정식모형, 패널분석, 위계선형모형	4월/10~12월	

■ MOU

기관명	체결 일자	협약 내용
[국외]		
영국 요크대학교	11. 24.	- 연구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인력 교류 및 연구자료, 지식·학술 정보의 교류 추진 합의
[국내]		
한국연구재단	10. 1.	- 학술 정보 공유 - 한국연구재단의 KCI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건복지 분야 연구 동향 서비스 구축

정기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보건의료, 사회보장, 사회복지, 저출산·고령화, 보건복지 정보통계와 관련된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연 4회 발행합니다.

• 제37권 제1호

논문 제목	저자
대학생의 우울, 대처동기, 음주문제의 관계: 자기처방가설의 검증	장수미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홍구표, 전혜성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사회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임성범
혼인이주여성의 출산아수별 출산계획: 계층이동 경험과 외국인 비종의 영향을 중심으로	유정균
다문화부부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갈등반응행동 간의 관계에서 희망과 부부친밀성 및 지원서비스 이용의 조절효과	현경자, 김정화
노년기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와의 관계: 연령집단별 분석	최은영, 조성은, 오영삼, 장희수, 김영선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태도	유계숙, 김제희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의 증가가 남성 고령자(58-60세)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	최요한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과 취업여부의 상태변화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연구: 노인과 비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말숙, 송진영, 박용순
노인장기요양보험 효과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복지패널 1차부터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전해숙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조직 내 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이상조, 조성숙
노인요양시설 리스크매니지먼트시스템과 안전문화가 요양보호사의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주찬희
충북지역 사회적경제기금 단일사례연구	이현주
혈액중양 관련 인터넷 상담 질문에 대한 내용분석: 사회복지상담을 중심으로	이인정
병원 외래고객 만족도 평가의 의료서비스 최적화 방법 적용	지은희, 강성홍, 김유미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추정: 말기암환자를 중심으로	박수경
종합병원 간호사의 내부마케팅이 고객지향성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제남이, 한지영
알코올 가용성과 음주행태 관련성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권리아, 신상수, 신영전

논문 제목	저자
Alcohol Dependence Assessment in South Korea and Mainland China	Mtwesi, Mandisa Pumla; Serrano, Salim; Chun, Sung Soo; Ziba, Patrick Wyson

• 제37권 제2호

논문 제목	저자
친정과의 거리와 자녀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배호중, 한창근, 양은모
양육자가 인지한 지역사회 및 주거환경 특성과 유형별 아동학대의 관계	강지영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박병선, 배성우,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
Impacts of Language Use, Family, School, and Neighborhood on Mental Distress: Analyzing Data on Immigrant Youth in California	Hong, Seokho; Lee, Sang Jung; Harrington, Donna; Kim, Moo-Hyun
중년기 부부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차근영, 김석선, 길민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우울 불행명 정도: 2006년부터 10년간의 변화궤적을 중심으로	유창민
도시지역 1인가구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유형과 우울수준	강은나, 김혜진, 김영선
노인의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참여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용석, 원도연, 노재현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한 한국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유형화와 영향요인 분석	김수영, 김명일, 장수지, 문경주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건강성과의 발달궤적 및 연령차에 관한 연구	이현숙, 염영희
자살 시도자를 향한 사회적 낙인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안순태, 이하나
사회서비스 통합 바우처 제공 경험에 관한 민간 공급자 FGI 분석	김윤영, 이정기
'괜찮은 직업복귀(Decent Return-To-Work)': 개인, 분절된 노동시장, 제도 차원의 접근	이정화

정기간행물

논문 제목	저자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규제의 합리화 방안 연구	석재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비에 미친 영향: 본인부담금을 중심으로	김관옥, 신영전
습관형성 효용함수를 이용한 상이한 중독 심화도의 비교: 흡연과 음주를 중심으로	김세완, 정익중
Association between Behavioral Risk Factors and Self-Rated Health: Data from National Health Surveys in South Korea and Thailand	Pholpark, Aungsumalee; Shin, Hye Ri; Aekplakorn, Wichai
중년기에 암 진단을 받은 후 생존한 사람들의 투병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박지승
대전 지역 초등학생의 알레르기질환 유병의 영향요인	김현
특허만료 당뇨병용제의 가격탄력성 분석: 일괄 약가 인하 전후 비교	권순홍, 이재현, 이진형, 이의경

•제37권 제3호

논문 제목	저자
자녀교류, 사회적 교류, 고령친화적환경과 연령다양성의 관계: 연령집단별 분석	정순돌, 정세미, 이미우
한국 노인들의 유산상속 동기는 무엇인가: 자산이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만족도, 정서적 지지의 조건부과정분석	노재현, 신용석, 원도연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인식연구: 통계적 차별과 접촉가설을 중심으로	지은정
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여가시설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김세진, 강은나
연령집단에 따른 노인의 허약(Frailty) 예측요인 분석	조성은, 최은영, 오영삼, 김영선, 김성복
노인 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학대의 유형과 중복 경험,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박금령, 정진주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패널 로짓 모형의 활용	이상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복지용구대여제에 관한 연구: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표적집단면접조사(FGI)를 중심으로	권진희, 김혜경, 나영균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차별의 상태변화가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에 미치는 영향	송진영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혼인 해체	우해봉, 장인수
다자녀 출산의 결정요인 연구: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병호, 박민근
Coping Strategie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Korean Childhood Cancer Survivors	Kim, Min Ah; Yi, Jaehee

논문 제목	저자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경제적 수준으로 조절되지 않는 부적관계	신희성, 김태익, 박유빈, 박선웅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및 우울상태에 미치는 영향: 정규직 근로자와의 비교분석	김진현
유치원장의 건강과 일: 유치원장의 갱년기 증상이 유치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윤희수, 문성제, 최만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증진 방안: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전혜숙, 전종설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의료관련감염 환자안전지표의 검증	김남순, 황정해, 박성희, 채수미, 최윤경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에 대한 개원의의 인식 및 행태	이슬기, 박실비아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적응대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신호성, 이수형
청소년의 담뱃갑 경고그림 지각 관련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은수, 정민수

•제37권 제4호

논문 제목	저자
장기요양 인정자의 최초 재가급여 선택과 유지 및 이탈에 대한 영향요인: Aging in Place 지원을 위한 탐색	석재은, 이기주
노인요양시설 인력의 문화변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이민홍
장기요양시설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등급과 운영의 변동을 가져왔는가?	유재연
한국형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K-ADL)의 타당도 및 측정불변성 검증	박수지, 박병선
사회·경제적 지위가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 영양소섭취를 중심으로	김민지, 임재영
한국인의 건강불안정성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배그린, 문정화, 강민아
우리나라 결핵 실태 및 국가 결핵관리 현황	조경숙
한국 자살 위험의 지역적 격차와 그 시공간적 고착 구조에 관한 연구	노법래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맹성준, 한창근
한국남성의 흡연행동 변화에 대한 연구	박현용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한 성인의 미충족 치과의료 영향 요인과 이유 분석	유세희, 박일수, 김유미
지역별 의료 자원의 성과 효율성 분석	장인수, 권대영, 김홍석

정기간행물

논문 제목	저자
사회통합 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 가중치 적용 방법론을 중심으로	정해식, 구혜란, 김성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김영중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 근거한 동 단위 공공복지 기능의 영향요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현
트라우마 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들의 경험 연구: 안산온마을센터를 중심으로	한소정, 박미정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영향요인 분석	임혜정
북한의 의학잡지 분석을 통한 천연물의약품 연구동향	신희영, 성상현, 최소영, 안형순, 전지은, 이동영
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민기채, 주보혜

■ 보건복지포럼

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 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로서 월간으로 발행합니다.

호	유형	제목	저자
1월호 통권 제243호	권두언	2017년 보건복지 정책 방향	김상호
	이달의 초점	2017년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정책과제	김남순, 윤강재, 김동진, 박은자, 서제희, 전진아
		2017 건강보험 정책 방향: 혁신을 통한 형평과 효율의 조화	강희정
		인구 및 출산 동향과 대응 방향	이상식
	정책 분석	2017년 복지행정 부문의 정책 방향	강혜규, 정홍원, 함영진
		보건복지재정 운용 구조와 특성	박인화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수준과 정신건강 지원 현황	전진아, 최지희
		2015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예비조사: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조사를 대상으로	정기혜, 김동영, 이경윤
	보건복지 소식 광장	국내 보건복지 동향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소식 광장	국제 보건복지 연구 동향	편집부

호	유형	제목	저자
2월호 통권 제244호	권두언	청년 정책을 확대해야 할 때	김상호
	이달의 초점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김태완, 최준영
		청년 고용 및 빈곤의 국제적 조망과 시사점	김문길, 이주미
		청년층의 주거 실태는 어떠한가	이태진, 우선희, 최준영
		청년 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	김기현
	정책 분석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현황 분석: 지역성을 중심으로	이정은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일본의 자녀·육아 신제도 시행과 과제	조성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데이터 세분화 방향	진재현
	보건복지 소식 광장	국내 보건복지 동향	보건복지부
		국제 보건복지 연구 동향	편집부
3월호 통권 제245호	권두언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통합의 과제	박경귀
	이달의 초점	사회통합 국민 인식의 분석과 정책적 함의	정해식
		사회통합 인식 수준의 국제 비교	우선희
		사회갈등 및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김문길
		박탈의 실태 진단 및 사회통합에 대한 함의	여유진
	정책 분석	노년기 정신적 습관의 실태와 생활습관과의 관련성	채수미
		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과 건강행태와의 관련성	최지희, 전진아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의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박은자
		영국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김현경, 김근혜
	보건복지 소식 광장	국내 보건복지 동향	보건복지부
국제 보건복지 연구 동향		편집부	
4월호 통권 제246호	권두언	건강증진사업의 윤리적 가치와 지식 기반	김혜경
	이달의 초점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김동진
		금연지원정책지표의 현황과 발전 방향	최은진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의 개선 방안	이주열
		장애인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중심으로	임종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최근의 정책적 변화	전진아, 이난희, 김진호

정기간행물

호	유형	제목	저자
4월호 통권 제246호	정책분석	청년 재취업에 대한 정책적 결정 요인 분석	임완섭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북유럽 국가의 복지기술 활용과 시사점	김태은
		개혁 이후 - 트럼프 시대의 미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치	정웅기
	보건복지 소식 광장	국내 보건복지 동향	보건복지부
국제 보건복지 연구 동향		편집부	
5월호 통권 제247호	권두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김형모
	이달의 초점	아동학대 현황과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향	류정희
		장애인 인권 현황 및 정책과제	이동석
		노인학대 현황 및 정책과제	정경희
		가정폭력 현황과 정책과제	송아영
	정책분석	복지서비스 현장에서의 학대 현황 및 개선 방안	이윤경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특성과 정책과제	김유경
		주택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오신휘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중국의 식품접촉물질 및 관련 제품의 관리 동향과 시사점	김정선
		보건복지 소식 광장	국내 보건복지 동향
국제 보건복지 연구 동향	편집부		
6월호 통권 제248호	권두언	건강보험의 혁신이 필요한 때	최병호
	이달의 초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혁신 방향	신영석
		국민의 걱정 부담을 위한 비급여 관리 방향	공진선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정립을 위한 쟁점	최기춘, 이현복
		의료기술의 평가와 급여 결정 방향	박종연
	가치 향상과 의료 혁신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방향	강희정	
	정책 분석	민간 중심의 민관 협력 활성화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함영진, 김태은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일본의 아동수당과 한국의 가정양육수당 비교	김성아, 김태완
보건복지 소식 광장		국내 보건복지 동향	보건복지부
7월호 통권 제249호	권두언	끝없는 출산율 하락, 대안은 있는가	김태현

호	유형	제목	저자
7월호 통권 제249호	이달의 초점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현황과 추진 과제	김은정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	박종서
		임신·출산 지원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추진 방향	이소영
		결혼 지원 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변수정
정책분석	7월호 통권 제249호	인구경쟁력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	이상림
		모유수유 실천 관련 사회환경적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최은진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조사통계의 데이터 세분화 수준 분석과 표준화를 위한 제언	진재현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8월호 통권 제250호	권두언	통계는 수치를 넘어서 정책이다	권덕철
	이달의 초점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보건복지 지표의 현황과 과제	고경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주도 정책 추진 필요성과 방향	최현수, 오미애
		OECD 국가 합계출산율 트렌드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	박아연
		보건복지 부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이기호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통계 생산 과제	신정우	
	정책 분석	장애노인 돌봄의 정책 도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세진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9월호 통권 제251호	권두언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공공 부문 일자리정책 과제	이인재
	이달의 초점	보건의료 전문직종에서의 일자리 창출	정형선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향후 과제	강은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 쟁점과 과제	유태균
	정책분석	사회적경제의 고용 이슈와 정책과제	김성기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영국의 대응 정책 분석과 함의 고찰	김동진
보건복지 소식 광장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배혜원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10월호 통권 제252호	권두언	한국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방향: 가족 가치의 강조와 공동체적 의식의 확산	최연실

정기간행물

호	유형	제목	저자
10월호 통권 제252호	이달의 초점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부양 환경과 정책과제	김유경
		가족의 경제위기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	조성호
		건강 취약 가족의 욕구와 정책과제: 소아암 생존 및 희귀난치병 청소년 가족을 중심으로	김미숙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여봉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가족 서비스 지원 체계 효율화 방안 모색	이진숙
	정책분석	일반인의 건강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채수미
		아동방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이주연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11월호 통권 제253호	권두언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과제	한동우
	이달의 초점	새 정부의 복지 전달체계: 정책 기조 검토와 과제 제언	강혜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황과 과제: 정책의 전국화에 따른 점검	황금용
		복지 부문 민관 협력의 추진 여건과 과제	함영진
		마을 만들기 - 주민자치와 복지의 상생	김필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 경과 및 과제	추병주, 박선미
	정책 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족 수발자 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이선희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12월호 통권 제254호	권두언	고령사회 도래와 미래 준비에 대한 단상	김근홍
	이달의 초점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 방향 모색: 일본 사례의 시사점 검토	이윤경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정경희
		고령사회의 돌봄 대상 노인 확대에 따른 정책적 대응	선우덕
	이달의 초점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	오민홍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관련 법제 개편 방향	박종준
	정책분석	신중 담배 규제 정책의 방향	최은진
아동빈곤의 특성과 청년기의 영향		김태완, 이주미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

보건·복지 관련 주요 이슈를 제공하여 국가 사회정책에 기여하고자 발행합니다.

호	제목	저자	발행일
제330호 (2017-01)	사람 중심 보건의료제도와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신정우	2017-02-06
제331호 (2017-02)	저소득층의 소비 특성과 그 함의	이현주	2017-03-13
제332호 (2017-03)	비혼 동거 인구의 경험 및 가치관	변수정	2017-03-27
제333호 (2017-04)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의 사회적 위험과 복지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최현수 오미애	2017-04-10
제334호 (2017-05)	한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복지지출 역할에 대한 비교 연구	임완섭	2017-05-08
제335호 (2017-06)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체계 구축 방안	황도경	2017-05-22
제336호 (2017-07)	아동빈곤의 추이와 함의	여유진	2017-06-05
제337호 (2017-08)	주관적 안녕의 추이와 함의	정해식 우선희	2017-07-03
제338호 (2017-09)	치매 위험요인 기여도 분석과 치매 관리 방안 모색	정영호 고숙자	2017-07-17
제339호 (2017-10)	한국 복지국가의 현 좌표	여유진	2017-08-21
제340호 (2017-11)	지역박탈에 따른 회피가능사망을 격차와 함의	김동진 이정아	2017-09-18
제341호 (2017-12)	노인의 특징별 맞춤형 식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방안	김정선	2017-11-13
제342호 (2017-13)	고가 신약의 효과적 급여 관리를 위한 해외 동향과 시사점	박실비아	2017-11-27
제343호 (2017-14)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 부문별 비용의 추이-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정연 정수경	2017-12-04
제344호 (2017-15)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진단과 과제	신윤정	2017-12-26

정기간행물

■ Global Social Policy Brief

국제 사회보장정책 동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2월까지 매주 발간하였습니다. 2017년 6월부터는 국제사회보장리뷰를 통해 더욱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발행일
1	중국의 대기오염 적색주의보	2017-01-02
2	2017년, 기본소득 실험의 해	2017-01-09
3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현황 및 관리 방안: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2017-01-16
4	영국의 정신보건 개혁	2017-01-23
5	초고령 사회 일본	2017-01-30
6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 국민불행률 감소를 위한 사회 실험	2017-02-06
7	캐나다의 성과관리제도와 평가: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2017-02-13
8	세계경제포럼의 포용적 성장 모델	2017-02-20
9	4차 산업혁명과 평생 학습	2017-02-27

■ 국제사회보장리뷰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동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합니다.

권호(발행월)	번호	주제	저자
창간호 (2017. 6.)	0	창간사	김상호
	1	고령화시대 영국 국가보건료서비스(NHS)의 과제와 전망	닐 런트
	2	트럼프시대 미국의료보험의 개편과 전망	정지아
	3	독일 주치의 공급의 지역격차	마틴 알브레히트
	4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최근 개편 동향: 마크롱 정부의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노대명
	5	기본소득제도와 스웨덴의 대응	최연혁
	6	이민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과제	이창원
	7	OECD 제130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노동환경 변화와 새로운 사회안전망	김현경
	8	제140차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의 주요 논의	전진아
	9	미국 이민 정책의 역사와 전망	김태근
	10	일본의 동일노동·동일임금 관련 최근 이슈	유야마 아쓰시
11	스웨덴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 개선 방안	송지원	

권호(발행월)	번호	주제	저자
창간호 (2017. 6.)	12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SGB VIII-Kinder und Jugendhilfegesetz)* 개편과 시사점	장주리
	13	세계 각국 아동수당제도의 성격 및 유형	최영
	14	독일의 아동수당 현황	정재훈
	15	프랑스 가족수당의 현황과 시사점	신윤정
	16	오바마케어 대체에 실패한 트럼프케어: 미국 의료보험정책의 정치사회적 함의	김태근
	17	홍콩과 싱가포르의 보건료 재정 개혁: 두 도시 이야기	알렉스 허, 제이슨 잉
통권2호 (2017. 9.)	18	중국 아동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쩌우보
	19	디지털 근로 환경에 대응하는 프랑스의 연결차단권	이지현
	20	뉴욕주의 대학 등록금 무상 제도	김민희
	21	트럼프의 반복적 예산안	김정윤
	22	일본 사회보장재정의 현황과 과제	김명중
	23	일본의 아동학대 증가와 아동보호 강화	유야마 아쓰시
	24	스웨덴 정부의 양성평등 육아휴직 정책	송지원
	25	영국 아동수당정책의 개혁과 전망	서영민
	26	제21차 OECD 보건위원회: 사람 중심의 보건료제도	강희정
	27	영국의 복지 긴축, 어떻게 볼 것인가?	마틴 파월
통권3호 (2017. 12.)	28	영국 복지 긴축의 영향: 불평등에서 '브렉시트(Brexit)'까지	최영준 이승준
	29	영국의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예산 긴축과 그 결과	전용호
	30	미국 주택바우처 전달체계의 최근 개편 논의와 정책 동향	진미윤
	31	미국의 고용·훈련정책과 견습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	안수란
	32	호주의 완화의료 및 생애말기의료 정책 동향	데이비드 커로
	33	일본의 의료·개호비 장기추계 방법	도이 다케로
	34	핀란드 소득보장정책과 기본소득 실험	신영규
	35	아이슬란드의 남녀 동일노동·동일임금 인증제	이지현
	36	2018년 예산안에 나타난 스웨덴 정부의 사회복지 개혁 방향	송지원
	37	일본 노인주택의 최근 이슈	유야마 아쓰시
	38	일본 정부의 장시간 근로 대책과 향후 과제	김명중
	39	중국 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및 과제: 2017년 상하이(上海)시 장기요양보험을 사례로	유명

정기간행물

■ Research in Brief

해외 전문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보건복지 관련 이슈를 영문화하여 발간합니다.

번호	제목	저자	발행월
1	Changes in Subjective Well-Being and Their Implications	정해식 우선희	2017-08
2	The Role of Social Spending in Korea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임완섭	2017-06
3	Non-Marital Cohabitors in Korea: Their Experiences and Values	변수정	2017-04
4	Consumption Characteristics of Low-Income Household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이현주	2017-04
5	Recent Poverty Trends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One-Person Households	임완섭	2017-03
6	Social Security Financing and Mandatory Spending in 2017	박인화	2017-02

05

2018년
연구 사업

-
01. 2018년도 사업 목표
 02. 2018년도 연구사업 운영 방향
 03. 2018년도 사업 개요
-

2018년도
사업 목표

총괄 목표	사회보장정책의 국가 비전 선도와 국가 정책에 대한 기여도 제고
세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 - 미래 사회 대비, 선제적 사회정책 대안 설계 -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최적의 서비스 수급 여건 마련 - 저출산·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상별 심층 연구 및 정책 방향 제시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발전 사회 구현 - 전략적 사회보장재정 운영 및 평가체계 마련

2018년도
연구사업 운영
방향

- 보건의료체계 질 제고 및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건정책 개발**
 - 4차 산업혁명 및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관련 연구 수행.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전략 개발 연구 추진.
 - 근거 중심 보건의료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 평가 및 지식확산체계 구축 연구 수행.
- 미래 사회 대비, 선제적 사회정책 대안 설계**
 -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는 현금지원 및 현물지원정책의 선택과 설계 시에 활용 가능한 정책 대안에 대한 심층 연구.
 -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분배 효과 분석.
 - 향후 남북한 통합 및 통일과 연관된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미래 변화 양상에 부합하는 복지모형을 지속적으로 연구.
- 저출산·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심층 연구 및 정책 방향 제시**
 - 가족정책
 - 중·장년층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중 부양 부담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하여 중·장년층 가족의 균형 있는 가족부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 고령사회 대응 정책
 -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근거에 기반한 정책 개발 기초 마련.

- 치매 노인과 돌봄 제공자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 노인 인권[치매 노인의 증가,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 연명치료 등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아동복지정책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와 폭력 경험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대상 집단을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 개입 전략 검토.
 -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사회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아동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증진하는 방안 검토.
 - 아동가구소득지원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검토.

■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

- 향후 5년은 인구 보너스(demographic dividend)의 마지막 기간으로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성공적 대응을 위해 중요성이 높은 시기.
- 노년기 사회참여 활성화 및 자립생활 지원 방안.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와 정책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논의의 장 마련.

■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최적의 서비스 수급 여건 구축 연구

- 사회보장정책의 총괄 조정 모색 및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 장애인 권리 보장을 통한 고용 격차 해소.
- 급속도로 진행되는 '정보화'가 야기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보건복지서비스 모색.
- 보건의료 분야, 사회복지 분야의 다년도 패널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다양한 사회조사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 기반 정책 수립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

■ 증거 기반 사회보장 평가 및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 조정 지원

- 사회보장 평가 및 조정 방안 연구를 통한 성과 지향적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지원.
- 지식경제사회 진입 이후 산업구조 조정, 장기 고용 감소 및 자영자 증가 등 각종 사회적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보장 미래 위험 관리 톨 개발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해 시설 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

■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

-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정책 방안 제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안정적인 통합모형과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 필요.

2018년도
사업 개요

■ 기본연구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관련 국정과제
1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연구	-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그리고 보건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죽음 여정과 경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2	건강행태의 변화에 따른 질병 예측 및 질병 부담 추계 연구	- 국내외 질병 예측 및 질병 부담 모형을 검토하고, 새로운 예측 기법을 도입하여 관련 예측을 시도함으로써 정책적 근거 마련.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3	미래형 보건의료기술의 포괄적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보건의료 분야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편익 및 성과 측정을 시도 하고, 국민 건강 등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형 개발.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번호	과제명	개요
		관련 국정과제
4	과로로 인한 한국 사회 질병 부담과 대응 방안	-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파악하고, 과로로 인한 발병과 사망 시 산재보험 등의 현 사회제도가 안전망으로서의 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향 제시.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5	재원 조달 방안별 복지지출의 파급 효과 비교 분석	- 동태적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복지지출의 재원 조달 문제와 그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6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제도 활용 방안 연구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층에 대해 노후소득 보장 및 주거 안정과 복지 등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의 활용 방안과 개선안 제안.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7	질병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활동 및 경제 상태 변화와 정책과제	- 질병 발생이 개인과 가구의 경제활동 및 소득 상실에 미치는 위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위험에 보다 취약한 집단을 파악하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 발생 및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제시.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8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의 구성과 효과	- 현금과 현물의 이론적 의미 탐색, 해외 주요국 정책 혼합 상황에 대한 이해 및 비교, 해외 주요국의 현금과 현물의 효과 파악.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9	지방화의 진전과 복지 격차: 전달체계 여건을 중심으로	-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복지정책의 의미를 분석하고, 지역 간 복지 환경 격차를 비교 분석하며, 격차 심화 지역을 대상으로 복지 자원 조직화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10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 전달체계 연구(II): 지역 기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 부문 거버넌스의 특성과 실효성, 영향력, 파급효과에 주목하여 실태와 문제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간의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 점검.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2018년도
사업 개요

번호	과제명	개요	
		관련 국정과제	
11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규모의 경제 효과를 중심으로	-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과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의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12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방안 연구	- 부처별 사회서비스사업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심층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13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통한 고용 격차 해소 연구: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중심으로	-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입법론적 개선 방안을 도출함과 동시에 고용 영역에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 지원제도 구축 방안 제시.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14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 부담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연구	- 중·장년층 가족의 균형 있는 가족부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15	치매 노인과 돌봄 제공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방안 모색	- 치매 노인과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정책을 진단·분석·평가하고, 실효성 높은 맞춤형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치매국가책임제라는 국정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공.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16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 기법 연구: 보건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 보건사회 분야에서의 이상탐지 기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및 활용 현황 파악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연구를 통해 정책 대상 발굴이나 예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48 미래 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17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지출 연구(1):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국제 작성 기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간 비교 지표를 제공하는 국내외 첫 연구로 지역복지 정책 설계 등에 학술적 근거 기반 제공.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번호	과제명	개요	
		관련 국정과제	
18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데이터 주도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	-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가 초래할 미래 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복지정책의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주도 정책 변화 방향 및 대안 모색.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19	지역별 의료비 정보의 생산과 활용 강화 방안 연구	- 의료비 정보를 지역 단위에서 산출함으로써 다른 지역 통계들과 연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의료비 통계의 정책적 활용성 강화.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20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는 복지시설 평가 방안 모색.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일반/협동연구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관련 국정과제	
1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 국정과제 및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 부응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전반에 걸친 정책 개발 내지 개선, 모니터링, 평가·환류 등에 대한 과학적·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와 기반 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 - 출산율 제고 및 인구 자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정책 개선 관련 연구 강화. - 인구고령화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강화.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의 핵심 과제 등에 대한 국제 비교 및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 비교 공동 연구 지속.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48 미래 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2018년도
사업 개요

번호	과제명	개요
		관련 국정과제
2	사회정신건강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독자 및 보호자, 중독 회복지원 서비스 제공자가 가지는 사회연결망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중독 회복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 도출. - 현행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충 방안 마련.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3	건강영향평가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정책의 건강영향평가. - 참여형 건강영향평가기법의 적용 및 활용 방안. - 빅데이터를 이용한 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 및 적응 대책 연구.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4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방안 연구: 사회복지의 역사적·철학적 기반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국가 일반과 특히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적 흐름과 변화 그리고 철학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한국 복지국가 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과 시사점 제공.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5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V: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 사회통합포럼 운영. - 사회통합의 실태와 요인을 밝히고, 효과적으로 사회통합을 도모 하는 방안을 도출.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6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 연구: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 빈곤 및 고용 실태 비교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 빈곤 실태 및 고용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국과 잠재적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인 아시아 중저소득 국가들의 노인 대상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비교 정책 연구의 기반 구축.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7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 관리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기반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및 제공, 사회보장통계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와 더불어 공간정보 연계 및 시각화, 검색 및 추천 시스템 관련 연구를 통한 서비스 개발과 고도화 추진.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번호	과제명	개요
		관련 국정과제
8	사회보장제도 수급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주거복지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 모니터링 모형을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주요 주거지원(주거복지) 제도에 적용함으로써 정책 수행 전체 단계에 대한 실증적 개선 방안 제안.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46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9	2018 한국 의료 질 보고서: 한국 의료시스템의 성과 평가와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의료시스템의 질 향상 성과에 대한 연례 보고. - 가치 확대의 정량화를 통한 의료시스템의 개혁 성과 평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10	국민의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불평등 현황에 대한 분석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11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 아동기 학대·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정책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기 학대 및 폭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동들이 경험하는 아동기의 부정적인 삶의 경험의 중복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학대 및 폭력의 가해와 피해의 역동성을 분석함으로써 아동기 학대 및 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책 마련.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48 미래 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12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대비 남북한 보건의료에 대한 합리적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효율성 제고. -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각종 보건의료 비용에 대한 추계 모형을 통해 통일과 관련한 정책 설계에 하나의 기준점 제시.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13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가족보건, 가족복지 관련 각종 기본 지표(2018년도)를 생산하고 지표의 시계열 변화 분석.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48 미래 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14	건강노화를 위한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사회에서 건강노화를 증진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제시.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번호	과제명	개요
		관련 국정과제
15	한국복지패널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우리나라 가구·개인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와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 1차 조사 시작 이후 2018년 1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 - 이를 토대로 전문가 및 정책 관련 담당자들을 비롯해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공개하고, 다양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대회보고서 작성을 통해 패널 조사 자료의 학술적·정책적 활용도 제고. <p>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48 미래 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p>
16	한국의료패널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가구 단위 의료비 지출 규모 파악. - 의료이용 결정 요인과 의료비 재원 파악 및 관련 지표 산출. - 의료이용 관련 보건정책과 사업 평가 등 지원. - 궁극적으로는 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건의료체계 성과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p>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p>
17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 보호 인프라 개선	- 2017년 이전에 도입·구축되어 운영 중인 시스템들과 2017년 도입 자원들에 대한 지속적·안정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

■ 연구 관련 사업

번호	사업명	개요
1	해외사회보장제도 정보서비스	- 다양한 해외 보건복지정책의 현황 및 주요 개혁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등을 분석하여 국내에 소개. - 이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과 제도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 축적.
2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현장성 강화를 통한 근거 중심 정책 마련에 기여. -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기초통계자료 구축 및 다양한 의견 지속 수렴.
3	빈곤통계연보	- 2006년부터 시작된 선행연구에 2017년도 통계를 추가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조응하는 통계자료를 제시.
4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 소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주요 보건복지정책 수요를 예측.
5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정책 및 사회정책 관련 데이터 구축. - 아시아 국가의 시의성 있는 최신 연구 성과 공유.

■ 연구 지원 사업

번호	사업명	개요
1	연구 기획	-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맞는 연구사업의 전략적 기획·조정,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연구 성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사업의 관리 및 평가, 연구 결과물의 신속한 대외 홍보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가치와 책임성 강화.
2	출판물 발간 및 홍보	- 연구 결과물의 생산 및 배포 등을 통한 연구 성과의 확산. - 연구 성과물 출판을 통한 기관 홍보 및 대국민 보건복지정보 서비스 제공. - 연구 결과의 대내외 개방을 위해 다양한 형식의 정책 홍보 수행.
3	전산 운영	- 레거시 시스템 및 업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 급변하는 업무 환경에서의 업무 효율화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수준 제고. - 연구원에서 생산된 지식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실시를 위한 IT 관련 인프라 확보.
4	학술정보 운영	- 보건복지 관련 국내외 학술자료·정책정보 수집과 관련 DB 구축을 통해 연구 사업 지원 및 대국민 정책정보 서비스 실시. - 기록물의 적기 이관 및 보존 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한 평가, 폐기 등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5	사회조사 운영	- 사회조사 품질 향상. - 사회조사 인프라 개선 로드맵 현실화. - 조사통계업무 선진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06

부록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ANNUAL REPORT

KiHASA

-
- 01. 2017년도 수행 연구사업 현황
 - 02. 도서관
 - 03. KIHASA 웹사이트
 - 04. 간행물 회원제 안내
-

2017년도
수행 연구사업
현황

■ 기본 연구

번호	연구 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 책임자
1	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II): 시범적용 및 활용방안	2017. 1. 1.~2017. 12. 31.	김남순
2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질 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 환자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2017. 2. 1.~2017. 11. 30.	박은자
3	지역사회 기반 노인 친화적 통합의료서비스 제공모형: 재활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2017. 2. 1.~2017. 11. 30.	서제희
4	시스템 접근을 통한 보건의료재정 분석 및 전망	2017. 1. 1.~2017. 12. 31.	정영호
5	보건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근거 생산과 정책 개발	2017. 2. 1.~2017. 11. 30.	채수미
6	제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I)	2017. 1. 1.~2017. 12. 31.	신영석
7	정년 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17. 1. 1.~2017. 10. 31.	남상호
8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II)	2017. 1. 1.~2017. 12. 31.	신화연
9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I)	2017. 2. 1.~2017. 11. 30.	윤석명
10	기본소득 기반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2017. 1. 1.~2017. 10. 31.	김중훈
11	소득보장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2017. 1. 1.~2017. 10. 31.	강신욱
12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시간 사용과 정책과제	2017. 1. 1.~2017. 12. 31.	이현주
13	근로빈곤층의 부채에 대한 질적 연구: 부채 발생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2017. 1. 1.~2017. 10. 31.	노대명
14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2017. 2. 1.~2017. 11. 30.	김문길
15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Coordination Mechanism) 개선 방안 연구	2017. 2. 1.~2017. 11. 30.	정홍원
16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 전달체계 연구(I):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2017. 2. 1.~2017. 11. 30.	강혜규
17	협동조합을 통한 청년고용 창출모형 연구	2017. 1. 1.~2017. 10. 31.	이철선
18	발달장애인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2017. 2. 1.~2017. 11. 30.	황주희
19	장애인의 건강한 삶 정착을 위한 건강권 증진 방안 연구	2017. 2. 1.~2017. 11. 30.	김성희
20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2017. 2. 1.~2017. 11. 30.	조성호
21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2017. 2. 1.~2017. 11. 30.	우해봉
22	복지재정·성과관리 체계 연구	2017. 1. 1.~2017. 10. 31.	고경환
23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사회보장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형 연구	2017. 1. 1.~2017. 12. 31.	오미애
24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연구	2017. 2. 1.~2017. 11. 30.	이기호
25	사회보장제도 성과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2017. 1. 1.~2017. 12. 31.	오윤섭

■ 협동연구

번호	연구 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 책임자
1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건강 현황과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모형	2017. 1. 1.~2017. 12. 31.	김남순

■ 수시연구

번호	연구 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 책임자
1	Analyzing the Causal Impact of College Degree on Fertility and Potential Mechanisms: Evidence from Regression Kink Designs	2017. 2. 15.~2017. 5. 31.	손호성
2	인구(저출산) 영향평가체계 도입 및 평가방법론에 관한 연구	2017. 6. 1.~2017. 10. 31.	김중훈
3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 건강 수준과 건강 노화를 위한 보건 의료정책 비교 연구	2017. 7. 17.~2017. 12. 15.	전진아
4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2017. 7. 18.~2017. 12. 31.	김미곤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2017. 9. 1.~2017. 12. 31.	여유진
6	포용적 복지의 철학과 정책 방향	2017. 9. 1.~2017. 12. 31.	김미곤
7	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합 지표 개발 연구	2017. 9. 13.~2018. 1. 31.	임성은
8	북한 영유아 및 아동지원 사업의 네트워크 구조와 발전방안-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2017. 12. 1.~2018. 3. 31.	조성은
9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 지자체의 제4기 계획 수립-실행 지원 연구	2017. 12. 1.~2018. 3. 31.	강혜규
10	고령친화산업 수요 전망 및 인력 수요 추계 연구	2017. 8. 1.~2018. 3. 31.	김대중
11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정책 기능 및 재정제도 재정립 방안	2017. 8. 1.~2018. 3. 31.	박인화
12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의 상호작용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2017. 10. 1.~2018. 4. 30.	박아연

■ 일반사업

번호	연구 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 책임자
1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2017. 1. 1.~2017. 12. 31.	김중훈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2017. 1. 1.~2017. 12. 31.	박종서

2017년도
수행 연구사업
현황

번호	연구 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 책임자
3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2017. 1. 1.~2017. 12. 31.	이상림
4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과제	2017. 1. 1.~2017. 12. 31.	박중서
5	산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2017. 1. 1.~2017. 12. 31.	이소영
6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2017. 1. 1.~2017. 12. 31.	김은정
7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2017. 1. 1.~2017. 12. 31.	변수정
8	배우자 간 사회·경제적 격차 변화와 저출산 대응 방안	2017. 1. 1.~2017. 12. 31.	신윤정
9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17. 1. 1.~2017. 12. 31.	고제이
1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 연구	2017. 1. 1.~2017. 12. 31.	김중훈
11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III)	2017. 1. 1.~2017. 12. 31.	원종욱
12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2017. 1. 1.~2017. 12. 31.	황남희
13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2017. 1. 1.~2017. 12. 31.	정경희
14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방안	2017. 1. 1.~2017. 12. 31.	이윤경
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2017. 1. 1.~2017. 12. 31.	김중훈
16	인구포럼 운영	2017. 1. 1.~2017. 12. 31.	김중훈
17	국제심포지움	2017. 1. 1.~2017. 12. 31.	김중훈
18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현황과 개선 과제	2017. 1. 1.~2017. 12. 31.	전진아
19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방안	2017. 1. 1.~2017. 12. 31.	이상영
20	미래예측방법의 적용과 활용 방안	2017. 1. 1.~2017. 12. 31.	최은진
21	건강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모형 적용 연구	2017. 1. 1.~2017. 12. 31.	김정선
22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복지환경의 변화와 대안적 복지제도 연구	2017. 1. 1.~2017. 12. 31.	여유진
23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	2017. 1. 1.~2017. 12. 31.	정해식
24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2017. 1. 1.~2017. 12. 31.	노대명
25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 관리 및 운영	2017. 1. 1.~2017. 12. 31.	최현수
26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2017. 1. 1.~2017. 12. 31.	임완섭
27	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II)	2017. 1. 1.~2017. 12. 31.	강희정
28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2017. 1. 1.~2017. 12. 31.	김동진
29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	2017. 1. 1.~2017. 12. 31.	류정희

번호	연구 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 책임자
30	통일 대비 보건복지제도 연구	2017. 1. 1.~2017. 12. 31.	이철수
31	2017년 한국복지패널 구축 및 운영	2017. 1. 1.~2017. 12. 31.	김태완
32	한국복지패널의 진단과 향후 개선 과제	2017. 1. 1.~2017. 12. 31.	이현주
33	2017년 한국의료패널 구축 및 운영	2017. 1. 1.~2017. 12. 31.	김남순
34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 인프라 개선	2017. 1. 1.~2017. 12. 31.	이연희

■ 연구 관련 사업

번호	연구 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 책임자
1	해외사회보장제도 정보서비스	2017. 1. 1.~2017. 12. 31.	강유구
3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2017. 1. 1.~2017. 12. 31.	정은희
4	2017년 빈곤통계연보	2017. 1. 1.~2017. 12. 31.	여유진
5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2017. 1. 1.~2017. 12. 31.	오미애

■ 정부 수탁 연구

번호	연구 과제명	계약 기간	연구 책임자
1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2016. 7. 11.~2017. 6. 7.	이태진
2	군 의무 사업군 심층 평가	2016. 7. 13.~2017. 9. 30.	신현웅
3	2016년도 노인복지 민간단체지원사업 평가	2016. 7. 25.~2017. 2. 28.	김경래
4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2016. 9. 21.~2017. 7. 31.	김태완
5	복지육구 및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맞춤형 복지정책 발전방향 연구	2016. 11. 8.~2017. 3. 7.	강신욱
6	저출산 대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16. 11. 14.~2017. 5. 12.	김상호
7	확인조사 경제성분석 및 차량가액 산정기준 확보방안 수립연구	2016. 11. 17.~2017. 7. 15.	최현수
8	제1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연구	2016. 11. 22.~2017. 7. 31.	여유진
9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사회복지정책 방향 (출산지원, 복지, 여성을 중심으로)	2016. 11. 30.~2017. 4. 29.	원종욱
10	결혼, 출산 및 양육친화적 사회 구축 방안	2016. 12. 21.~2017. 4. 20.	이삼식

2017년도
수행 연구사업
현황

번호	연구 과제명	계약 기간	연구 책임자
11	다빈도 한약재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2차년도)	2017. 1. 1.~2017. 11. 30.	김정선
12	(민간경상)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준비TF) 운영지원	2017. 1. 1.~2017. 12. 31.	김종훈
13	2017 WHO 주요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2017. 1. 23.~2017. 11. 30.	전진아
14	기구 및 용기-포장 원료물질의 사용 용도별 분류체계 구축 및 분석법 등 조사 연구	2017. 2. 1.~2017. 11. 30.	김정선
15	제약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아세안 국가 의약품 관련 특허제도 연구	2017. 2. 1.~2017. 7. 31.	김대중
16	2016년도 국민보건계정	2017. 1. 20.~2017. 11. 30.	신정우
17	2017년도 OECD 등 국제기구 통계생산 및 관리	2017. 2. 2.~2017. 12. 8.	고경환
18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방안	2017. 2. 3.~2017. 9. 1.	강지원 오윤섭
19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원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안	2017. 2. 6.~2017. 6. 5.	정홍원
20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2017. 2. 16.~2017. 6. 15.	김미곤
21	사회보장제도 「생계지원」분야 기본평가	2017. 2. 17.~2017. 11. 30.	강신욱
22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2017. 1. 2.~2017. 12. 31.	강혜규
23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2017. 3. 6.~2017. 9. 30.	노대명
24	맞춤형 노인돌봄정책 수립 연구 용역	2017. 3. 10.~2017. 12. 20.	황남희
25	복지환경 변화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및 인프라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	2017. 3. 9.~2017. 6. 7.	원종욱
26	2017년 OECD 보건복지 이슈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연구	2017. 3. 24.~2017. 12. 15.	강희정
27	보건복지부문 국제통계의 정책적 함의 연구	2017. 3. 22.~2017. 11. 30.	고경환
28	사회보장제도 생활지원 기본 평가	2017. 3. 27.~2017. 11. 21.	황주희
29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 수립연구	2017. 4. 12.~2017. 11. 30.	이윤경
30	17년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조사 및 사회보장예산 실태분석	2017. 4. 13.~2017. 11. 9.	정홍원
31	모유은행 설립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연구	2017. 4. 18.~2017. 11. 30.	이소영
32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2018-2022)	2017. 4. 14.~2017. 12. 8.	김성희
33	바우처 제도 효과성 분석 핵심 평가	2017. 4. 14.~2017. 12. 8.	오윤섭
34	의료급여 제도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7. 4. 17.~2017. 11. 30.	신현웅
35	사회보장기본계획의 16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7. 4. 17.~2017. 10. 13.	오윤섭
36	통합재정사업평가 업무개선 및 자체평가 체계화 방안 연구	2017. 4. 19.~2017. 8. 16.	오윤섭
37	2016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연구	2017. 4. 18.~2017. 12. 13.	박중서

번호	연구 과제명	계약 기간	연구 책임자
38	간호인력 수급대책 마련 연구	2017. 4. 19.~2017. 11. 16.	신영석
39	2017년 사회보장 재정추계 연구	2017. 4. 20.~2017. 11. 30.	신화연
40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연구	2017. 4. 19.~2017. 11. 30.	정경희
41	2017년 환자조사	2017. 5. 4.~2017. 12. 8.	신정우
42	지자체 복지인력 현황분석 및 수급방안	2017. 4. 21.~2017. 8. 31.	강혜규
43	2017년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2017. 4. 24.~2017. 12. 5.	이철선
44	제1차(2018~2022)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	2017. 4. 21.~2017. 11. 30.	김남순
45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분류체계 마련 및 산출	2017. 4. 25.~2017. 10. 31.	고경환
46	맞춤형 서비스 종합판정기준 검증 및 보완 연구	2017. 4. 28.~2017. 11. 30.	황주희
47	의-한의이원화체계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2017. 4. 28.~2017. 11. 30.	윤강재
48	사회보장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II)	2017. 5. 11.~2017. 11. 30.	신화연
49	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2017. 5. 11.~2017. 12. 11.	정해식
50	헤이그 국제아동양육협약 비준에 따른 입양 지원 체계 개편 방안	2017. 5. 10.~2017. 10. 30.	신윤정
51	기후변화에 따라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의약품 및 대응체계 조사 연구	2017. 5. 15.~2017. 11. 30.	이수형
52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구축 지원방안 연구	2017. 5. 15.~2017. 11. 30.	박실비아
53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정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2017. 5. 29.~2017. 11. 30.	함영진
54	나눔실태 2016	2017. 5. 26.~2017. 10. 31.	고경환
55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7. 5. 26.~2017. 9. 22.	김상호
56	기본재산액공제 제도 개선방안연구	2017. 5. 26.~2017. 11. 21.	최현수
5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2017. 5. 24.~2017. 11. 30.	김성희
58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2017. 5. 26.~2017. 11. 21.	여유진
59	2016년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연구	2017. 5. 25.~2017. 12. 20.	오윤섭
60	2016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연구	2017. 5. 30.~2017. 11. 30.	황나미
61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 방안	2017. 5. 31.~2017. 11. 30.	최현수
62	(민간경상)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심층평가 및 보완과제 검토 지원사업	2017. 5. 26.~2017. 12. 31.	김종훈
63	(보안)보육체계 통합방안 연구	2017. 5. 22.~2017. 11. 30.	이철수
64	(보안)사회보장제도 통합을 위한 복지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2017. 5. 22.~2017. 11. 30.	송철중
65	(보안)지역복지 통합모델 연구	2017. 5. 22.~2017. 11. 30.	이철수

2017년도
수행 연구사업
현황

번호	연구 과제명	계약 기간	연구 책임자
66	2017년 사회보장통계 구축 및 관리	2017. 6. 5.~2017. 12. 8.	최현수
67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2017. 6. 12.~2017. 10. 31.	이소영
6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2017. 6. 13.~2017. 11. 10.	이태진
69	2017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2017. 6. 23.~2017. 12. 20.	함영진
70	세종시민 복지기준 이행평가 및 복지실태 분석용역	2017. 7. 3.~2017. 11. 3.	김문길
71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모델 개선에 따른 수거모형 개발연구	2017. 7. 11.~2017. 11. 30.	신현웅
72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작성방법 마련 및 산출	2017. 7. 13.~2017. 12. 1.	고경환
73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2017. 7. 13.~2017. 11. 30.	노대명
74	2017년 보건복지 관련 산업 일자리 통계 조사 및 정책 활용방안 연구	2017. 7. 13.~2017. 11. 30.	오영호
75	2017년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현황 평가 및 체감도조사	2017. 7. 21.~2017. 11. 30.	정영호
76	미래 사회정책 비전사회보장2040 기초 연구	2017. 7. 24.~2017. 11. 20.	김미곤
77	행정자료를 활용한 빈곤아동통계 개발방안 연구 사업	2017. 7. 27.~2017. 12. 22.	류정희
78	중앙 및 지자체 주요 사회보장사업 협의 및 개선과제 검토	2017. 8. 2.~2017. 12. 8.	정홍원
79	2017년 사회보장통계 DB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 연구	2017. 8. 2.~2017. 11. 30.	정영철
80	민관정보공유시스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연구	2017. 8. 3.~2017. 12. 8.	함영진
81	사이버 행정복지센터 운영 관리모델 개발 연구	2017. 8. 3.~2017. 12. 8.	함영진
82	국내외 보훈보상 유사제도 보상금 지급수준에 대한 비교 연구 용역	2017. 8. 14.~2017. 12. 15.	임완섭
83	아동수당 도입방안 및 효과성 분석	2017. 8. 11.~2017. 11. 30.	고제이
84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2017. 8. 29.~2017. 12. 15.	김유경
85	진료정보교류를 통한 중증질환자 진료협진 모델개발	2017. 9. 7.~2017. 12. 31.	신현웅
86	차상위계층지원제도 연계강화 및 통합지원 방안 연구	2017. 9. 7.~2017. 12. 5.	이현주
87	보육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2017. 9. 19.~2017. 12. 8.	신윤정
88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과 정책방향	2017. 9. 29.~2017. 12. 12.	김미곤
89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 개편방안 연구(1)	2017. 9. 28.~2017. 12. 5.	정해식
90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 개편방안 연구(2)	2017. 9. 27.~2017. 12. 26.	정해식
91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2017. 9. 27.~2017. 11. 30.	강혜규
92	기준 중위소득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2017. 9. 28.~2017. 11. 30.	김태완
93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2017. 10. 17.~2017. 12. 22.	임완섭

번호	연구 과제명	계약 기간	연구 책임자
94	의료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 방안 연구	2017. 10. 20.~2017. 11. 30.	황도경
95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사업 후속연구	2017. 5. 11.~2018. 3. 15.	최현수 오미애
96	제2차(2018~20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지원 연구	2017. 6. 14.~2018. 2. 13.	김남순
9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년 모니터링	2017. 6. 13.~2018. 1. 22.	김은정
9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확대 연구	2017. 7. 7.~2018. 3. 30.	최현수
99	(영암군)청소년-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모형 구축 연구 용역	2017. 7. 28.~2018. 1. 23.	김유경
100	(민간경상)2017년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	2017. 7. 17.~2018. 2. 28.	김경래
101	(부산사상구)청소년-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모형 구축 연구 용역	2017. 8. 11.~2018. 1. 9.	김유경
102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백신의 안정적 공급체계 및 합리적 가격 산정근거 제시 연구	2017. 9. 4.~2018. 5. 3.	신현웅 채수미
103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평가(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	2017. 10. 20.~2018. 6. 19.	채수미
104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산정방안 연구	2017. 11. 27.~2018. 5. 26.	서제희
105	사회보장제도의 소득 서비스 보장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	2017. 11. 30.~2018. 8. 27.	이현주
106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2017. 12. 4.~2018. 6. 1.	황도경
107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연구	2017. 12. 6.~2018. 3. 5.	김종훈
108	사회복지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7. 12. 8.~2018. 8. 6.	고경환
109	기초에너지 보장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7. 12. 15.~2018. 7. 31.	이현주

■ 민간 수탁 연구

번호	연구 과제명	계약 기간	연구 책임자
1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증장기 모형 개발 연구용역	2016. 9. 19.~2017. 3. 19.	강희정
2	(협동)고령화 시대의 노인의 역할 모색	2016. 10. 11.~2017. 8. 31.	정경희
3	(협동)통일의 인구·보건·복지 통합 쟁점과 과제	2016. 10. 18.~2017. 9. 30.	이철수
4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	2016. 10. 31.~2017. 4. 30.	신현웅
5	통일이후 남한이주 북한주민의 공공부조제도	2016. 10. 10.~2017. 6. 9.	이철수

2017년도
수행 연구사업
현황

번호	연구 과제명	계약 기간	연구 책임자
6	2016년 간호인력취업교육사업 사업효과성 평가	2016. 12. 1.~2017. 2. 28.	오영호
7	SHA2011에 기반을 둔 지역보건계정의 구축 및 활용	2016. 11. 30.~2017. 9. 29.	신정우
8	점진적 기계학습 기반 자가진화 에이전트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사회변화 예측분석 기술 개발	2017. 1. 1.~2017. 12. 31.	오미애
9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연구	2017. 2. 27.~2017. 11. 30.	변용찬
10	2017년 간호인력취업교육사업 사업효과성 평가	2017. 3. 1.~2017. 12. 31.	오영호
11	(협동)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 경제·사회 발전	2017. 3. 31.~2017. 11. 15.	김중훈
12	(협동)가정내 폭력범죄 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서비스 체계연구	2017. 4. 5.~2017. 9. 30.	김미숙
13	제5차 사학연금 가입자 수 및 생명표 작성	2017. 5. 1.~2017. 10. 31.	우해봉
14	직업안정성과 삶의 만족도	2017. 4. 18.~2017. 9. 30.	손호성
15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	2017. 5. 26.~2017. 11. 23.	강희정
16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원사업-보건복지III분야	2017. 4. 17.~2017. 11. 30.	강신욱
17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의 과제	2017. 5. 26.~2017. 10. 31.	이현주
18	고령친화형 특수용도 식품의 제도적 시스템 구축 및 경제/사회적 지원 방안(4차년)	2017. 1. 1.~2017. 12. 31.	김정선
19	사회통합 실태의 도농 간 비교 분석	2017. 6. 1.~2017. 8. 31.	김태완
20	보건산업 전문인력 현황파악 및 수요전망	2017. 6. 15.~2017. 12. 12.	김대중
21	보건의료기관 ICT활용 협진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내실화 방안	2017. 6. 19.~2017. 12. 8.	이상영
22	(건강보험공단)한국의료패널 구축 및 운영	2017. 1. 1.~2017. 12. 31.	김남순
23	여성가족정책 공공데이터의 활용가능성과 시범분석	2017. 6. 15.~2017. 10. 31.	오미애
24	예술인 복지사업 업무처리 절차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2017. 6. 28.~2017. 9. 27.	김문길
2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중장기 미래 발전전략 연구	2017. 8. 8.~2017. 12. 29.	신현웅
2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 농어촌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방안	2017. 8. 11.~2017. 12. 25.	김동진
27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 메타평가 연구: 보건사회분야	2017. 5. 11.~2017. 11. 10.	오윤섭
28	의원급 포괄수가 원가분석방법론 연구	2017. 9. 1.~2017. 12. 15.	신현웅
29	지역연금개혁에 따른 연금제도 개선방안 검토 공동연구	2017. 9. 7.~2017. 11. 28.	윤석명
30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발전 기반 조성 제도적 지원 방안 도출	2017. 9. 7.~2017. 11. 30.	김대중
31	2017 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	2017. 9. 11.~2017. 12. 11.	강은나

번호	연구 과제명	계약 기간	연구 책임자
32	(1차년도)중고령자에서의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요인 평가 및 예측 모형 개발(이관)	2017. 9. 4.~2017. 10. 31.	김수진
33	(4차년도)복지연계 근린재생 기법 개발	2017. 2. 1.~2018. 1. 31.	강혜규
34	추나요법 급여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	2017. 5. 31.~2018. 3. 30.	황도경
35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용역	2017. 9. 7.~2018. 5. 7.	신영석
36	건강보험이 고용 및 산업에 미친 영향 연구	2017. 9. 20.~2018. 3. 19.	신영석
37	중소병원 간호인력 실태조사	2017. 9. 29.~2018. 3. 28.	오영호
38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2017. 9. 29.~2018. 3. 31.	강신욱
39	(2차년도)중고령자에서의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요인 평가 및 예측 모형 개발	2017. 11. 1.~2018. 10. 31.	김수진
4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 평가 및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방안	2017. 11. 17.~2018. 3. 19.	신현웅
41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2017. 11. 27.~2018. 2. 20.	김문길
42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 배경 아동의 발생·성장 환경 분석	2017. 11. 29.~2018. 9. 28.	신윤정
43	사회적 기본권 분야 기초연구	2017. 12. 11.~2018. 2. 28.	오윤섭
44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와 미래 사회보장의 과제	2017. 12. 16.~2018. 8. 15.	이현주
45	과부담의료비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7. 12. 20.~2018. 3. 19.	최현수
46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성과측정 및 효과분석 연구	2017. 12. 27.~2018. 2. 28.	김문길

■ 기타 간행물

• Policy Report

보고서명	연구 책임자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ocial Cohesion	정해식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for the Elderly (LTCI) - Performance Evalu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선우덕
Analysis of the Pregnancy and Childbirth-Related Medical Expense Subsidization Program in South Korea	이소영
Risks and Socioeconomic Costs of Alcohol-Attributable Illnesses	정영호
The Consumption Patterns of Low-Income Household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이현주
Spatial-Data-Based Analysis of Adequate Supply and Demand for Childcare Service Infrastructure	최현수

2017년도
수행 연구사업
현황

보고서명	연구 책임자
The Lifetime Cost of Dementia: Prevention and Management	고속자
Risks and Protective Factors of Abuse and Violence across the Lifespan and Policy Responses	류정희
Evaluation, Policy Issues and Strategies Regarding Welfare Policies for Older Persons	정경희
Efforts & Outcomes of the Welfare State – Welfare Spending, Redistribution, and Quality of Society	여유진
Means Tests in the South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강신욱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Nursing and Care Service and the Improvement of the Compensation System	신현웅

• 정책자료

보고서명	연구 책임자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정은희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2017	오미애
2017년 빈곤통계연보	여유진

■ 박사급 연구인력(2018년 7월 2일 기준) ※비정규직 제외

직위	성명	주요 연구 분야
부원장	정경희	노인복지, 가족복지, 고령정책, 장기요양
연구기획조정실장	박세경	사회서비스 정책, 아동복지, 가족정책
미래전략연구실장	노대명	빈곤정책, 고용복지연계, 사회적 경제
보건정책연구실장	신현웅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건정책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강신욱	빈곤정책, 소득분배, 사회통합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	강혜규	복지전달체계, 복지행정, 사회서비스정책
인구정책연구실장	김종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적연금, 사회보험 재정모형 및 계량평가
정보통계연구실장	고경환	복지재정, 복지경영, OECD SOCX 추계
포용복지연구단장	김태완	빈곤, 사회정책(공공부조, 농어촌복지, 예술인복지)

직위	성명	주요 연구 분야
선임연구위원	김남순	보건정책, 근거중심 보건의료, 의료의 질, 기후변화와 건강
	김미곤	공공부조, 빈곤, 소득분배, 소득보장
	신영석	건강보험, 의료급여, 사회재정, 기초보장
	원종욱	국민연금체계, 국민연금기금지배구조관리
	이상영	보건정책, 보건경제, 건강증진, 정신건강
	정영호	보건경제, 건강증진, 의료비 분석
연구위원	강은나	사회복지정책, 지역사회복지, 노인복지, 장기요양
	강희정	의료정책, 의료의 질
	고속자	보건경제, 보건정책
	고제이	사회예산분석, 소득분배, 세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링
	김대중	보건경제, 보건산업 규제 및 산업조직, 보건정책
	김동진	건강증진, 건강형평성, 건강영향평가
	김문길	빈곤, 불평등, 고령화, 사회보험
	김성희	장애인복지, 직업재활, 노인장애인지역
	김유경	다문화가족, 미혼모·한부모 정책, 입양정책, 시설평가
	김정선	식품정책, 식품안전, 건강영향평가
	김현경	근로빈곤, 소득분배
	남상호	소득 및 자산분포, CGE 모형, 경기변동
	류정희	아동빈곤, 아동복지정책, 아시아사회복지
	박실비아	의약품정책, 의약품산업, 보건정책, 의료보장
	박은자	사회역학, 약물역학
	박종서	저출산, 여성노동, 일가족양립, 가족사회학
	변수정	가족복지, 다문화, 사회복지정책
	신윤정	저출산, 가족, 여성, 아동정책
	신정우	보건계정, 보건금융, 보건정책
	신화연	공적연금 재정평가, 공적연금정책, 사회지출의 장기프로젝션,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여유진	공공부조, 소득 재분배, 교육 불평등, 빈곤	
오미애	빅데이터, 데이터 연계, 사회정책통계	
오영호	보건정책, 의료인력 수급, 의료자원, 병원정책	
오영희	노인복지, 인구정책	

2017년도
수행 연구사업
현황

직위	성명	주요 연구 분야
연구위원	오윤섭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평가, 보건경제
	우해봉	인구분석, 소득보장
	윤강재	보건의료정책, 한의약정책, 공공의료
	윤석명	연금, 노후소득보장, 공공재정
	이상림	인구학 일반, 저출산, 고령화, 공중보건, 다문화 및 국제이동
	이소영	사회복지정책, 모자보건, 건강형평성
	이수형	공간보건지리학, 기후변화와 건강영향, 건강형평성, 일차의료
	이윤경	노인복지, 사회복지정책, 장기요양
	이철선	고용복지연계모델,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 산업
	이태진	주거복지, 노숙인, 자산형성, 공공부조 모니터링
	이현주	빈곤, 복지행정, 복지전달체계, 사회정책, 지역사회복지
	전진아	정신보건, 여성건강, 건강격차
	정영철	보건복지정보화 전략수립, 보건복지 개인정보 보호
	정해식	복지정책, 사회통합, 소득보장, 연금제도
	정홍원	소득보장, 복지행정, 복지전달체계
	조성은	통일사회보장, 빈곤
	최은진	담배안전 관리, 건강영향평가, 건강증진, 보건교육
	최현수	사회복지정책, 빈곤&소득보장, 조세지원, 복지전달체계, 사회보장빅데이터
	함영진	복지전달체계, 복지정책분석, 복지정보화
	황남희	세대 간 형평성, 노인복지, 노인여가
부연구위원	강지원	아동복지, 사회복지정책평가, 복지재정
	김경래	고령사회정책, 노인복지정책
	김수진	건강보험, 보건경제, 보건정책, 건강불평등
	김은정	가계소비, 저출산, 가족정책
	김희성	복지행정, 지방정부, 거버넌스, 사회적 경제
	박아연	메디컬 이미지 분석,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데이터융합
	백혜연	공사적연금, 재정추계, 보험계리적 평가 및 분석
	서제희	보건의료정책, 의료전달체계, 공공보건의료, 건강형평성
	송철중	사회보장, 사회복지, 통일, 사회안전망, 북한경제

직위	성명	주요 연구 분야
부연구위원	안수란	사회서비스 정책, 고용복지정책, 복지전달체계
	여나금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건정책
	오욱찬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소득보장, 장애와 노동, 장애차별
	유재언	고령사회, 가족정책, 돌봄, 성
	이기호	보건복지정보화, 정보기술융합, 빅데이터 분석, 개인정보보호
	이아영	노동경제, 응용미시경제, 사회정책평가
	임성은	아동복지, 입양정책, 보육정책, 가족복지
	임완섭	빈곤, 사회정책, 효과성 평가
	임정미	노인복지, 시설 내 노인학대, 지역포괄케어
	정연	의약품정책, 건강보험, 공공보건의료, 건강형평성
	정은희	아동복지, 빈곤, 기초보장, 근로빈곤
	조성호	노동경제, 인구경제
	채수미	기후변화 적응, 정신건강, 정책 평가, 건강형평성
	황도경	국민건강보험,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 정책
	황주희	장애인복지, 직업재활, 노인장애인정책

도서관



<p>[도서관 방문 이용 시간] 평일: 9:00~18:00 주말 및 공휴일, 개원기념일(7. 1.) 휴관</p>	<p>[이용 범위] 연구원 직원: 열람, 복사, 대출 가능 외부 이용자: 열람, 복사 가능</p>	<p>[이용 문의] 전화: 044-287-8004 팩스: 044-287-8056 이메일: library@kihasa.re.kr</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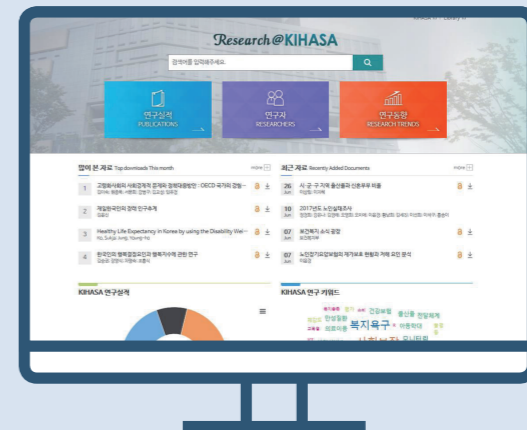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도서관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사회보장, 인구 및 가족계획 등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방대한 양의 학술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보건·복지 전문 도서관입니다.
-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회의자료 등 단행본 5만여 권과 정기간행물 900여 종을 비롯하여 CD-ROM, 전자저널, 학술 DB 등 보건복지 분야의 학술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자도서관은 인터넷 접속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자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연구 성과물을 디지털 아카이빙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 관련 웹사이트



전자도서관 [<http://library.kihasa.re.kr>]

전자도서관을 통해 인쇄 자료와 전자저널 및 전자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복지 분야의 인터넷 정보원 및 정책연구정보 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



Research@KIHASA (<http://repository.kihasa.re.kr>)

Research@KIHASA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모든 연구 성과물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자 페이지를 통해 연구자 정보와 각종 연구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IHASA 웹사이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원에서 발행되는 보고서와 정기간행물 등을 접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홈페이지의 국문 웹진 혹은 영문 뉴스레터 서비스에 가입하면 최신 보건복지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패널 [http://www.koweps.re.kr]

- 한국복지패널은 우리나라 가구와 개인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와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다양한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표본 추출 및 조사 방법에 대한 정보, 설문지와 데이터(SPSS, SAS, STATA),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 보고서, 학술대회 자료집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패널 [http://www.khp.re.kr]

- 한국의료패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 수준 및 배분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여 다양한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표본 추출 및 조사 방법에 대한 정보, 설문지와 데이터, 기초연구보고서, 심층분석보고서 등의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데이터 포털 [http://data.kihasa.re.kr]

-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은 보건복지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구 DB, Data Bank, 해외 자료 등 영역별 특성에 따른 분류를 통해 통계정보와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간정보통계, 인포그래픽스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http://hia.kihasa.re.kr]

- 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은 건강영향평가(HIA: Health Impact Assessment)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학습이나 수행에 필요한 최신의 정보와 지식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더욱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제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 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간행물 담당자(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영문문고(종로점)
399-560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Yes24
Http://www.yes24.com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2018년 7월 발행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재지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문의 044-287-8000

편집·인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

이 책은 사업적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6827-504-3 93330
